

저출산 대응 정책과제  
개발·확산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저출산대책포럼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포럼 사무국

총무	이삼식
실무팀원	신윤정
	박종서
	권지은
	장보현

저출산대책포럼 사무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1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전화: 02-380-8226 팩스: 02-383-2340

홈페이지: <http://lowfertforum.kihasa.re.kr>.

■ 단체회원

학회 (18)	대한산부인과학회	한국간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대한주산의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인구교육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인구학회
민간단체 (2)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인구보건복지협회

■ 포럼위원

강순범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유계숙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김두섭	한국인구학회장	이 국	대한주산의학회장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철	대한신생아학회장
김순미	한국가정관리학회장	이광자	한국간호과학회장
김의숙	방송통신대 가정학과	이동환	순천향대학교 의대 소아청소년과
김원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봉주	한국아동복지학회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련	이화여대 심리학과	이승욱	서울대보건대학원
김태현	한국인구교육학회장	이완정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김태현	한국가족관계학회장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전혜정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도미향	한국가족복지학회장	정민자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
박노옥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	정영금	카톨릭대 생활과학과
박문일	한국모자보건학회장	조남훈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박부진	한국가족학회장	조부경	한국유아교육학회장
박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연계전공학부	조성연	유아교육학회장
박하정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조희금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박현선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진미정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백선희	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부
서 경	연세대 의대 산부인과	최현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장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표갑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서영숙	한국보육지원학회장	한계갑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우남희	한국아동학회장		

## 목 차

저출산대책포럼 창립 의의와 발전 방향 ..... 박하정 · 1

출산수준과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최근 변화 ..... 김두섭 · 5

최근의 출산율 증가 원인과 정책적 함의 ..... 이삼식·최효진 · 31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성 및 신생아 건강문제 ... 박정한·배지숙 · 58

여성의 임금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정호 · 77

저출산 정책 및 사업의 평가와 대안 ..... 김경신 · 107

**The 2008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Singapore's Response to  
Ultra-Low Fertility ..... Paulin Straughan · 129**

## 저출산대책포럼 창립 의의와 발전 방향

박하정\*

인구 변동에 대한 인식이나 수단은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18세기 중상주의시대에는 정치·경제·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규모의 증가를 강조하여,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모순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자,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이라는 책에서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 증가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 증가”를 주장하였다. 18세기 맬서스주의자(Malthusianism)는 결혼 연기나 금욕의 도덕적 억제를 통한 출산기피보다 가난·질병에 기인한 사망과 범죄·전쟁 등을 통한 인간에 의한 제거라는 자연법칙에 의한 인구 억제를 강조하였다.

19세기 초 이래 신맬서스주의(Neo-Malthusianism)는 고출산률-저사망률에 의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피임법에 의한 인구 억제를 주장하였다. 즉, 신맬서스주의는 인간 생존을 위하여 자발적인 출산 억제를 강조하였다. 20세기 초 여성해방론자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보급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가족계획운동으로 발전하였다.

20세기에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전통적 가족유형 변화, 가치관 변화, 보편적 피임법 보급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보건의료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고령화 등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출산율 증가를 지향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망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다가 출산수준마저 급격하게

---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국장

낮아져 인구변천이론상 후기균형상태(post-equilibrium balance)에 진입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 인구대치수준(부부 2명을 자연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자녀수 2.1명을 의미한다)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1세기 초에는 1명에 근접한 세계적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평균수명 상승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향후 인구고령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초저출산현상 지속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미래의 한국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겪을 것이다. 노동 부족이 심화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성장동력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세입기반은 감소하나 사회보장부담은 오히려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결국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구현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삶의 질은 크게 손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현재 또는 미래에 인구 규모나 구조가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 정부는 사회경제적 및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출생, 사망, 결혼, 이동 등 현재의 인구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Eldridge, 1979). 인구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단기간에 생산(reproduction)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세대가 후세대를 재생산하는데 그리고 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생산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한 세대(인구학적으로 2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미래에 직면하게 될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13개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시·도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계의 끊임없는 관심과 함께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기반 제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현상은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사교육비 포함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육아지원인프라 미흡, 일-

가정 양립 곤란, 생식보건 저하,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인구, 가족, 경제, 문화, 사회복지, 보건·의료, 여성정책 등 제 분야에서의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저출산 대응 관련 학계 각각의 독립적인 연구도 중요하나, 복합적인 저출산현상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중요 이슈로서 저출산현상 대응과 관련한 ‘다학제적 공동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여, 학계가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등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저출산대책포럼의 창립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저출산대책포럼은 학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여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다학제적 토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학술적인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출산대책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도출,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등에 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제언하는 학계와 정부 간의 의사소통 통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저출산대책포럼은 저출산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를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출산대책포럼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모임으로 저출산현상과 관련한 학문의 발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학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소명의식을 갖는 저출산대책포럼은 2008년 9월 창립총회를 통해 탄생하였다. 저출산대책포럼은 한국사회 내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술적인 업적이 축적되어 온 기존의 저명한 18개 학회\*들과 저출산 관련 2개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저출산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인 50여명의 포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감안한 폭과 깊이를 겸비한 명실공히 다학제적 접근의 산실로서 외형과 내실 모두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포럼은 2008년 하반기 2차례 포럼을 개최하여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

\* 유아교육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주산의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 4 저출산대책포럼

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포럼은 사회적 공감대를 공고화하여 역할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재적으로 충실성을 그리고 동시에 외연적으로 미래지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모처럼 마련한 저출산현상에 대한 다학제적 공동 토론의 장인 저출산대책포럼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도 저출산 대응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저출산대책포럼을 지역에서 순환 개최하여야겠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저출산대책포럼은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전초적인 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대책 포럼은 저출산대책의 성과가 학계 내부에서만 아니라 정책기관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출산수준과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최근 변화

김두섭<sup>\*\*\*</sup>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

\* 이 발표자료는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5-078-BS0004)의 결과인 김두섭(2007; Kim, 2009)을 재정리하고 자료를 보완한 것임.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1차 저출산대책포럼(2008년 9월 30일)에서 발표.

## I. 머리말

한국 정부는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모색하고 입안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2006-2010년의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도 중간점에 이르렀다(보건복지부, 2006).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은 과거의 출산억제정책에 비해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산장려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도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Gauthier and Hatzius, 1997; Hérán, 2005).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출산장려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출산력 저하의 인과구조와 결정요인, 그리고 특정한 사회경제적 사건이나 환경변화의 효과에 관해서 세밀한 분석과 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의 출산수준 저하가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상승 등 노동시장 불안정에 기인하는바 크다면,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은 청년인구의 고용증대를 통해 이들이 빨리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유인하는데 우선적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구체적인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해당 집단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출산력 변화의 추세와 그 인과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다.

한국의 인구증가와 출산력의 저하에 관해서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초저출산 수준으로의 저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출산력 저하의 본질과 이론적 근거를 규명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Eun, 2003; Jun, 2004; Kim, 2005; 김두섭, 2005, 2006b; 김태현 외, 2006; Kim, 2009).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출산력의 변화추세와 패턴을 고찰하고, IMF 외환위기가 한국사회의 출산수준 및 인과구조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대하여 거시적인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시분석에서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출산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첫째,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서 20~49세 기혼 여자들의 총 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가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다른 인과구조를 지니는가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결혼시기에 관계없이) 재혼한 여자들의 집단과 1997년 및 그 이후 처음 결혼한 여자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두 집단의 출산력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래 인구정책방향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하였다.

## II.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의 변화

지난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로 인한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이 세계화의 물결과 맞물려 한국사회의 각 부문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한국 시장이 외국에 전면 개방되었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하여 평생직장과 정년퇴직의 개념이 약화되었고, 수많은 가게를 빈곤과 파탄으로 이끌었다. 청년실업 역시 급속히 증가하여 직업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아울러 높은 실업률의 타개, 기업의 노동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노동유연화 정책의 채택은 비정규직 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록 그 후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경기침체는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김두섭, 2006b; 한국은행, 2008; IMF, 2008; 통계청, 2008a). IMF 외환위기와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한국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출산력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IMF 외환위기는 취업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임금근로자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즉 1997~1998년 기간에 상용근로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파급효과는 여자 취업자에게서 더욱 심각하였다. 고용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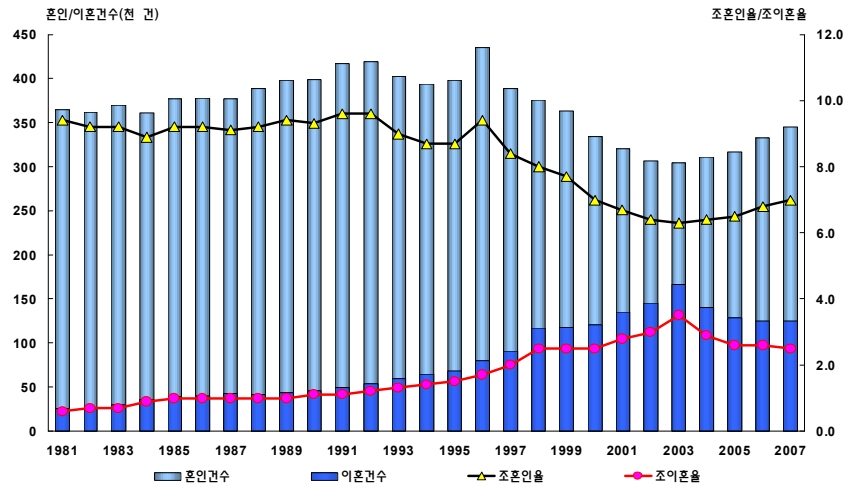
자영업자에게 미친 파급효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생산직, 여자는 서비스, 판매와 사무직에서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전문 관리직 화이트칼라들의 취업자 규모에 미친 영향은 남녀의 구분 없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김두섭, 2006b). IMF 외환위기는 고용불안정 이외에도 근로빈곤계층을 증가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중산층이 감소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빈곤율은 별로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고용이 불안정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김두섭, 2006b; 한국은행, 2008; IMF, 2008; 통계청, 2008).

IMF 외환위기의 후유증은 경제부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대량 실업, 노동시장의 왜곡, 빈곤 증대 등의 현상은 이혼, 가출, 가족 유기, 가족 폭력 등 가족의 불안정성과 가족 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출산수준 역시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2008b)의 출생신고 집계결과에 의하면 출생이수는 2005년 43.8만 명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고, 그 후 약간 증가하여 2007년 49.7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08년에는 다시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을 살펴보아도 1997년의 1.54에서 2005년 1.08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후 약간 상승하여 2007년에 1.26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다시 저하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8a).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8)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1.0)과 마카오(1.0) 뿐이다.

IMF 이후의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특히 20대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이러한 요인에 기인한바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출산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몇 지표들을 선택하여, 이들이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 혼인건수, 이혼건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의 변화추세, 1981-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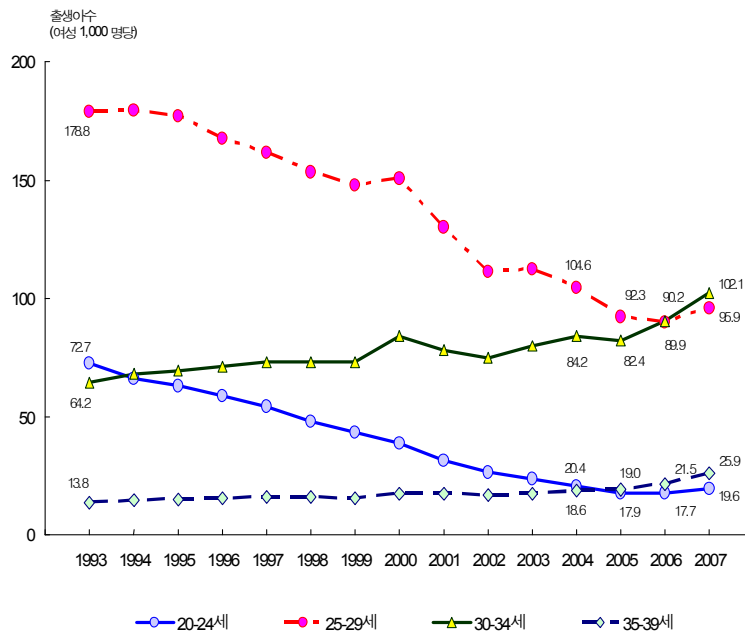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6c).

[그림 1]에서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1996년 각각 43.5만 건과 9.4%를 기록한 후에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1997년에는 전년도 대비 혼인건수의 증감률이 -10.7%를 기록하였으며, 조혼인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1997년을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2003년까지 계속되었다. 전년도 대비 이혼건수의 증감률은 1997년 14.1%, 1998년 28.0%로 집계되었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대량 실업과 빈곤 증대가 가족의 해체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2003년을 계기로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07년에 각각 12.5만 건과 2.5%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조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통계청, 2008a).

한국에서는 혼외출산의 구성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초혼연령, 특히 여자의 초혼연령은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과 함께 출산수준을 결정지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 여자의 평균초혼연령(SMAM)은 1997년에 25.7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평균초혼연령은 1997년 이후 매년 0.2~0.3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에는 28.1세에 도달하였다(통계청, 2008c).

[그림 2]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추세, 1993~2007



자료: 통계청(2008)

초혼연령의 상승은 첫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첫째아의 평균 출산연령이 1997년 26.9세 이었으나 2007년에는 29.4세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에 둘째아의 평균 출산연령은 29.1세에서 31.5세로 상승하였다(통계청, 2008b). 또한 [그림 2]를 보면,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29세 연령층의 1천 명당 출산율이 1997년에 161.5% 이었으나, 1998년 153.4%, 1999년에 148.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07년에는 95.9%로 집계되었다. IMF 외환위기의 파급효과가 가장 심했던 불과 2년 동안에 주 출산연령층에서 8.3%, 그리고 2007년까지 40.5%의 출산 감소가 이루어진 것이

다(통계청, 2008b).

[그림 2]에서 20~24세 집단의 출산율은 1994년을 계기로 30~34세 집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5년에 이르면 35~39세 집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30대 여자의 출산율이 약간이나마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2006년에 이르면 주 출산연령층이 25~29세 집단에서 30~34세 집단으로 바뀌게 된다. 참고로, 2007년에 태어난 출생아의 41.8%가 30~34세의 부인에게서 태어났고, 37.9%가 25~29세의 부인에게서 태어났다(통계청, 2008b).

주 출산연령층의 이 같은 교체현상은 결국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실업증가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바 큰 것으로 판단된다.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이후 20~30대 남녀인구의 실업률이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특히, 25~29세 남자의 실업률은 1997년 4.9%에서 1998년 10.9%로 가장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에는 25~29세 여자의 실업률도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였다(OECD, 2004; 김두섭, 2005; Kim, 2005a). 이 연령층 여자인구의 상당 부분이 실업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업률은 1999년 이후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직도 IMF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노동시간, 임금 등을 감안할 때, 젊은이들의 고용 안정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처럼, 출산과 관련되는 모든 지표들이 1997년부터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변화한 것으로 관찰된다.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출산억제의 효과는 장년층에게도 마찬가지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 Ⅲ. 미시분석 자료와 분석대상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97년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과연 출산력의 양상이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KNFS)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첫째,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서 20~49세의 기혼 여자만을 추출한 다음, 이들이 출산한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값들이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변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만약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출산력의 인과구조에 변화가 초래되었다면,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의 인과구조는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둘째,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서 20~49세의 기혼 여자만을 추출한 다음, 추출된 사례들을 두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었다. 즉,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결혼시기에 관계없이) 재혼한 여자들의 집단과 1997년 및 그 이후 처음 결혼한 여자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집단의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표 1〉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서 추출된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20~49세 기혼 여자					
	1997년 이전 결혼 + 재혼		1997년 이후 초혼		전체	
	평균값	N	평균값	N	평균값	N
부인의 총출생아수(CEB)	2.1	5,164	1.1	1,359	1.9	6,525
부인의 1998년 이후 출생아수	0.2	5,301	1.1	1,359	0.4	6,660
남편의 평균 연령	43.2	5,299	32.3	1,359	41.0	6,660
부인의 평균 연령	39.8	5,299	29.4	1,359	37.7	6,660
남편의 평균 결혼연령	27.2	5,287	28.9	1,358	27.5	6,645
부인의 평균 결혼연령	23.8	5,261	25.9	1,359	24.2	6,620
결혼과 첫 출산의 간격(개월)	17.3	5,150	18.2	1,358	17.5	6,5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표 1>에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 관한 주요 인구학적 특성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20~49세 기혼 여성의 평균 총출생아수는 1.9명이다. 이 중에는 1998년 이후의 평균 출생아수 0.4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분석대상을 결혼시기와 초혼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면, 첫 번째 집단(1997년 이전 결혼 또는 재혼자)과 두 번째 집단(1997년 이후 초혼자)의 총출생아수는 각각 2.1명과 1.1명이 된다. 부부의 평균 연령은 두 집단에서 10세 전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편과 부인의 결혼연령을 비교해보면, 두 번째 집단에서 각각 1.7세와 2.1세가 높다. 결혼과 첫 출산 사이의 평균 간격도 두 번째 집단에서 18.2개월로 산출되어, 첫 번째 집단의 17.3개월보다 약간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는 이 두 집단의 교육수준과 직업의 분포를 보여준다. 우선,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두 번째 집단은 연령이 낮은 만큼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더 높다. 대학교육을 받은 남편과 아내의 구성비가 각각 53.3%와 46.3%에 이른다. 반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남편과 아내는 각각 3.3%와 3.0%에 불과하다. 이는 첫 번째 집단의 구성비 21.7%와 27.9%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 두 집단은 교육수준의 분포가 다른 만큼 직업의 분포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두 번째 집단에서는 남편이 사무직 종사자인 경우가 22.4%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술 및 준전문가 16.8%, 기능 관련직 13.8%의 순이다. 이에 비해 첫 번째 집단에서는 장치 및 기계조작 16.1%, 기능직 15.2%로 블루칼라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두 번째 집단에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농업업에 종사하는 남편의 구성비가 아주 낮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아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아내의 직업은 두 번째 집단에서는 사무직이 33.1%로 가장 많고, 전문가 15.9%, 판매직 14.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첫 번째 집단(1997년 이전 결혼+재혼)에서는 판매직 21.6%, 서비스직 18.1%, 단순노무직 14.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결혼시기와 초혼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교육수준과 직업 분포

	20-49세 기혼 여자					
	1997년 이전 결혼 + 재혼		1997년 이후 초혼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남편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461	8.7	9	0.6	449	6.9
중학교 졸업	689	13.0	36	2.7	699	10.7
고등학교 졸업	2,190	41.4	589	43.4	2,714	41.6
대학교	454	8.6	255	18.8	703	10.8
대학교 졸업	1,500	28.3	468	34.5	1,953	30.0
합계	5,294	100.0	1,357	100.0	6,518	100.0
부인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579	10.9	9	0.6	571	8.8
중학교 졸업	892	16.9	32	2.4	874	13.4
고등학교 졸업	2,637	49.8	688	50.7	3,270	50.2
대학교	323	6.1	280	20.6	598	9.2
대학교 졸업	862	16.3	349	25.7	1,205	18.5
합계	5,293	100.0	1,358	100.0	6,518	100.0
남편의 직업						
고위임직원/관리자	199	3.9	14	1.1	210	3.4
전문가	402	8.0	106	8.1	507	8.1
기술/준전문가	444	8.8	220	16.8	660	10.6
사무	654	12.9	293	22.4	945	15.1
서비스	325	6.4	105	8.0	418	6.7
판매	610	12.1	139	10.6	735	11.8
기능	769	15.2	180	13.8	912	14.6
장치/기계조작	814	16.1	175	13.4	966	15.5
단순노무	332	6.6	50	3.8	369	5.9
농어업	506	10.0	27	2.1	517	8.3
합계	5,055	100.0	1,309	100.0	6,239	100.0

〈표 2〉 결혼시기와 초혼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교육수준과 직업 분포(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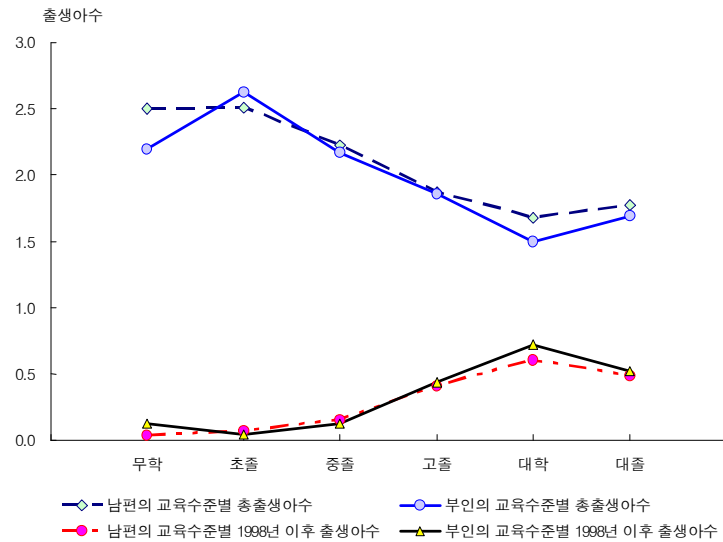
	20-49세 기혼 여자					
	1997년 이전 결혼 + 재혼		1997년 이후 초혼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부인의 직업						
고위임직원/관리자	19	0.6	0	0.0	19	0.6
전문가	199	6.7	80	15.9	279	8.3
기술/준전문가	162	5.5	68	13.5	228	6.7
사무	226	7.7	166	33.1	389	11.5
서비스	534	18.1	62	12.4	566	16.7
판매	638	21.6	73	14.5	701	20.7
기능	131	4.4	9	1.8	138	4.1
장치/기계조작	214	7.3	13	2.6	226	6.7
단순노무	433	14.7	20	4.0	439	13.0
농어업	395	13.4	11	2.2	396	11.7
합계	2,951	100.0	502	100.0	3,38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 IV.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 출생아수의 분석

그러면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20~49세의 기혼 여자 6,66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출산한 출생아의 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가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변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출산수준이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비교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20~49세의 기혼 여자의 평균 총출생아수는 1.9명이다. 특히, 1998년 이후 출생아수의 평균값은 0.4명에 불과하다.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의 값들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편차와 분산(variance)도 매우 작아지고, 인과구조의 규칙성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의 규칙성, 또는 그 실마리를 찾아낸다면 이 논문의 주장은 크게 강화될 수 있다.

[그림 3] 부부의 교육수준별 총출생아수 및 1998년 이후 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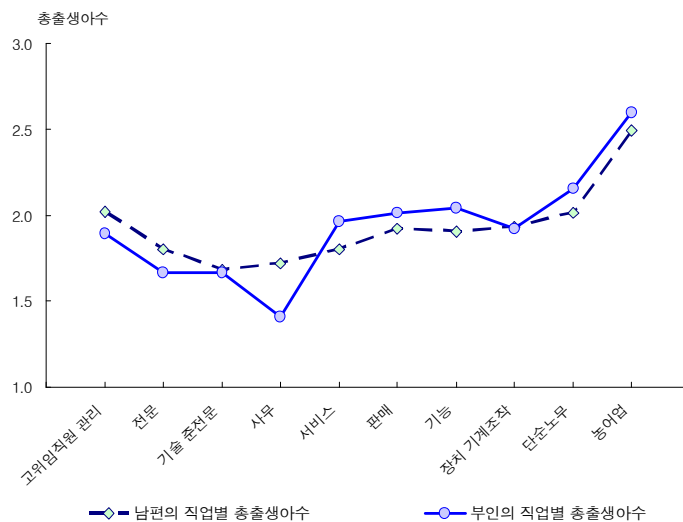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 출생아수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출생아수는 감소하나, 대학을 졸업한 부부들은 바로 아래의 집단보다 총출생아수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 그림에서 부인이 무학자일 때 초등학교 졸업자보다 총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불과 36명에 기초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림 3]에서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는 부부의 교육수준과 전혀 다른 관계의 양상을 보인다.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도 증가하다가, 대학졸업자에 이르러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결국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행위를 가장 민감하게 변화시킨 집단은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부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부부들도 바로 아래의 학력집단에 비해서 보다 민감하게 출산수준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만약 현재의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교육과 출산력의 관계의 전반적인

양상이 앞으로 크게 달라지리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차별출산력의 양상은 부부의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감지된다. [그림 4]를 보면,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부부의 순으로 총출생아수가 가장 크며, 대체로 직업위세가 높아질수록 총출생아수가 작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은 바로 아래의 계층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인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출생아수가 뚜렷하게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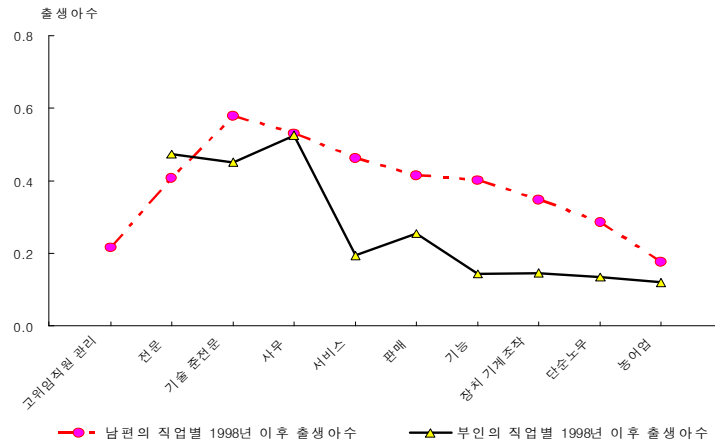
[그림 4] 부부의 직업별 총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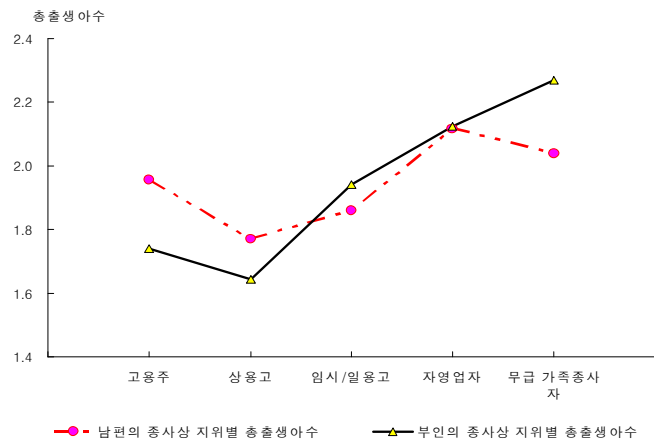
그런데 [그림 5]에 제시된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는 총출생아수와 전혀 다른 관계의 양상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행위를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집단은,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처럼 직업위세가 낮은 직종, 그리고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과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출산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서비스, 판매, 기능직에 종사하던 부인들의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5] 부부의 직업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그림 6] 부부의 종사상 지위별 총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행위의 변화는 부부의 종사상 지위별 출생아수를 살펴 보아도 마찬가지로 감지된다. 여기서 [그림 6]의 x 축에 제시된 종사상 지위의 순

서가 지위 위세나 계층적 서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만약 이 가정을 받아 들인다면, 이 그림에 제시된 관계의 양상은 직업에 따른 출산수준의 형태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리고 [그림 7]에서 부부의 종사상 지위와 1998년 이후 출생아수의 관계의 양상 역시 [그림 5]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6]과 [그림 7]에서 다소 의외의 출산수준을 보이는 무급 가족종사자 남편의 수는 각각 26명과 27명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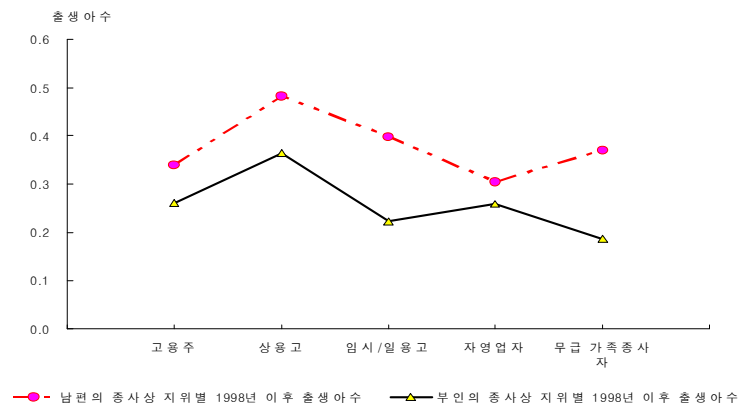
결국, [그림 6]과 [그림 7]에서도 종사상 지위의 위세가 낮고 출산수준이 가장 높았던 집단의 출생아수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많이 감소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위 위세나 서열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고용주의 출산수준이 현저하게 저하하였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교육, 직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별출산력 분석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속성이 두드러지게 구분됨이 없이 출산력과 일관된 관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림 8]에 제시된 직장유형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최근의 출산수준은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부인의 순서로 높고, 직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높은 실업률과 구조조정으로 불안감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이 가장 안정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간주되는 최근의 상황이 출산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규모와 최근의 출산수준이 반비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직장유형에 따른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소기업 종사자가 가장 높았으며,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민감한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개인사업체 종사자의 최근 출산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이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 최근에 이르러 남녀 모두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이 배우자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녀의 이상적 배우자감 순위는 남자의 경우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교사-금융업 종사자-일반 사무직, 여성은 교사-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일반 사무직-금융업 종사자의 순이다(동아일보,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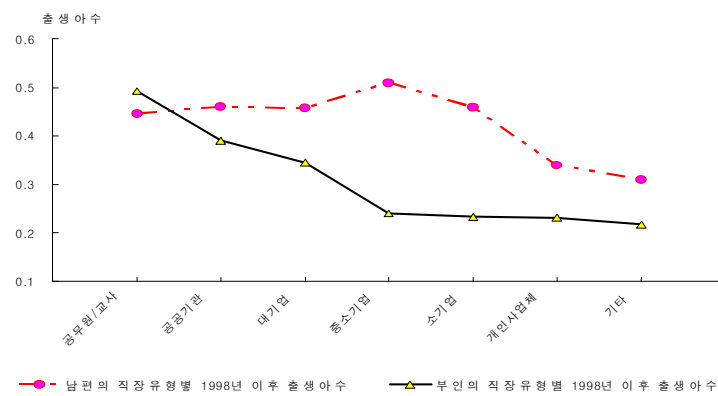
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7] 부부의 종사상 지위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그림 8] 부부의 현재 직장유형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 V. 결혼시기와 초혼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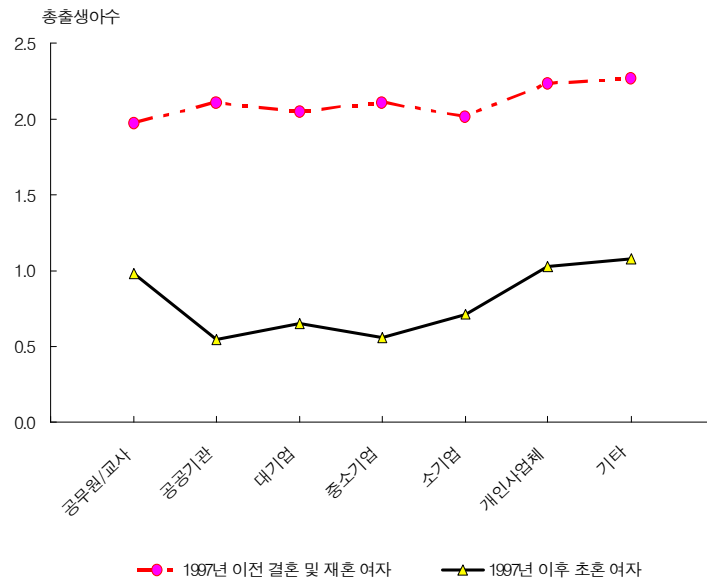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IMF 외환위기가 출산행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의 시도는 분석대상을 두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서 20~49세의 기혼 여자만을 추출한 다음,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결혼시기에 관계없이) 재혼한 여자들의 집단과 1997년 및 그 이후 처음 결혼한 여자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집단에는 5,301명, 그리고 두 번째 집단에는 1,359명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추출된 20~49세 기혼 여자 중에서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은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자로 구성되며, 비교집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출산수준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의 출산행위를 주로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총출생아수에는 1998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평균값은 0.2명에 불과하다. 첫 번째 집단의 평균 총출생아수는 2.1명으로 집계되었다(표 1).

그런데 1997년 이후의 초혼자로 구성된 두 번째 집단은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어서 매우 동질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두 번째 집단은 남편의 76.2%와 부인의 85.6%가 25~34세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저학력자가 매우 적고, 직업분포에 있어서도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농업업 종사자 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의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재산이 아주 많거나 상위 계층에 속한다는 정체성의 소유자, 그리고 고용주의 빈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집단의 이러한 특성은 첫 번째 집단과의 비교분석에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두 번째 집단에서 관찰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총출생아수의 형태는, 앞에서 살펴본 바 1998년 이후 출생아수의 형태와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모두 1997~2003년 기간의 출산행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두 번째 집단의 분석결과가 1998년 이후 출생아수의 분석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추가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림의 제시를 생략하였다.

[그림 9] 부인의 현재 직장유형별 두 집단의 총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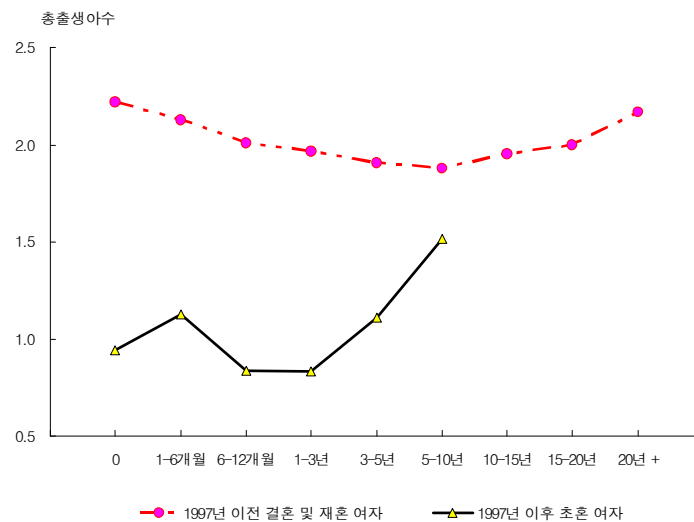
[그림 9]에는 부인의 현재 직장유형에 따른 두 집단의 총출생아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집단은 직장유형에 따라 출산수준에 의미 있는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초혼자 집단에서는 부인이 공무원이나 교사일 때 다른 직장 종사자들보다 출산수준이 뚜렷하게 더 높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8]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이들 직장의 안정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과 교사는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경기침체나 구조조정의 영향을 덜 받는 직업으로 널리 인정된다. 그리고 다른 직업에 비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상대적으로 적고, 출산휴직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그림이 [그림 8]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부인들의 총출생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두 그림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는 부인들은 최근의 출산수준이 낮지만, 이러한 경향은 1997년 이후 결혼한 초혼 부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타 범주의 경우에는 12명만이 해당되므로 두 그림에서의 일관성 결여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산력 분석에 있어서 부인의 혼인 후 취업기간은 경제활동 여부, 직업, 직장 유형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부인의 혼인 후 취업기간은 출생아수의 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원인변수가 되고, 또한 출생아수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결과변수가 된다. [그림 10]에서 부인의 혼인 후 취업기간과 출산수준은 완만한 U자형의 형태를 나타낸다. 부인의 취업은 임신을 지연 또는 회피시켜 출산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림 10] 부인의 혼인 후 취업기간별 두 집단의 총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그러나 그 동안 한국에서는 부인의 경제활동 기간과 자녀수가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였다(김두섭, 1986; Kim, 1986). 취업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출산수준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은 인과관계를 반대로 설정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해진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 소득을 위해 일을 계속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김두섭, 1986). 최근에는 젊은 세대의 부인들이 자아실현이나 자기성취를 위한 목적 못지않게 자녀의 양육비와 사교육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

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취업기간이 출산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부인의 연령효과에 기인한다. 즉, 취업기간이 긴 부인일수록 연령이 높을 개연성이 커지며, 이에 따라 총출생아수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10]의 두 곡선에서 굴곡의 경사도와 깊이가 두 번째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집단에서 취업기간과 출산수준이 주고받는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997년 이후 초혼자 집단에서 1~6개월 동안 단기 취업한 부인들의 출산수준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상당수가 혼인 직후 임신이나 출산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는 경향과 관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VI. 맺는말

현재 한국 정부는 합계출산율을 OECD의 평균인 1.6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은 주로 출산비용과 자녀양육비의 지원, 육아시설의 확충, 자녀수에 따른 세금감면 등을 통해 자녀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맞추어지고 있다.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여성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과 근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을 강화하며,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성고용정책의 구체적인 초점은 육아시설의 확충, 산전후 휴가 및 급여지원의 확대, 그리고 여성 근로자에게 신축적인 근로시간과 단기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맞추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이러한 정책들이 자녀양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며, 따라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출산보조

금을 비롯한 직접적 경제지원정책의 일부는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이미 확인된바 있다(Gauthier and Hatzius, 1997). 자녀양육시설의 확충과 경제적 지원이 출산력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도 그 투자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Héran, 2005).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한국 출산력의 변화과정에 대한 정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입안되고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정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각 나라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3년 프랑스가 가족과 육아보조를 위해 564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합계출산율 0.1~0.2 정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서(Héran, 2005),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에 프랑스식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한국에서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복지 재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배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출산장려정책은 해당 사회의 출산력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아울러 사회변동과의 연관성에 관한 종합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정된 가용재원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각종 처방책에 분산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지양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출산수준 저하는 IMF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상승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20대 청년인구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데 기인하는 바 크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인구가 빨리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유인하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최근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사실 또한 정책적인 함의를 지닌다. 출산증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각각의 적용대상이 되는 집단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최근의 출산력 저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최근 프랑스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의 투자효율성과 재원배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1990년대 이후의 출산력변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IMF 외환위기가 한국사회의 출산수준과 그 인과구조에 미친 파급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초저출산의 인과구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인과구조를 규명함으로써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과 그 적용대상집단(target group)에 관한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이 논문은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거주지, 계층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만약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출산력의 인과구조에 변화가 초래되었다면,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의 인과구조는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및 그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두 집단의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두 집단의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미시분석에서 발견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학원 졸업자 등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낮고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가장 높으며, 직업위세가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고위임직원과 전문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는 사무직 종사자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별출산력은 무급 가족종사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고용주, 임금근로자의 순이었다.

둘째, 최근의 출산수준(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은 위에 언급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

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최근 출산수준이 가장 현저하게 낮아진 집단은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부부들이었으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들도 바로 아래의 학력집단에 비해서 보다 민감하게 출산수준이 낮아졌다. 직업별로는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처럼 직업위세가 낮은 직종, 그리고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무급 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다음이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주, 상용근로자의 순서였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의 출산수준이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부인의 순서로 높고, 직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런 현상은 이들 직장의 안정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바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인과구조와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결과는 추후 인구학적 변화의 전망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장단기 출산장려정책과 그 적용대상집단에 관하여 정책적인 함의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틀과 분석결과는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출산력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정책은 과거의 출산억제정책과는 달리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직 어느 선진국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의 뚜렷한 성공사례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현재 한국의 초저출산은 자기 직업의 장래나 경기회복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동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젊은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능력을 지닌 상태에서 자신의 일을 보다 중시하고 전통적인 육아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성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이들을 일찍 결혼하고 출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경기의 회복과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 한, 광범하게 정착된 저출산 지향의 사회적 규범,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기는 적어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아울러, 사회의 여타 부

문들이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규모와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개정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두섭 (1986), “한국부인의 경제활동과 출산력.” 인곡 황성모박사 화갑기념집.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심설당. pp. 759-776.
- \_\_\_\_\_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 \_\_\_\_\_ (2006a),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_\_\_\_\_ (2006b),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 \_\_\_\_\_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67-95.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 인구센서스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 1-23.
- 동아일보 (2006), “‘성격보다 직업’ 배우자 선택기준 10년 동안 이렇게 변했다.” DongA.com 뉴스 2006. 8. 5.
- 보건복지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통계청 (2008a),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 \_\_\_\_\_ (2008b), 『2007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2008c), 『2007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 및 원자료 CD.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은행 (2008),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 한국은행.
- Blake, Judith (1968), “Are Babies Consumer Durables? A Critique of the Economic Theory of Reproductive Motivation.” Population Studies 22(1): 5-25.

- Eun, Ki-Soo (2003), "Understanding Recent Fertility Decline i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pplement to Volume 1.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Japan. <http://www.ipss.go.jp/index-e.html>.
- Gauthier, Anne and Jan Hatzius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295-306.
- Héran, François (2005), "Demography and Population Policy: Is It Possible to Draw Any Lesson from the French Case?" Presented at the KIPP (Korea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Demographic Forum. April 8, 2005. Seoul, Korea.
- IMF (2008),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Jun, Kwang-Hee (2004), "Chapter 3: Fertility." Pp. 65-89 in The Population of Korea. Edited by Doo-Sub Kim and Cheong-Seok Kim. Daejeon, Korea: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Kim, Doo-Sub (1986), "Working Experience of Married Woman and Fertility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5: 19-30.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2005),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3(1): 2-25.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okyo, Japan.
- \_\_\_\_\_ (2009),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Pp. 110-131 in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Issues. Edited by G. Jones, P. T. Straughan and A. Chan. Oxon, U.K.: Routledge.
- OECD (2004), OECD Statistics: Labor Force.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www.oecd.org>.
-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8), 2005 World Population Data Sheet.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최근의 출산율 증가 원인과 정책적 함의

이삼식·최효진\*\*\*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8수준에서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 걸쳐 다소 반등하였다. 출산수준 증가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은 원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출산력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진단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7년 전국출산동향조사」 결과가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인구학적 요인분해와 로지스틱회귀모형이 적용되었다. 인구학적으로 2006년도 출산율 상승은 30대초 여성의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면, 2007년도 출산율 상승은 30대초 여성의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뿐만 아니라 20대 후반 여성의 결혼과 출산(첫째아)의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모든 요인들을 동시에 포함한 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두자녀관이 여전히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 자녀가치관이나 경기에 대한 인식은 둘째아 출산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나 모자건강관리지원정책은 향후 가임력을 지속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아 출산 이행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보다 많은 부담을 수반하므로, 가치나 인식에 비해 자녀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육·교육비지원, 모자건강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등 정책들이 개인적인 추가 출산 이행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본 논문은 제1차 저출산대책포럼(2008년 9월 30일)에서 발표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사업 “최근의 출산율 증가 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2008)” 결과를 재정리하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I. 머리말

한 국가의 인구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인 요인으로는 자연적 증감요인인 출생과 사망, 그리고 사회적 증감요인인 인구이동이 있다. 사망은 보건 의료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며, 전쟁이나 기근 및 전염병 등 특정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국제인구이동은 국가 간 사회경제수준 차이, 정치적 이유, 국가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인력 수출이나 이민자 유입 등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관계로 국제이동의 영향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인구의 급격한 변화는 출산 변동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래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이르렀으며,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1.6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다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1.08까지 낮아졌다. 최근 출산율은 1.2 내외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노동력 공급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의 문제들이 유발될 것이다. 노동력 감소로 세입기반 등이 감소하여, 베이비붐세대 등 다출산세대(cohort)가 노년기 진입 시 생활 사회보장 지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잠재성장률 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어서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06~2010)을 수립·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시작된 시기 이래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6년 1.13, 2007년 1.26으로 최근 2년간 반등세를 보였다. 물론, 최근의 출산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다문화국가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프랑스와 스웨덴 등 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세계적으로 출산수준이 낮은 국가군에 속한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도 낮다. 참고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치(단순평균)는 1.6명 수준이다.

최근 출산율 증가의 원인과 향후 출산율 상승세 지속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최근 여러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2007년이 정책적으로 저출산 대응이 본격화된 기간과 일치한데다가,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해” 등 사회문화적으로 결혼 및 출산의 호기로 인식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실로 출산수준 증가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인별로 통제 가능 정도가 다르므로, 최근 출산수준 증가의 원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출산력 변화를 야기한 원인의 향후 변동 방향이나 정도를 측정하여,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증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출산수준 변동에 적절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등에 기초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II. 이용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근 출산수준 변동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출산율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미시적인 접근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출산 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7년 전국 출산동향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조사에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법이 적용되었다. 조사는 2008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한 집단은 2007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이며, 다른 한 집단은 2007년 출산을 하지 않은 가구(비출산가구)이다. 조사의 주요 분석대상은 2007년 출산가구가 되며, 일반가구는 비교집단(준거집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본 조사를 위하여 16개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여 출산가구의 명부를 표본의 200% 규모로 작성하였다. 출산가구명부는 시도 및 시군구별 출생아수 비율에

따라서 지역별로 할당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비출산가구에 대한 조사는 주 출산 연령층인 24~39세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비출산가구의 표본은 연령, 지역, 취업여부를 할당하여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확률표집을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조사원에게 조사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출산가구로는 지자체에서 작성한 명부(약 4,000가구) 중 결번과 응답거부를 제외한 1,729표본가구가 최종 조사되었다. 비출산가구로는 최종적으로 991표본가구가 조사되었다.

조사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부인과 남편의 연령, 학력, 직업과 종사상 지위 그리고 결혼연월, 가구소득이 포함되었다. 출산행태에 관한 사항으로 총자녀수, 자녀별 출생연월 및 성별, 2007년 자녀 출산의 사전계획 여부, 출산시기 계획시 고려사항, 비계획 출산의 이유, 출산 중단 또는 연기하려했던 이유 등이 포함되었다. 자녀 및 가족 관련 가치관으로서 향후 추가자녀수, 추가자녀 계획 이유, 자녀관(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 성역할관(부부의 가사 및 양육 부담정도)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인 출산결정요인에 관한 항목들로서 출산동기와 함께 개별정책의 수혜경험, 출산에 정책이 미친 영향 정도와 종류, 경기상황이 출산에 미친 영향, 출산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 등이 포함되었다.

최근 출산력 변화의 원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계기법들이 동원되었다. 우선 출산력 변화의 인구학적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산력을 출산율과 인구구조의 기여도로 분해(decomposition)하였다. 출산력 변화의 인구학적 요소 분해에는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 결과가 주로 이용되었다. 인구학적 요인들은 자체적으로 출산력에 대해 결정력을 갖기보다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 요인 각각이 출산력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2007년 전국출산동향조사 결과에 다변량적 접근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 Ⅲ. 최근 출산력 변화의 인구학적 요인

#### 1. 출생아수 증가와 인구학적 원인

최근 출산수준은 전체 출생아수라는 절대적 규모 측면과 합계출산율이라는 여성 1인당 출생아수의 평균개념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총출생아수는 2005년 438.1천명에서 2006년 451.5천명으로 약 13.4천명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496.7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45.2천명이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에서 2006년 1.13명, 그리고 2007년에 1.26명으로 각각 높아졌다.

최근 출생아수 증가가 가임기여성인구 규모의 증가 또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출산율 자체의 상승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기준연도 연령별출산율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각 연령별출산율에 실제 가임기여성인구수(연령별)의 변화치를 적용하여 출생아수를 산출하였다. 반대로, 기준연도 가임기여성인구수(연령별)를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각 여성인구에 실제 연령별출산율의 변화치를 적용하여 출생아수를 산정하였다(표 1).

여성연령별 출생아수를 총합한 총출생아수를 살펴보면, 2005~2006년간 출산율 상승이 출생아수를 16,541명을 증가시킨 반면, 가임기여성인구구조 변화는 오히려 4,853명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상승의 정적 효과가 여성인구구조 변화의 부적 효과를 상쇄하고 남아, 결과적으로 11,687명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이다(연령 미상을 제외하였으므로, 실제 총출생아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 비율로 표시하면, 출산율 증가는 전체 출생아수 증가에 +141.5% 기여한 반면, 여성인구구조의 변화는 -41.5% 기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06~2007년간의 출생아수 증가에 기여도를 살펴보면, 출산율 상승은 총출생아수 증가에 +114.5%(48,349명 증가) 기여한 반면, 가임기여성의 인구구조 변화는 -14.5%(6,115명 감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 분석은 전체 분석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2005~2006년간 연령별 출생아수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15~19세 여성규모의 감소가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이 연령층의 출산율 상승이 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출생아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력 구조는 30~34세와 40~44세 연령층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25~29세 연령층에서는 여성규모 증가가 출생아수 증가에 기여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부적인 효과를 미쳐, 결과적으로 이 연령층에서 출생아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세 연령층에서는 여성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가 동시에 발생하여 이 연령층으로부터의 출생아수가 감소한 반면, 35~39세에서는 여성인구 증가와 출산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이 연령층으로부터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인구구조 및 출산율 변화의 기여도

(단위: 명, %)

구분	계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6~2007								
총합효과	42234	197	1308	13,768	15890	10145	917	11
인구구조	-6115	46	-1784	2,302	-7351	751	-90	11
출산율	48349	151	3091	11,466	23241	9394	1007	0
기여도								
인구구조	-14.5	23.4	-136.4	16.7	-46.3	7.4	-9.8	100.0
출산율	114.5	76.6	236.4	83.3	146.3	92.6	109.8	0.0
2005~2006								
총합효과	11687	142	-1954	-2,461	9842	5996	108	15
인구구조	-4853	-7	-1611	2,068	-5953	731	-96	15
출산율	16541	149	-344	-4,529	15795	5265	204	0
기여도								
인구구조	-41.5	-4.6	82.4	-84.0	-60.5	12.2	-89.1	100.0
출산율	141.5	104.6	17.6	184.0	160.5	87.8	189.1	0.0

2006~2007년간의 출생아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15~19세, 25~29세 및 35~39세 연령층에서는 여성규모의 증가와 출산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여 출생아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24세 연령층의 경우, 2005~2006년간 변화의 경우와 같이 여성규모 감소가 출생아수 감소를 가져왔으나, 오히려 출산율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출생아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향력 구조는 30~34세와 40~44세 연령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5~2006년간의 출생아수 증가는 30대 연령층에서의 출산율 상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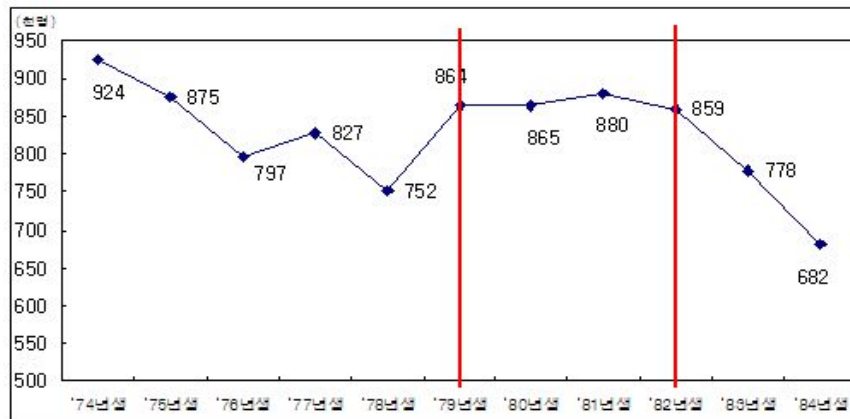


주도하였다면, 2006~2007년간의 출생아수 증가는 30대뿐만 아니라 20대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았으며(30~34세, 25~29세, 35~39세 순), 특히 25~29세 연령층의 여성규모 증가와 출산율 상승이 동반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출산율 상승효과가 2005~2006년에 비해 2006~2007년에 컸으며,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효과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 2. 가임여성(25~29세) 증가의 인구학적 원인

주된 출산연령층인 25~29세 여성의 증가가 2005~2006년간에는 물론 2006~2007년 간에도 출생아수 증가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최근 출생아수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컨대, 25~29세 여성 규모 증가로 인한 출생아수 증가분은 2005~2006년 이 연령층에서 출생아수 감소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였으며, 2006~2007년에는 이 연령층에서의 출산율 상승과 함께 출생아수를 순증(純增)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림 1] 연도별 출생아수 추이(1979~1982년생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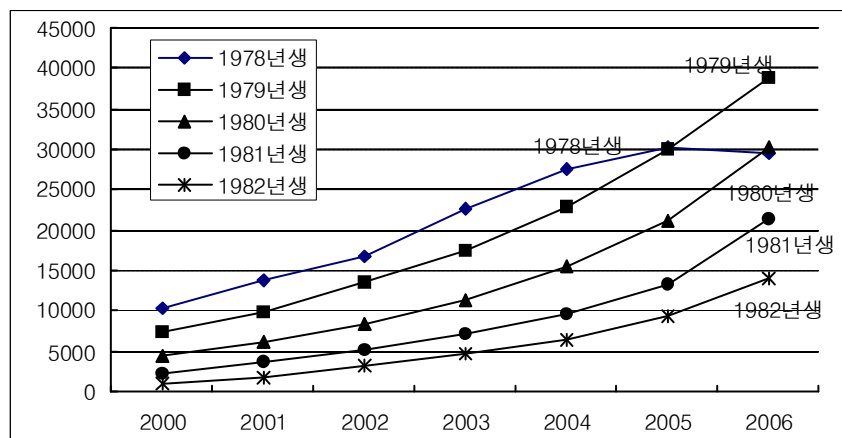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여기에서 25~29세 여성 증가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과거 가족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줄어들었던 출생아수가 현재 가임기에 진입하면서 최근 전체 가임

여성인구는 감소세에 있다. 25~29세 여성은 2000년 2,121천명에서 2005년 1,864천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7년에 1,911천명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인 1955~1965년생 여성들의 초혼연령이 25세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출산한 자녀들은 1979~1982년생의 베이비붐후세대(post-babyboomers)들이다. 베이비붐후세대의 특징은 당시 출산율이 감소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母)의 수가 많아 출생아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베이비붐후세대들이 최근 25~29세에 진입하면서 결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9~1982년생 여성의 초혼은 2000년 14.8천명에서 2006년에 104.4천명으로 급증하였다. 1979~1982년생 여성의 초혼이 전체 초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5.2%에서 2006년 38.5%로 급상승하였다. 요컨대, 베이비붐후세대들의 결혼 및 출산 연령층 진입으로 인하여 25~29세 여성의 출생아수도 증가한 것이다.

[그림 2] 1979~1982년생의 결혼(초혼) 추이



자료 : 통계청, 내부자료.

구체적으로 25~29세 여성의 출생아수는 2003년 220천명에서 2006년 174천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188천명으로 오히려 전년에 비해 14천명(8.1%)이 증가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에는 28.1세로 28세 대에 진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0대에서 출산이 증가하

고 20대에서는 출산이 감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25~29세 여성의 출생아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가임여성수가 증가하였고, 동시에 이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3. 결혼 추이와 인구학적 원인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출산은 법률혼에서 발생하므로, 결혼 추이는 몇 년간의 시차가 있을지언정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우선 전체 여성초혼건수는 1997년 343천건에서 2004년 245천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감소세는 점차 둔화되었다. 이후 최근 3년(2005~2007)간에 걸쳐 여성초혼건수는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7년에는 282천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에는 전년대비 24천건(9.8%)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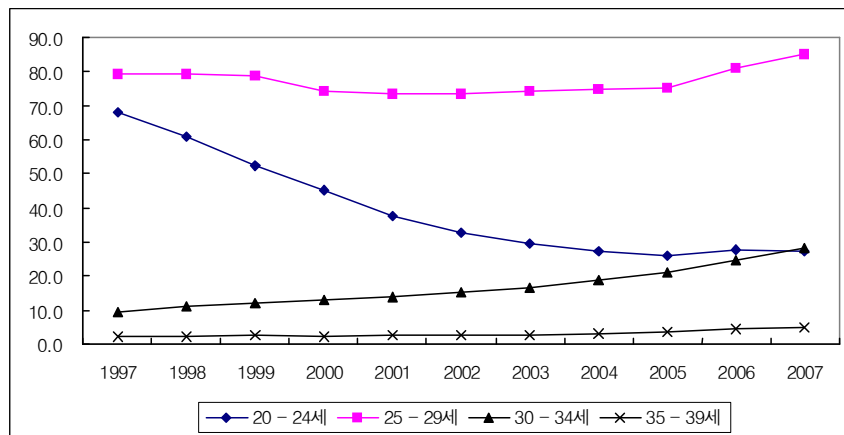
결혼 적령기 여성인구 규모의 영향을 진단해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9~1982년생인 베이비붐후세대의 25~29세 연령층 진입으로 인하여 전체 초혼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30~34세 여성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규모면에서 초혼건수 추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초혼건수 변동의 원인으로서 시차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연령별혼인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초혼율은 특정 연령층의 여성인구가 해당연령을 결혼시기로 선택한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5~29세 여성 초혼율은 1990년대 말 80% 수준에서 2000년대 초에 다소 낮아졌다가, 최근에 다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24세 초혼율은 1997년 70%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30%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30~34세 초혼율은 1997년 1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에는 30%수준으로 20~24세 초혼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35~39세 초혼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5%미만으로 아주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초혼율이 예외 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최근 증가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25~29세 여성의 경우 여러 이유로 결혼시기를 연기하여 왔던 경향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의미하며, 30

\* 2007년도 출생아수 중 혼인중출산은 98.5%, 혼인외출산은 1.5%로 대부분 법률혼으로부터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 여성의 초혼율 상승은 연기되었던 결혼이 최근에 활발하게 실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가임기여성의 연령별초혼율 추이, 1997~2007



#### 4. 결혼증가와 출산증가간 연관성

최근 출생아수 증가가 결혼(초혼) 증가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결혼 후 경과기간(통계청에서는 ‘동거기간’으로 표시하고 있음)별 출생아 분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 결혼 후 1년 내의 출생아수나 전체 출생아수 대비 비중 모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1년 내의 출생아수는 2005년 87천명에서 2006년 92천명(전년대비 6.6%) 그리고 2007년에 109천명(전년대비 18.1%)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 규모나 증가율은 다른 결혼경과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출생아수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후 1년 이상 2년 내의 출생아수는 2003년 110천명에서 2005년 87천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89천명, 2007년에는 99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의 출생아수의 경우, 2005~2006년간 상승폭(증가율)이 다른 결혼경과기간에 비해 크지 않은 반면, 2006~2007년간 증가율은 11.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결혼 후 단기간 내의 출생아수의 급증은 결국 초혼전수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2〉 결혼 후 경과기간(동거기간)별 출생아수 변동 추이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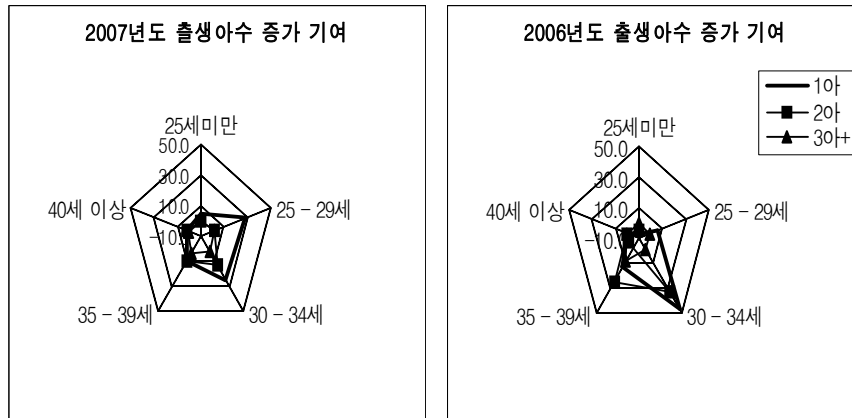
구분	출생아수(천명)					전년대비 증감(천명)				증감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4	2005	2006	2007	2004	2005	2006	2007
계	493	476	438	452	497	-17	-38	13	45	-3.5	-8.0	3.1	10.0
1년미만	85	91	87	92	109	7	-5	6	17	8.2	-5.4	6.6	18.1
1년	110	96	87	89	99	-14	-10	2	10	-12.9	-9.9	2.5	11.1
2년	71	67	62	61	65	-4	-5	0	4	-5.4	-8.0	0.0	6.0
3년	65	58	53	54	56	-7	-6	2	2	-10.6	-9.9	3.5	3.2
4년	484	48	41	43	45	-0	-7	1	2	-0.3	-14.8	3.4	6.0
5년	89	90	86	89	97	1	-5	3	8	0.8	-5.1	3.7	9.0
10~14년	14	14	14	14	16	0	-7	1	2	0.2	-4.8	4.5	14.2
15~19년	2	2	2	2	2	0	0	0	0	2.1	-1.4	1.2	10.2
20년+	0.3	0.3	0.3	0.3	0.3	0	0	0	0	-8.0	-2.6	3.3	-13.4

자료: 통계청, 2007년 출생통계 결과(보도자료), 2008. 8. 6.

초혼 증가와 출산 증가간의 연관성은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분포에 의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즉, 최근 결혼여성으로부터 첫째아 출산 가능성이 높기 마련인데, 실제 2006년과 2007년도 출생아수 증가 중 첫째아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2007년도 전체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증가의 기여도는 첫째아 68.9%, 둘째아 23.5%, 셋째아의 경우 7.8% 등이다. 연령별로 첫째아 증가가 전체 출생아수 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25~29세의 경우 28.9%, 30~34세의 경우 25.2%로 이들 두 연령층에서 태어난 첫째아 증가가 전체 증가의 50% 이상이었다.

2006년도 전체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변화의 기여도는 첫째아의 경우 60.7%, 둘째아의 경우 33.1%, 셋째아의 경우 4.3%로 각각 나타났다. 2007년도와 달리, 2006년에는 30~34세 여성의 첫째아 증가가 전체 출생아수 증가의 48.0%, 그리고 둘째아의 증가가 31.9%를 각각 차지하여 전체 출생아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패턴은 2005년도 전체 출생아수의 감소를 둘째아 감소(43.6%)와 첫째아 감소(43.1%)가 주도한 것과 다르다.

[그림 4] 총출생아수 변동에의 모연령·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변동의 기여도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006년에는 결혼 지연에 따른 30~34세 여성의 첫째아 출산과 둘째아 출산이 전체 출생아수 증가를 주도하였다면, 2007년에는 25~29세 여성의 결혼 증가와 연기된 결혼 건수의 증가로 인한 30~34세 여성의 첫째아 출산의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최근 출산력 변화의 사회경제적·정책적 요인

##### 1. 변수 및 분석방법

앞서 최근의 출산력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진단하였다. 인구학적 요인들은 스스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출산력에 대해 결정력을 가진다. 따라서 최근 출산력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각 요인의 영향 여부와 그 정도(영향력)를 진단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자료는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7년도 전국 출산동향조사」 결과이다.

본 분석에서 출산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2007년도 출산순위별 출산 이행 여부로서 구체적으로 첫째아에서 둘째아로의 출산 이행 그리고 둘째아에

서 셋째아로의 출산 이행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고순위로의 출산 이행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그 이행시기가 보다 빠를수록 전체 출산력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종속변수의 성격에 따라서 분석방법으로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2007년도 출산순위별 출산 이행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및 정책적 요인들의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조사 자료로서 세부 독립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된다. 사회문화적 요인들로는 자녀필요성, 부부간가사분담, 다산사회분위기 등이 주요 독립변수로 포함된다. 자녀필요성의 독립변수는 조사에서 “부인은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범주로 구성되는데, ‘전적으로 찬성’은 4, ‘대체로 찬성’은 3, ‘별로 찬성안함’은 2, ‘전혀 찬성안함’은 1로 부호화되었다. 부부가사분담정도의 독립변수는 가족 내의 성평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조사에서 “평소(공휴일 제외) 부인은 집안일 또는 자녀돌보는 일을 남편과 어느 정도 분담하였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된다.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부부가 함께’는 3, ‘대체로 부인(남편)이’는 2, ‘전적으로 부인(남편)이’는 1로 부호화하였다. 다산장려찬성도의 독립변수는 조사에서 “최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의 부가 질문항목인 “부인은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찬성하십니까?”로 측정되었다. 응답범주 ‘매우 찬성’은 5, ‘찬성’은 4, ‘보통’은 3, ‘반대’는 2, ‘매우 반대’는 1로 부호화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조사에서 “막내를 갖기로 결정한 시기와 막내 출산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경기상황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범주는 가변수화(dummy)하여 ‘(매우)좋아졌다’는 1, 이외 응답은 0으로 부호화하였다. 정책적 요인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경감),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모자건강관리 지원 등 총 5가지 저출산대책의 수혜 여부로 구성된다.

이들 관심영역의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 등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영향 요인들을 통제하고자 하며, 여기에는 모의 만연령, 교육수준, 결혼기간, 거주지, 직업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포함된다. 이상의 독립변수(관심영역변수,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각각에 대한 특성과 측정방법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우선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및 정책적 요인들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이 2007년도 출산순위별 출산이행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들 제 요인들을 한 모형에 포함시켜 상호간의 영향력을 제거한 후 각 요인의 출산순위별 이행여부에 대한 순 영향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표 3〉 분석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및 부호화 체계

영역	변수 및 부호화 체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통제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의 만 연령: 세</li> <li>◦ 어머니의 교육수준: 대학재학 이상 1, 고졸이하 0</li> <li>◦ 결혼기간: 년</li> <li>◦ 거주지: 농촌 1, 도시 0</li> <li>◦ 직업: 무직 0, 저위신 1, 고위신 1(저위신 -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고위신 - 의회의원 등,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li> <li>◦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li> </ul>
독립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필요성<sup>1)</sup>: 전혀 찬성안함 1, 별로 찬성안함 2, 대체로 찬성 3, 전적으로 찬성 4</li> <li>◦ 다산장려찬성도<sup>2)</sup>: 매우 반대 1, 반대 2, 보통 3, 찬성 4, 매우 찬성 5</li> <li>◦ 부부가사분담정도<sup>3)</sup>: 전적으로 부인(남편)이 1, 대체로 부인(남편)이 2, 부부가 함께 3</li> <li>◦ 경기인식<sup>4)</sup>: (매우)좋아졌다 1, 이외 0</li> </ul>
응답자의 정책 수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육아관련 정책유형별 수혜 여부(수혜 1, 비수혜 0)</li> <li>- 보육비·교육비 지원(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경감),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모자건강관리 지원(총 5종)</li> <li>◦ 2007년 출산·육아관련 정책 수혜 정도(단위 개)</li> </ul>
종속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년도 출산 이행 여부</li> <li>◦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여부(각 순위별로 출산 1, 비출산 0)</li> </ul>

주: 1) “부인은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범주.

2) “평소(공휴일 제외) 부인은 집안일 또는 자녀돌보는 일을 남편과 어느 정도 분담하였습니까?”에 대한 응답범주.

3) “최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의 부가 질문항목인 “부인은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찬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범주.

4) “막내를 갖기로 결정한 시기와 막내 출산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경기상황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범주.



## 2. 분석 결과

2007년도 출산순위별 출산이행여부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을 진단하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모형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2007년도 첫째아에서 둘째아로의 출산 이행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들 모두 즉, 자녀필요성, 부부가사분담정도 및 다산장려찬성정도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p < 0.1$  수준에서)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007년도 둘째에서 셋째아로의 출산이행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첫째아에서 둘째아로의 이행에 관한 모형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p < 0.01$ )하게 둘째아에서 셋째아로의 출산 이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산장려찬성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p < 0.05$  수준에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사분담정도도 여전히 셋째아 출산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자녀수(2명 정도)를 고려하면 둘째아까지 가지려는 성향이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녀필요성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다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는 첫째아에서 둘째아로의 출산 이행 정도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자녀를 가진 부부들 중 추가 출산을 이행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통적인 자녀가치관이 보다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 이론에 의하면, 양성평등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출산율과 양성평등수준이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내나, 양성평등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부적인 상관성을 보인다(Chesnais, 2005). 모형에서 부부가사분담정도가 추가 출산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한국사회에서 양성평등수준이 여전히 낮아 출산력 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 2007년 추가출산 이행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 로지스틱회귀모형

변수	첫째아→둘째아 출산 이행(모형1-1)		둘째아→셋째아 출산 이행(모형1-2)	
	b(S.E.)	Exp(b)	b(S.E.)	Exp(b)
상수	1.35(1.15)	3.85	1.06(0.82)	2.89
연령	0.02(0.03)	1.02	-0.03(0.02)	0.97
학력_대학이상	0.23(0.21)	1.26	-0.14(0.16)	0.87
결혼기간	-0.17(0.04) ***	0.84	-0.08(0.03) **	0.93
거주지_농촌	0.20(0.29)	1.22	-0.14(0.21)	0.87
소득	-0.00(0.00) *	1.00	-0.00(0.00) *	1.00
직업				
고위신	-1.12(0.22) ***	0.33	-0.76(0.23) **	0.47
저위신	-1.27(0.39) **	0.28	-0.51(0.26) *	0.60
자녀필요성	0.17(0.13)	1.19	0.32(0.11) **	1.38
부부가사분담정도	-0.00(0.13)	1.00	-0.16(0.10)	0.86
다산장려찬성정도	0.04(0.11)	1.03	0.14(0.08)	1.15
사례수(df.)	815(10)		917(10)	
-2LL	705.4		989.7	
X <sup>2</sup>	89.0 ***		80.6 ***	

\* 0.01&lt;p&lt;0.05, \*\* 0.01&lt;p&lt;0.05, \*\*\* 0.001&lt;p&lt;0.01

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고졸이하(학력), 도시(거주지), 무직(직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도 전국출산동향조사』, 2008.

2007년도 출산순위별 추가 출산 이행에 대한 경제적 요인의 영향 여부와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주관적 경기 인식이 둘째아 출산 이행과 셋째아 출산 이행 각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 $p<0.05$  수준에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의 관점은 거시적인 경기에 대한 인식만이 개인의 출산 이행에 대한 의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경기 이외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녀양육비용 부담, 일-가정 양립 가능성,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등이 출산 이행 결정에 고려되고 있다. 두 번째 관점으로는 주관적으로 경기가 좋다고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원하는 추가 출생 이행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가 반드시 2007년의 한해에 고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전 자녀와의 간격, 개인의 소득수준, 주거 상황 등이 종합적으

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2007년도 추가출산 이행에 대한 경기인식의 영향 로지스틱 회귀모형

변수	첫째아→둘째아 출산 이행(모형2-1)		둘째아→셋째아 출산 이행(모형2-2)	
	b(S.E.)	Exp(b)	b(S.E.)	Exp(b)
상수	1.86(0.99)	6.42	1.79(0.67) **	5.98
연령	0.02(0.03)	1.02	-0.02(0.02)	0.99
학력_대학이상	0.23(0.21)	1.26	-0.22(0.16)	0.80
결혼기간	-0.14(0.04) ***	0.87	-0.07(0.03) **	0.93
거주지_농촌	0.24(0.29)	1.27	-0.10(0.21)	0.90
소득	-0.00(0.00) *	1.00	-0.00(0.00) **	1.00
직업				
고위신	-1.05(0.22) ***	0.35	-0.65(0.22) **	0.52
저위신	-1.22(0.37) **	0.30	-0.42(0.25)	0.66
주관적경기인식	-0.39(0.43)	0.68	-0.46(0.30)	0.63
사례수(d.f.)	815(8)		917(8)	
-2LL	743.4		1030.4	
X <sup>2</sup>	77.2 ***		59.1 ***	

\* 0.01<p<0.05, \*\* 0.01<p<0.05, \*\*\* 0.001<p<0.01

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고졸이하(학력), 도시(거주지), 무직(직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도 전국출산동향조사』, 2008.

한 자녀를 가진 부부들이 2007년에 추가 출산을 이행하는데 정책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정책모두를 동시에 포함한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둘째아 출산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정적)을 미친 정책들로는 모자건강지원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둘째아 출산을 이행한 부부들이 첫째아 출산시 모자건강과 일-가정양립 지원을 비용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케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세제지원정책과 보육·교육시설확충정책이 둘째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p<0.05 수준)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세제 혜택지원정책과 보육·교육시설확충정책의 경우 자녀양육가정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낮아, 추가 출산 이행을 결정하는데 큰 작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경우 개별모형에서와 달리 통합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타 정책(예, 보육·교육시설확충)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한자녀 가정의 추가 출산 이행에 대한 정책의 영향: 로지스틱 회귀모형

변수	모형3a-1 b(S.E.)	모형3a-2 b(S.E.)	모형3a-3 b(S.E.)	모형3a-4 b(S.E.)	모형3a-5 b(S.E.)	모형3a-6 b(S.E.)
상수	1.60(0.99)**	2.20(0.97)*	2.14(0.97)*	-0.07(1.45)	0.99(1.02)	-1.41(1.58)
연령	0.01(0.03)	0.01(0.03)	0.01(0.03)	0.08(0.05)	0.01(0.03)	0.09(0.05)
학력_대학이상	0.24(0.20)	0.22(0.20)	0.19(0.20)	0.31(0.33)	0.24(0.21)	0.33(0.34)
결혼기간	-0.15(0.04)***	-0.16(0.04)***	-0.16(0.04)***	-0.13(0.06)*	-0.13(0.04)**	-0.13(0.06)*
거주지_농촌	0.22(0.29)	0.26(0.29)	0.24(0.29)	0.34(0.37)	0.21(0.29)	0.36(0.39)
소득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직업						
고위신	-1.09(0.21)***	-1.08(0.21)***	-1.10(0.21)***	-1.91(0.34)***	-0.93(0.22)***	-1.60(0.36)***
저위신	-1.33(0.37)***	-1.24(0.36)**	-1.22(0.36)**	-1.72(0.52)**	-1.25(0.38)**	-1.72(0.55)
보육·교육비지원	0.61(0.20)**					-0.02(0.32)
세제혜택제공		-0.19(0.19)				-0.52(0.31)
보육·교육시설확충			0.06(0.20)			0.26(0.33)
일·가정양립지원				0.67(0.31)		0.66(0.33)*
모자건강지원					1.23(0.19)***	1.19(0.29)***
사례수(d.f.)	815(8)	815(8)	815(8)	815(8)	815(8)	815(12)
-2LL	754.5	762.4	763.5	354.3	721.3	332.5
X2	94.3***	85.7	84.6***	60.4***	127.5***	81.5***

\* 0.01<p<0.05, \*\* 0.01<p<0.05, \*\*\* 0.001<p<0.01

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고졸이하(학력), 도시(거주지), 무직(직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도 전국출산동향조사』, 2008.

두 자녀 가정에서 2007년도에 셋째아 출산을 이행하는데 정책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정책 모두를 동시에 포함한 통합모형의 결과 보육·교육비지원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모자건강지원정책 순으로 셋째아 출산 이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경우 개별모형에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데 비해, 통합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도나 영향력 모두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나타난다. 앞서 둘째아 출산 이행에 대한 분석 결과와 차이점은 정책 간 영향력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 자녀를 둔 여성들이 둘째아 출산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모자건강지원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보다 중요시 여겼다면, 두 자녀를 둔 여성들은 셋째아 출산 이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보육·교육비지원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제지원정책과 보육·교육시설확충정책은 셋째아 출산 이행에도 통계적( $p<0.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셋째아의 고순위 출산 이행에는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7〉 두자녀 가정의 추가 출산 이행에 대한 정책의 영향: 로지스틱 회귀모형

변수	모형3b-1 b(S.E.)	모형3b-2 b(S.E.)	모형3b-3 b(S.E.)	모형3b-4 b(S.E.)	모형3b-5 b(S.E.)	모형3b-6 b(S.E.)
상수항	0.47(0.68)	1.66(0.64)*	1.64(0.64)*	-0.17(1.64)	1.37(0.65)*	-2.24(1.81)
연령	-0.01(0.02)	-0.01(0.02)	-0.01(0.02)	0.08(0.06)	-0.02(0.02)	0.10(0.06)
학력_대학이상	-0.14(0.16)	-0.13(0.16)	-0.15(0.16)	0.28(0.30)	-0.18(0.16)	0.27(0.33)
결혼기간	-0.06(0.03)*	-0.08(0.03)**	-0.08(0.03)**	-0.11(0.05)*	-0.07(0.03)**	-0.10(0.06)
거주지_농촌	-0.10(0.21)	-0.09(0.20)	-0.08(0.20)	-0.13(0.38)	-0.15(0.20)	-0.11(0.42)
소득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직업						
고위신	-0.84(0.22)***	-0.70(0.21)**	-0.70(0.21)**	-2.32(0.36)***	-0.68(0.21)**	-2.19(0.38)***
저위신	-0.64(0.25)*	-0.55(0.25)*	-0.50(0.25)*	-1.57(0.37)***	-0.52(0.25)*	-1.63(0.41)***
보육·교육비지원	1.19(0.16)***					1.53(0.31)***
세제혜택제공		-0.21(0.15)				0.06(0.31)
보육·교육시설확충			-0.11(0.16)			-0.56(0.32)*
일-가정양립지원				1.23(0.34)***		0.84(0.38)*
모자건강지원					0.53(0.15)	0.76(0.30)
사례수(d.f.)	917(8)	917(8)	917(8)	917(8)	917(8)	917(12)
-2 LL	1005.9	1059.2	1060.9	337.3	1052.8	296.2
X2	119.0***	59.4***	57.7***	80.0***	70.6***	115.4***

\*  $0.01<p<0.05$ , \*\*  $0.01<p<0.05$ , \*\*\*  $0.001<p<0.01$

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고졸이하(학력), 도시(거주지), 무직(직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도 전국출산동향조사』, 2008.

각 자녀양육가정은 모형에 포함된 보육·교육비지원, 세제혜택제공, 보육·교육시설확충, 일-가정양립지원, 모자건강지원 등에서 반드시 하나의 정책을 수혜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어떠한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2개 이상

의 정책들을 수혜 받은 가정들도 존재할 것이다. 수혜 받은 정책들의 수에 따른 출산이행 여부의 변이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 결과, 수혜 정책 수가 많을수록 둘째아나 셋째아 출산 이행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중복적인 수혜가 아닌 한, 생애주기별로 또는 자녀양육 영역별로 정책들이 고르게 실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복수로 수혜 받을 수 있을 때 그 효과성이 더 커짐을 시사해 준다.

<표 8> 2007년 추가 출산 이행에 대한 수혜 정책수의 영향: 로지스틱 회귀모형

변수	첫째아→둘째아 출산이행(모형3c-1)		둘째아→셋째아 출산이행(모형3c-2)	
	b(S.E.)	Exp(b)	b(S.E.)	Exp(b)
상수	1.28(1.00)	3.60	0.98(0.66)	2.67
연령	0.01(0.03)	1.01	-0.02(0.02)	0.99
학력_대학이상	0.16(0.21)	1.17	-0.20(0.16)	0.82
결혼기간	-0.14(0.04) ***	0.87	-0.06(0.03) *	0.94
거주지_농촌	0.18(0.29)	1.20	-0.20(0.21)	0.82
소득	-0.00(0.00)	1.00	-0.00(0.00) *	1.00
직업				
고위신	-1.24(0.22) ***	0.29	-0.91(0.22) ***	0.40
저위신	-1.28(0.37) **	0.28	-0.67(0.25) **	0.51
정책수혜수	0.35(0.08) ***	1.41	0.32(0.07) ***	1.38
사례수(d.f.)	815(8)		917(8)	
-2LL	744.8		1041.6	
X <sup>2</sup>	104.0 ***		83.3 ***	

\* 0.01<p<0.05, \*\* 0.01<p<0.05, \*\*\* 0.001<p<0.01

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고졸이하(학력), 도시(거주지), 무직(직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도 전국출산동향조사』, 2008.

이상의 모형들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 요인별로 2007년도 추가 출산 이행에 대한 영향력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요인들 모두를 하나의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상호작용 효과를 배제한 후 각 요인의 순수한 영향력을 진단하였다(표 9). 우선 한자녀가정에서 2007년도에 둘째아 출산을 이행하는데 통계적(p<0.05)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는 정책적 요인

으로서 모자건강관리지원이 유일하고, 다른 요인들의 경우에는 통계적( $p<0.05$ )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2007년 추가 출산 이행에 대한 제 요인들의 영향 로지스틱 회귀모형

변수	첫째아→둘째아 출산이행(모형4-1)		둘째아→셋째아 출산이행(모형4-2)	
	b(S.E.)	Exp(b)	b(S.E.)	Exp(b)
상수	-2.81(1.95)	0.06	-0.42(2.15)	0.66
연령	0.15(0.06) **	1.17	0.05(0.07)	1.05
학력_대학이상	0.40(0.37)	1.49	0.07(0.36)	1.07
결혼기간	-0.17(0.07) *	0.84	-0.10(0.07)	0.91
거주지_농촌	0.19(0.41)	1.21	0.08(0.46)	1.08
소득	-0.00(0.00)	1.00	-0.00(0.00)	0.10
직업				
고위신	-1.53(0.38) ***	0.22	-2.31(0.42) ***	0.10
저위신	-1.75(0.65) **	0.18	-1.62(0.46) ***	0.20
자녀필요성	-0.00(0.21)	1.00	0.15(0.22)	1.16
부부가사분담정도	-0.02(0.17)	0.98	-0.22(0.17)	0.80
다산장려찬성정도	-0.05(0.22)	0.95	-0.01(0.22)	0.99
경기상황	-0.20(0.71)	0.82	-0.37(0.62)	0.69
보육·교육비지원	0.02(0.35)	1.02	1.75(0.36) ***	5.76
세제혜택제공	-0.58(0.33)	0.56	0.08(0.34)	1.08
보육·교육시설확충	0.20(0.36)	1.23	-0.56(0.34)	0.57
일-가정양립지원	0.69(0.36)	1.84	0.82(0.41) *	2.26
모자건강관리지원	1.25(0.31) ***	3.50	0.79(0.34) *	2.20
사례수(d.f.)	815(16)		917(16)	
-2LL	289.1		251.8	
X2	79.8 ***		116.9 ***	

+ 0.05<p<0.1, \* 0.01<p<0.05, \*\* 0.01<p<0.05, \*\*\* 0.001<p<0.01

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고졸이하(학력), 도시(거주지), 무직(직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도 전국출산동향조사』, 2008.

이러한 결과는 요인별 회귀모형의 결과와 유사하며, 다만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경우 요인별 모형의 결과와 달리 통합모형에서는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건이 허락하면 두 자녀까지 가지려는 희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가 치관(사회문화적 요인)이나 경기에 대한 주관적 인식(경제적 요인) 및 정책들 모두

둘째아 추가 출산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정책적 요인으로서 모자건강관리지원의 경우 향후 가임력을 지속시켜 준다는 점에서 첫 자녀 이후 2007년에 둘째아 출산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다른 통합모형으로서 두 자녀 가정이 2007년에 셋째아 출산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는 정책적 요인으로서 보육·교육비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모자건강관리지원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및 정책적 요인 중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요인별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추가 출산 이행에 유의미( $p<0.05$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자녀필요성의 가치관은 요인별 모형에서 통계적( $p<0.05$ )으로 유의미하였으나, 통합모형에서는 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셋째아의 고순위 출산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보다 많은 부담을 수반하므로, 가치나 인식에 비해 자녀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육·교육비지원, 모자건강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등 정책들이 개인적인 추가 출산 이행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V. 맺는말

출산력 변화는 어느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 출산은 그 자체적으로 인구학적 요인이긴 하나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회, 경제, 문화 등 제 여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출산력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진단하였다. 이들 요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호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적인 접근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7년 전국출산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인구학적 요인분해와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주로 적용하였다.

우선 인구학적으로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는 출산율 상승에 기인하며, 가임기에



성의 연령구조의 변화는 오히려 출생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도 출생아수 증가도 출산을 증가가 주도한 결과이며, 인구구조 변화는 오히려 부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임기여성의 연령구조 변화의 부적 효과는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다소 둔화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다출생한 1979~1982년생이 본격적으로 결혼을 시작한데다가 그 동안 연기되었던 결혼이 증가하여 결혼건수가 누적되었고, 이들의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이 2006년과 2007년에 본격화되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결국 2006년도 출산율 상승이 30대초 여성의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의 증가에 기인(25~29세 첫째아 출산 증가는 다소)하였다면, 2007년도 출산율 상승은 30대초 여성들로부터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대 후반 여성들로부터 결혼과 출산(첫째아)의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들 연령층(특히, 20대 후반)의 출산 증가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은 사회학적 및 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자녀필요성, 부부가사분담정도, 다산장려찬성정도)은 둘째아 출산 이행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아 출산 이행에 대해서는 자녀필요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체계가 고순위 출산에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가치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가사분담과 추가출산이행간의 부적 관계로 미루어 보아 한국사회에서 양성평등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양성평등수준을 보다 높여 출산율과의 관계를 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정연도의 미시적인 자료를 이용한 모형에서 주관적 경기 인식이 둘째아 출산 이행과 셋째아 출산 이행 각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시적 경기에 대한 인식만이 개인의 출산 이행을 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가 출산 이행에 대한 경기의 영향은 한 특정연도에 집중되기보다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거시적인 경기 변동은 개인의 추가출산 이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그 영향은 다른 관련 요인들과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특히 일정 기간에 걸쳐 관찰되어야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최근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둘째아 출산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정책들로는 정책 간 상호작용효과를 제거한 통합모형 결과 모자건강지원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순으로 나타나, 모자건강과 일-가정양립 지원이 비용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통합모형 결과 셋째아의 고순위 출산 이행에는 보육·교육비지원정책,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모자건강지원정책 순으로 영향을 미쳐,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세제혜택지원이나 보육·교육시설 확충은 자녀양육가정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낮아 적어도 단기적으로 추가 출산 이행에 큰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책 우선순위 설정 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산·육아관련 정책들의 중복수혜는 2007년 둘째자녀나 셋째이상 자녀의 출산 가능성뿐만 아니라 첫째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생애주기별 혹은 자녀양육영역별로 촘촘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모든 요인들을 동시에 포함한 모형 결과의 함의로는, 두자녀관이 여전히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 자녀가치관이나 경기 인식은 둘째아 추가 출산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나 모자건강관리지원정책은 향후 가임력을 지속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셋째아의 고순위 출산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보다 많은 부담을 수반하므로, 가치나 인식에 비해 자녀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육·교육비지원, 모자건강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등 정책들이 개인적인 추가 출산 이행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들어 정부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 수준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다출산을 지향하는 사회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2007년 출산을 증가는 자칫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정황들은 인구학적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출생의 특성을 가지는 베이비붐후세대의 결혼 및 출산이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출산력 추이에서 그들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들 세대가 둘째자녀나 그 이상의 순위로 이행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면 그 영향의 지속기간은 잠시 더 연장되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의 국제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출산수준이 급락하는 현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최근 출산력 회복 기미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에 이은 또 다른 경제위기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내지 의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번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으로 비혼과 무자녀를 당연시 여기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한국사회 홀로서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할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외부의 충격이 결혼 및 출산이라는 가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방치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경제위기 등 여건의 변화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치관이나 인식의 변화와 그 영향을 기대하기보다 정책적 노력이 더욱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정 긴축이 요구될 수 있으나, 인간의 본연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우리사회 미래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책적 보호의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상황을 계기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 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1-23, 2006.
- 김현숙·류덕현·민희철,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출산을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6.
- 보건복지가족부, 『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2008.
- 은기수 외,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고서, 2005.
- 이삼식 외,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이삼식 외,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장지연·부가칭,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교육」, 『여성연구』 제65호,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장혜경·홍승아·송치선,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 특별위원회, 2005.
- 통계청, KOSIS.
- 통계청, 『2007년 출생통계 결과(보도자료)』, 2008. 8. 6.
- Andersson, G., "A study on policies and practices in selected countries that encourage childbirth: The case of Sweden,"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WP2005-005*, 2005.
- Chesnais, J.-C., *Population History and Policy in Fra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2005, Seoul.
- Grant, J., Hoorens, S., Sivadasan, S., Loo, M., DaVanzo, J., Hale, L., Gibson, S., & Butz, W.,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options. RAND Europe, 2004.

Hoorens, S., A. Parkison, and J. Grant, "Sweden's Varying Success in Offsetting Low Fertility," 『OECD 주요국 저출산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성 및 신생아 건강문제

박정한·배지숙\*\*

### 1. 서론

우리정부는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예상되어 2006년에 출산율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개발하여 각종 출산장려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7년 황금돼지 해에 출산율이 1.26으로 일시 증가했으나 2008년에는 다시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을 비롯한 문화적 요인 등과 같이 하루아침에 돌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출산율 회복이 쉽지 않다. 서구의 여러 선진국과 이웃의 일본에서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한지가 오래되어 우리보다 먼저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펴왔으나 대체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나라는 없다(박정한 등, 2006).

출산율이 감소하고 수명은 늘어나면, 젊은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많으므로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율 회복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도 매우 중요하다. 인구의 질은 건강과 교육에 의하여 결정된다. 건강한 성인이 되려면 먼저 건강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발달해야 한다. 또 모성이 건강해야 건강한 어린이를 낳을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일어나는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산모와 신생아

---

\*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제2차 저출산대책포럼(2008년 12월 12일)에서 발표.

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나 저출산 대책에는 이 문제를 간과 하고 있다. 연자는 출산율 감소로 야기되는 모성과 어린이 건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자보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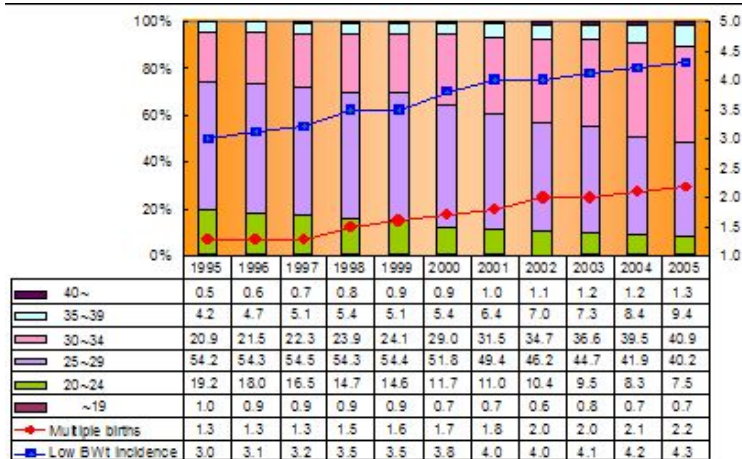
### 가. 산모의 연령 증가에 따른 신생아의 건강문제

#### (1) 저체중아 출생률 증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남·여 모두 결혼을 점점 더 늦게 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결혼을 하여도 출산을 한번 내지 두 번으로 제한하는 부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1981년에 초혼 평균 연령이 남자는 26.4세, 여자는 23.2세였는데, 2005년에는 각각 30.9세, 27.7세로 많아졌다. 따라서 출산 시 산모의 연령이 증가하여 1995년도 전체 출산아의 모성 연령이 74.4%가 30세 미만이었었는데, 2005년에는 48.4%로 떨어진 반면, 30세 이상의 산모가 25.6%에서 51.6%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출생시 체중이 2,500gm미만의 저체중아 출생률이 3.0%에서 4.3%로 증가하였고, 또한 다태아 출생률도 1.3%에서 2.2%로 증가하였다(그림 1).

출생시 체중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생아의 생존확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저체중아는 2,500gm이상의 정상 체중아에 비하여 영아사망률이 20배 이상 높고(배영민, 2003; MacDorman & Atkinson, 1999; Mathews & MacDorman, 2007), 생존하여도 성인이 되었을 때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이 발병할 확률이 더 높고(Ijzerman et al, 2005; McNeill et al, 2004; Osmond & Barker, 2000), 정신지체 등 각종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도 더 높다. 따라서 저체중아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의 질을 떨어트리는 중요한 보건문제이다.

[그림 1] 모성연령분포, 저출생체중아 및 다태아 출생률 변동추이,



자료 : 통계청www.nso.go.kr

산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와 출생시 체중과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통계청에 출생신고된 모든 단태 신생아 6,256,86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았다. 20~29세의 첫째 및 둘째 아, 25~29세의 셋째 아, 그리고 30~34세의 둘째와 셋째아의 경우는 저체중아 출산율이 전체 평균 2.9%보다 낮았다. 그 외의 연령 및 출산순위에서는 모두 2.9%보다 높았다. 따라서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성연령분포가 30~34세의 첫째 아와 35세 이상 산모의 모든 출산아의 비율이 증가하면 저체중아 출산율이 증가하게 된다.

&lt;표1&gt; 모성연령 및 출산순위별 저체중아 출산율, 단태아, 1995~2005

Maternal age	1st	2nd	3rd≤	total
~19	4.3	4.2	5.5	4.3
20~24	2.8	2.6	3.5	2.8
25~29	2.8	2.2	2.5	2.5
30~34	3.9	2.7	2.6	3.1
35~39	6.0	4.3	3.7	4.5
40~	6.3	6.2	5.5	6.0
total	3.1	2.6	3.0	2.9

자료 : 통계청www.ns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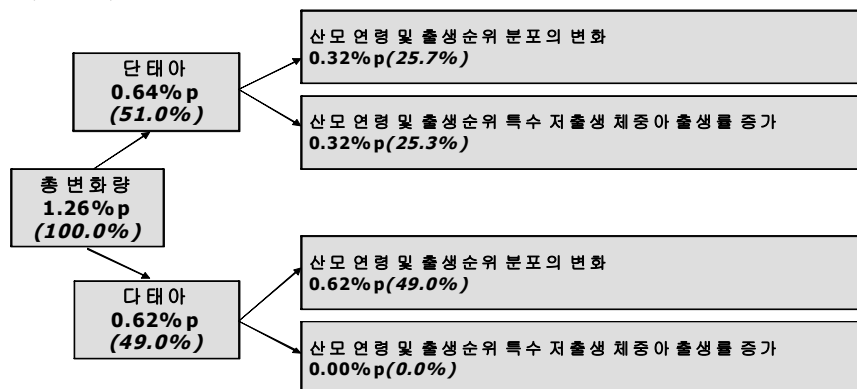
1995년도와 2005년도 사이에 모성연령 및 출산순위 분포가 표 2와 같이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가 저체중아 출산율 증가에 미친 영향을 연자가 부록에 제시한 방법으로 분석해본 결과(Park, 2007) 총 증가량 1.26% point 중 단태아 중에서 증가한 것이 0.64% point (51.0%), 다태아 중에서 증가한 것이 0.62% point (49.0%)이었다. 단태아 가운데 산모의 연령과 출산순위 분포의 변화에 의한 것이 0.32% point (25.7%), 산모연령-출산순위 특수 저체중아 출산율의 변화에 의한 것이 0.32% point (25.3%)를 차지하였다. 다태아가운데 증가한 것은 모두 산모의 연령과 출산순위 분포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즉, 저체중아 출산율 증가의 74.7%는 모성연령의 증가 및 출산순위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그림 2).

〈표 2〉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총 출생아의 모성연령 및 출산순위 분포의 변화

Maternal age(1995)	1st	2nd	3rd≤	Maternal age(2005)	1st	2nd	3rd≤
~19	0.9	0.1	0.0	~19	0.5	0.0	0.0
20~24	14.4	4.5	0.3	20~24	5.7	1.5	0.1
25~29	27.0	24.7	2.5	25~29	26.2	12.6	1.5
30~34	4.8	12.0	4.1	30~34	16.2	20.1	4.7
35~39	1.0	1.7	1.5	35~39	2.7	3.9	2.7
40~	0.2	0.1	0.2	40~	0.6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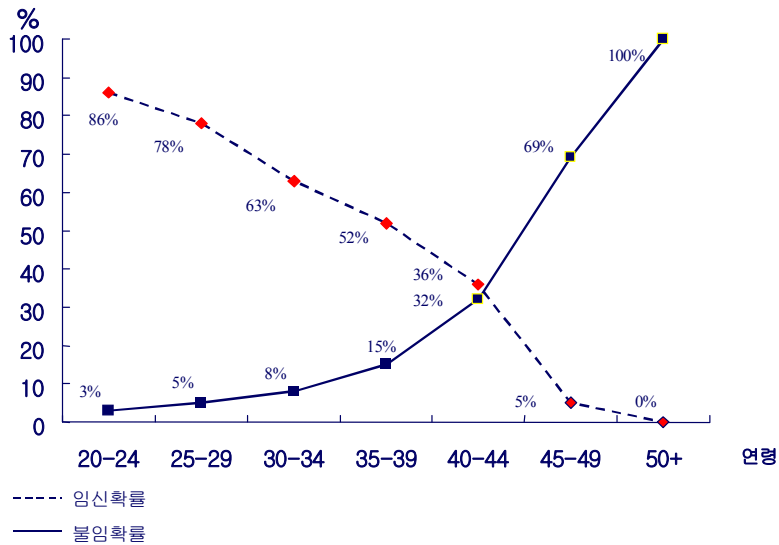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www.nso.go.kr](http://www.nso.go.kr)

[그림 2] 모성연령 및 출산순위 변화가 저체중아 출산율 증가에 미친 영향



다태아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남녀 모두 결혼연령이 많아지면 생리적으로 출산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불임증은 증가하게 된다 (그림 3). 또 모성 연령이 증가하면 자연유산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대 여성은 자연유산이 10% 정도 일어나지만 30대 후반이 되면 18%, 40대 초반에는 34%, 40대 후반에는 53%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표 3). 최근 의학의 발달로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배란 촉진제,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흔히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다태아 임신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다태아의 경우 조산 또는 태아 성장지연으로 저체중아 출산이 많아진다.

[그림 3] 여성의 연령과 수태능력(최규연, 2005에서 재인용)



자료: Management of the Infertile women by Helen A. Carcio and The Fertility Sourcebook by M. Sara Rosenthal

[표 3] 모성연령별 자연유산 발생률

산모 연령 (세)	자연유산(%)
15~19	10
20~24	10
25~29	10
30~34	12
35~39	18
40~44	34
45≤	53

자료: Reproductive potential in the older woman. Fertility and Sterility, 46:989, 1986(최규연, 2005에서 재인용)

대한산부인과학회(2007)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 시술 건수가 2000년에 15,619건, 2001년 14,667건, 2002년 18,310건, 2003년 14,667건, 2004년에 17,802건 있었다. 2004년도 체외수정의 결과를 보면 임상적 임신이 일어난 비율(냉동배아 이식술을 제외한 배아 이식주기 대비)이 32.3%이었고, 실제 출산(live birth)한 비율은 추적조사가 되지 않아 추산에 의하면 26.9% 였다.

2004년도 전국 체외수정 자료(대한산부인과학회, 2007)에 의하면 한번 체외수정 시 이식한 배아 수가 하나인 경우는 10.4%뿐이었고, 2개를 이식한 경우가 15.5%, 3개가 23.6%, 4개 28.3%, 5개 15.5%, 6개 이상이 6.6%였다. 이식 배아 수가 2개 이상 많을 경우 임신성공률이 단일 배아이식에 비하여 높았다. 경상북도에서 2006년도에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을 지원한 총 1,05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20의 결과를 보면 단일 배아이식에 비하여 다수의 배아를 이식한 경우 임신성공률이 더 높았다. 그리고 생아(live birth) 출산율은 26.7%였다(박정환과 배지숙, 2008). 그러나 경상북도의 조사에서 출산결과에 대한 무응답자가 111명 있었는데, 이들은 아마도 출산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생아 출산율은 이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4).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면 임신성공률은 높으나, 다태아 출산율이 높아 2004년도 전국 보조생식술 시술 현황조사에서는 쌍태아가 32.0%, 삼태아가 2.1%로 다태아 출산율이 총 34.1%였다. 2006년도 경상북도 불임부부의 인공수정 사업결과에서

는 쌍태아가 39.0%였으며, 쌍태아의 46.5%가 임신37주 미만의 조산이었고 62.8%가 출생시 체중이 2,500gm 미만의 저체중아였다. 단태아도 10.3%가 조산아였으며, 6.5%가 저체중아로 태어나, 우리나라 전체 단태아 중 저체중아 출산율이 2.9%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았다. 경상북도 불임부부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전체 신생아 중 저체중아의 비율은 39%로 2005년도 전국 출생아의 4.3%에 비하여 9배나 더 높았다.

〈표 4〉 이식배아수별 임상적 임신율과 생아(live birth) 출산율

이식 배아 수	2004년 전국 체외수정 (IVF & ICSI)		2006년 경북 불임부부 체외수정			
	이식 사이클 수	임상적 임신수율(%)	이식 사이클 수	임상적 임신수율(%)	생아 출산수율(%)	
1	1,370	145 (10.6)	64	8 (12.5)	5	7.8
2	2,050	549 (26.8)	138	47 (34.1)	35	25.4
3	3,120	1,106 (35.4)	213	84 (39.4)	59	27.7
4	3,746	1,410 (37.6)	167	71 (42.5)	42	25.1
5	2,054	725 (35.3)	274	122 (44.5)	90	32.8
6+	879	336 (38.2)	87	29 (33.3)	21	24.1
합계	13,219	4,271 (32.3)	943*	361 (38.3)	252	26.7

\* 무응답으로 결측치 111건이 제외되었음.

〈표 5〉 모성연령별 임상적 임신율

모성연령	2004년 전국 체외수정 (IVF & ICSI)		2006년 경북 불임부부 체외수정		
	이식 사이클 수	임상적 임신수율(%)	이식 사이클 수	임상적 임신수율(%)	생아 출산율(%)
<25	172	57 (33.1)	16	6 (37.5)	25.0
25 ~ 29	1,889	691 (36.6)	164	74 (45.1)	31.1
30 ~ 34	6,054	2,104 (34.8)	499	191 (38.3)	29.1
35 ~ 39	3,470	945 (27.2)	268	81 (30.2)	17.5
40 ≤	1,837	239 (13.0)	73	12 (16.4)	9.6
합계	13,422	4,036 (30.1)	1,020	364 (35.7)	26.7

체외수정의 임신성공률은 모성의 연령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성 연령이 25~29세에서 성공률이 제일 높고, 35세 이상이 되면 급격히 떨어진다. 생아

출산율도 마찬가지로 35세 이상이 되면 급격히 감소한다(표 5).

## (2) 선천성 이상아 출생률 증가

모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염색체 이상아 출현율이 증가한다. 다운증후군의 경우 30세 산모에게는 952명 중 1명이 출현하나, 35세에서는 378명 중 1명, 45세에서는 30명 중 1명꼴로 출현한다. 다운증후군 이외의 다른 염색체이상 출현율도 비슷한 양상으로 모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표 6).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산모의 평균 나이가 증가하여도 염색체 이상아 출생률이 비례하여 뚜렷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산전진찰 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여 태아 이상을 진단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대부분 인공유산을 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에 검사상의 오류(위양성), 또는 가벼운 이상일 때도 유산을 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 6〉 산모 연령별 염색체 이상아 출현율

모성연령(세)	다운증후군 출현률	모든 염색체 이상아 출현률
20	1/1,667	1/526
25	1/1,250	1/476
30	1/952	1/385
35	1/378	1/192
40	1/306	1/66
41	1/82	1/53
42	1/63	1/42
43	1/49	1/33
44	1/38	1/26
45	1/30	1/21
46	1/23	1/16
47	1/18	1/13
48	1/14	1/10
49	1/1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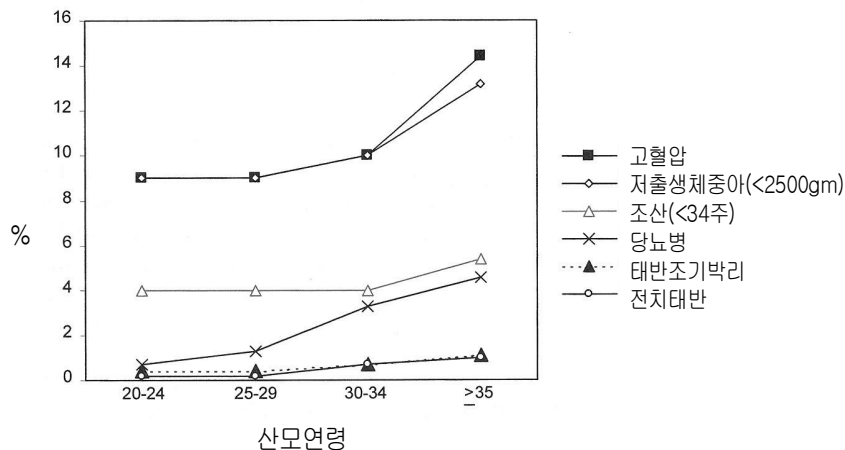
자료: Maternal fetal medicine: practice and principles 1994:71

## 나. 산모의 연령 증가에 따른 산모의 건강문제

## (1) 임신 및 분만합병증 발생률의 증가

모성의 연령이 30대 후반으로 증가하면 임신합병증과 주산기 이환율 및 사망률이 증가한다. 특히 35세 이상의 산모가 신체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저소득 계층일 경우 임신성 고혈압,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당뇨병, 조산, 저출생체중아 등의 발생률이 증가한다(그림 4).

[그림 4] 산모연령과 임신합병증 발생률과의 관계



자료: Cunningham et al., 2005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임신 또는 분만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총 1,829,223건의 자료를 이용하여 임신 및 분만합병증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았다(박정환과 배지숙, 2008). 진료비 청구자료에 진단명이 완벽하게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것이 실제 발생률보다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임신성 고혈압은 모든 임신의 약 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Cunningham et al., 2005), 본 자료에서는 1.2%로 나타나 많이 누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재 누락이 특정 연령군에 선택적으로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연령별

발생 경향은 알아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성 고혈압, 당뇨병, 전치태반은 뚜렷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태반조기박리, 분만 후 출혈, 그리고 산과적 색전증은 20세 미만의 어린나리와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에게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표 7).

본 자료에 나타난 모성연령과 임신 및 분만합병증 발생률과의 관계는 국내·외 기존 자료와 거의 같은 양상을 보여 모성연령의 증가로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로 인한 모성사망, 미숙아 출생 증가, 그리고 의료비 증가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2003~2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자료에 나타난 산모 연령별 임신 및 분만합병증 발생률

(단위: %)

모성 연령	산모수	고혈압 성장에 발생율(%)	임신 중 당뇨병 발생율(%)	전치태반	태반조기 박리(%)	분만 후 출혈(%)	산후 감염 (%)	산과적 색전증(%)
≤19	14,318	1.0	0.6	0.1	0.08	1.2	7.9	0.007
20~24	155,150	1.0	1.3	0.2	0.04	1.0	8.5	0.003
25~29	772,457	1.0	2.0	0.2	0.03	1.0	8.5	0.004
30~34	700,492	1.1	3.1	0.4	0.04	1.0	8.4	0.004
35~39	159,335	1.7	4.8	0.7	0.05	1.2	8.1	0.005
40≤	27,471	2.5	4.7	0.8	0.05	1.2	10.3	0.058
Ptrend*		<0.001	<0.001	<0.001	0.56	0.97	<0.001	<0.001
합계 (총 건수)	1,829,223	1.2 (21,038)	2.7 (48,841)	0.3 (6,240)	0.04 (680)	1.0 (18,477)	8.4 (154,056)	0.005 (91)

\* Cochran-Armitage trend test

## (2) 유방암 및 난소암 발생률의 증가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 사망률은 1988년에 여성인구 10만명당 2.4였는데, 2001년에는 5.0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진료 통계에 따르면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난소암 환자는 16.8%, 유방암 환자는 16.3% 증가하였다고 한다(한겨레, 2008). 이 암들은 모두 여성의 생식력(reproductive history)과 관계가 있다. 유방암은 출산을

안 하거나 적게 하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고 비만인 여성에게 발병위험이 증가하고, 난소암도 불임이나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비만, 그리고 유방암, 자궁 내막암, 직장암 환자의 병력을 가진 여성에게 발병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이들 암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의 감소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 산모연령-출산순위 특수 저체중아 출산율의 증가 원인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저체중아 출산율 증가량의 25.3%는 산모연령-출산순위 특수 저체중아 출산율(maternal age-parity specific low birth weight incidence)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95년도와 2005년도의 산모연령-출산순위 특수 저체중아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20세 미만군의 둘째 아와 40세 이상군의 둘째 아를 제외한 모든 연령-출산순위군의 저체중아 출산율이 2005년도에 증가하였다(표 8).

〈표 8〉 모성연령-출산순위별 저체중아 출산율, 단태아, 1995 및 2005

(N=713,380)				(N=434,120)			
Maternal age(1995)	1st(%)	2nd(%)	3rd(=)	Maternal age(2005)	1st(%)	2nd(%)	3rd(=)
~19	3.8	4.3	16.7	~19	5.8	3.8	16.7
20~24	2.6	2.4	3.0	20~24	3.5	2.7	5.1
25~29	2.6	2.0	2.1	25~29	3.1	2.3	3.6
30~34	3.8	2.6	2.4	30~34	3.8	2.8	2.9
35~39	5.4	4.0	3.3	35~39	5.8	4.1	4.2
40~	6.0	6.3	4.9	40~	6.3	5.5	6.2

통계청의 출생신고자료에서는 산모연령-출산순위 특수 저체중아 출산율이 증가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원인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있다. 첫째는 대도시의 대기 오염이 조산과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서울시에서 단태아를 출산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Ha et al., 2004)와 서울의 5개 병원에서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 코호트를 대상으로 조사(Kim et al., 2007)한 자료에서



임신 3기에 공기오염(PM10)에 노출이 조산아 출산율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출산이 대도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도시의 공기오염은 심한 것을 고려하면 대기오염이 저체중아 출산률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는 최근 우리나라의 20대와 30대 여성들의 체형이 다른 연령층의 여성에 비하여 저체중형(BMI<18.5)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여성들의 가는 몸매를 선호하는 풍조에 따라 지나치게 체중을 줄이는 사람이 있고, 또 전 연령층에서 비만이 증가하는 추세라 20대 여성 가운데도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1년과 2005년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25-29세 군과 30-34세군의 여성들 가운데 저체중형과 과체중형의 비율이 증가하였다(표 9). 모성의 체중이 저체중인 경우와 비만인 경우 모두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이 높다. 따라서 20대와 30대 초반의 여성들의 부적절한 체중관리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9〉 20-49세 성인 남·녀의 저체중(BMI≤18.5)과 과체중(25.0≤BMI) 비율, 2001, 2005

Age	Male				Female			
	Underweight		Overweight		Underweight		Overweight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20~24								
25~29	5.0	6.1	27.6	30.6	14.8	18.0	12.2	14.5
30~34		4.9		38.9		10.2		16.3
35~39	1.7	1.8	35.0	36.7	6.3	2.4	19.4	22.6
40~44		2.8		43.4		1.5		27.6
45~59	1.6	1.5	39.0	38.9	1.8	0.9	33.6	31.5

자료: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1과 2005, 보건복지부

셋째,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근로환경이 임신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 많은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직장은 백화점, 지하상가,接客업소 등 서비스업인데, 이러한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은 가정주부에 비하여 저체중아 출산율 위험이 높았다(박정환 등, 1994).

### 3.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성과 신생아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성의 연령증가 자체가 생리적으로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이 증가하고, 또 불임증이 증가하여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이용을 하게 되어 다태아 출산율이 증가한다. 다태아의 경우 조산과 태아성장지연이 많아 저체중아 출산이 증가한다.

둘째, 모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각종 선천성 염색체 이상이 출현율이 증가한다.

셋째, 모성의 연령증가하면 임신성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임신 및 분만 합병증이 증가한다.

넷째, 출산을 안 하거나 적게 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유방암과 난소암과 같은 생식과 관계가 있는 암 발생률이 증가 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한다.

#### 가. 저체중아 출산율 대책

##### (1) 적령기 출산 장려

저체중아 출산의 중요한 원인이 산모의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산모의 연령을 출산에 가장 적합한 나이, 즉 20대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의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 해도 과거 가족계획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적령기 출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20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예를 들면 1·2·3운동(결혼 후 1년 이내에 첫 임신을 하고, 2아이를 35세 이전에 갖자)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30세 이전에 아이를 낳아 2세 이상 양육한 다음 취업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취업시키거나, 취업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주택 분양권을 우선 배정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2) 불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지원정책의 재고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지원정책은 자녀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는 부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저출산 대책으로는 재고할 여지가 많다. 첫째, 인공수정으로 출산하는 경우 다태아 출산율이 너무 높고, 그 결과 저체중아 출산율이 높아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장애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다른 정책에 대한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을 하여 정책의 유지, 확산, 수정 등을 정해야 한다.

### (3) 단일배아이식의 제도화

불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약 90% 이상에서 2개 이상의 배아를 이식하고, 이로 인하여 다태아 출산율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웨덴과 같이 단일배아이식을 제도화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배아를 이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2002년에 체외수정을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단일배아이식을 제도화하였다. 그 결과 14개월 후 단일배아이식률이 25%에서 75%로 증가하였고, 다태아 임신율이 23%에서 6%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임상적임신율은 33-37%를 유지하였다(Saldeen & Sundstrom, 2005).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체외수정 시술의 질적 관리라고 한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도입과 질적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4) 고위험 신생아 관리체계 강화

우리나라의 고위험신생 집중치료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수가체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병원에서 시설투자를 하기 어렵고, 적정인력배치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다태임신부가 조산을 할 경우 고위험신생아를 받아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고, 따라서 고위험신생아가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지원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먼저 단일배아이식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와 인공수정의 질적 관리체계를 먼저

확립했어야 한다. 그리고 고위험신생아관리를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불임부부 인공수정 지원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 (5) 모유수유지원

모유수유는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산모의 유방암 발생위험 감소 등 그 장점에 대하여 이미 잘 밝혀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초부터 모유수유권장 정책을 펴왔으나 아직도 생후 6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모유수유의 성공을 위하여 출생 직후 모자동실을 실시하며 모유수유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만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모유수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니세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인정된 병원에 대하여 분만수가에 일정액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 심사소위원회: 한국 보보생식술의 현황: 2004년. 대한산부회지, 2007; 50(12):1615-1639.
- 박정한, 박순우, 이상원, 김종연: 저출산에 대한 국가별 비교 및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06. 8.
- 박정한, 배지숙: 2006년도 경상북도 불임부부 인공수정 지원사업 결과조사. 2008(미발표 자료).
- 박정한, 배지숙: 2003-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임신 또는 분만 진료비 청구 건 중 임신 및 분만합병증 발생률. 2008(미발표 자료).
- 박정한, 신유선, 이주영, 김상순 : 부모의 직업과 불량한 임신결과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20(1) : 31-53, 1994.
- 배영민: 지난 40년간 한국에서 저출생 체중아,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사망률의 변천.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최규연: 산모연령에 따른 수태능력. 제17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2005; 41-47.
- 한겨레: 2008; <http://www.hani.co.kr>
- Park JH: Effect of Declining Birth Rate on Low Birthweight Incidence in Korea. 5th PREBIC (Preterm Birth International Collaborative) Meeting, WHO, Geneva, 2007. 4.
- Cunningham FG, Leveno KJ, Bloom SL, Hauth JC, Gilstrap III LC, Wenstrom KD: Williams Obstetrics, 22nd ed. McGraw-Hill Companies, Inc., NY, 2005; 765.
- Ha EH, Lee BE, Park HS, Kim YS, Kim H, Kim YJ, Hong YC, Park EA: Prenatal exposure to PM10 and preterm birth between 1998 and 2000 in Seoul, Korea. J Prev Med Public Health, 2004; 37(4); 300-305
- Ijzerman RG, Boomsma DI, Stehouwer CD. Intrauterine environmental and genetic

influenc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birthweight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studies in twins as a means of testing the fetal origins hypothesis. *Paediatr Perinat Epidemiol.* 2005; 19 Suppl 1; 10-4.

Kim OJ, Ha EH, Kim BM, Seo JH, Park HS, Jung WJ, Lee BE, Suh YJ, Kim YJ, Lee JT, Kim H, Hong YC: PM10 and pregnancy outcomes: A hospital-based cohort study of pregnant women in Seoul. *J Occup Environ Med.* 2007; 49(12): 1394-402

MacDorman MF, Atkinson JO. Infant mortality statistics from the 1997 period linked birth/infant death data set. *Natl Vital Stat Rep.* 1999; 47(23): 1-23.

Mathews TJ, MacDorman MF. Infant mortality statistics from the 2004 period linked birth/infant death data set. *Natl Vital Stat Rep.* 2007; 55(14): 1-32.

McNeill G, Tuya C, Smith WC. The role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association between birthweight and blood pressure: evidence from meta-analysis of twin studies. *Int J Epidemiol.* 2004; 33(5): 995-1001.

Osmond C, Barker DJ. Fetal, infant, and childhood growth are predictors of coronary heart disease, diabetes, and hypertension in adult men and women. *Environ Health Perspect.* 2000; 108 Suppl 3: 545-53.

Saldeen, Sundstrom: Would legislation imposing single embryo transfer be a feasible way to reduce the rate of multiple pregnancies after IVF treatment? *Hum Reprod.* 2005; 20(1) : 4-8

## 부록

### 1. 산모의 연령과 출산순위 분포의 변화에 따른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변화량 계산과정

2005년 출생아의 산모의 연령과 출산순위 분포가 1995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출생아의 AP-dis의 변화에 의한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변화량은 1995년도 APspl를 2005년도 출생아의 AP-dis에 대입하여 2005년도의 기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구하고, 이 기대 출생률과 실제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차가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산모들의 연령-출산순위 분포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1995년의 연령-출산순위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2005년의 연령-출산순위별 산모 수로부터 2005년의 저출생체중아 기대출생률을 연령-출산순위 점수(Age-Parity Score: APS)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러한 변화량을 단태아와 다태아에 대하여 각각 구하였다. APS로부터 2005년의 저출생체중아 기대출생률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APS(= K)의 계산

$$K = \sum_{i,j} k_{ij}^* \frac{b_{ij}}{B} = \sum_{i,j} \frac{m_{ij}^*}{M^*} \frac{b_{ij}}{B} = \frac{\sum_{i,j} m_{ij}^* \frac{b_{ij}}{B}}{M^*} = \frac{\text{Expected LBWt}\% \text{ in 2005}}{\text{LBWt}\% \text{ in 1995}}$$

$$\left[ k_{ij}^* = \frac{m_{ij}^*}{M^*} = \frac{\frac{l_{ij}^*}{b_{ij}^*}}{\frac{L^*}{B^*}} \right] \begin{array}{ll} b_{ij} : \text{Age(i)-parity(j) specific births in 2005} & B : \text{Total births in 2005} \\ l_{ij} : \text{Age(i)-parity(j) specific LBWt births} & L : \text{Total LBWt births} \\ M : \text{Overall LBWt incidence rate(\%)} & m : \text{LBWt incidence rate(\%) in ij cell} \end{array}$$

\* : Data for 1995

## ② 2005년 저출생체중아 출생 기대율의 계산

$$[2005년 \text{ 저출생체중아 출생 기대율}] = APS \times [1995년 \text{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단태아와 다태아 각각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변화량 중 산모의 연령과 출산순위 분포의 변화에 기인하지 않은 부분이 연령-출산순위 특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변화량에 해당한다.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text{① } [1995년 \text{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times \text{단(다)태아 백분율} \div 100] \quad \text{㉑}$$

$$[2005년 \text{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times \text{단(다)태아 백분율} \div 100] \quad \text{㉒}$$

$$[\text{단(다)태아 중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변화량}] \quad \text{㉒}-\text{㉑}=\text{㉓}$$

※ ㉑와 ㉒는 각 연도에 있어서 단(다)태아이면서 저출생체중아의 백분율

$$\text{② } 2005년 \text{ 단(다)태아 중 저출생체중아 기대출생률} \quad \text{㉔}$$

$$(\text{㉔}=\text{㉑} \times APS)$$

$$2005년 \text{ 단(다)태아 중 저출생체중아 실제출생률} \quad \text{㉕}$$

$$AP\text{-dis의 변화에 따른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변화량} \quad \text{㉕}-\text{㉔}=\text{㉖}$$

$$\text{③ } \text{단(다)태아 중 저출생체중아의 APspI 변화량} \quad \text{㉗}$$

$$(\text{㉗}=\text{㉓}-\text{㉖})$$

$$\text{④ } \text{단(다)태아 중 각 요인의 영향력 계산}$$

$$AP\text{-dis 변화의 영향}(\%) = \text{㉖} \div \text{㉓} \times 100$$

$$APspI 변화의 영향(\%) = \text{㉗} \div \text{㉓} \times 100$$



## 여성의 임금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정호\*\*

지난 20여 년 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 데 반해 실증적 연구의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 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 수준이 출산에 주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여성의 임금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회피해야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한 출산율 자체를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출산율, 출산간격, 여성 임금

---

\*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차 저출산대책포럼(2008년 12월 12일)에서 발표.

## I. 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가파른 출산율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출산율의 감소는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최경수 2004).

출산율 감소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는 먼저 가구 내에서 여성의 상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Willis 1973). 또한 Becker and Lewis(1973)는 소득의 상승으로 인해 자녀의 양보다 질적인 수준에 대한 선호의 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영아사망율의 감소로 인한 자녀를 저장할 유인 (hoarding motive) 감소, 사회안전망의 확대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서의 자녀수요 감소, 남아선호사상의 쇠퇴 등이 제기되었다 (Schultz 1995). 한편 인구학 문헌에서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실시된 가족계획정책으로 인한 피임기구의 보급 역시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Bulatao and Lee 1983; Easterlin and Crimmins 1985).

지난 20여 년 간의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를 두고,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연구 결과는 빈약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 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출산율 감소를 이해하는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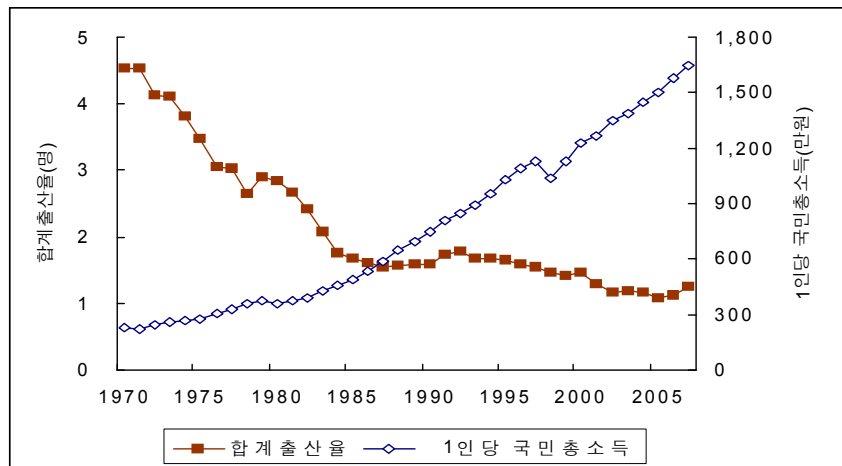
기간모형(duration model)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간격을 분석한 결과, 한계적으로 여성의 임금율이 10% 증가할 경우 두 번째 출산확률이 1.6~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임금 상승이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본 분석 결과의 해석에는 유의해야 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 수준이 출산에 주는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출산율 감소 현황 및 선행연구의 논의를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분석의 틀을 설명한다. IV장에서는 분석에 이용

된 자료의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V장은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결론을 맺는다.

## II. 출산율 감소현황 및 이론적 논의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에서 2005년도에 1.08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07년도에는 1.26명에 이르고 있다. 동일한 기간 동안 1인당 연간 국민 총소득은 225만원(2000년 기준)에서 1650만원으로 7배가 넘는 상승을 기록하였다 (그림 1 참조).

[그림 1] 합계출산율과 1인당 국민총소득의 추이 (1970-2007)



주: 1인당 국민총소득은 연간 금액이고, 2000년도 화폐가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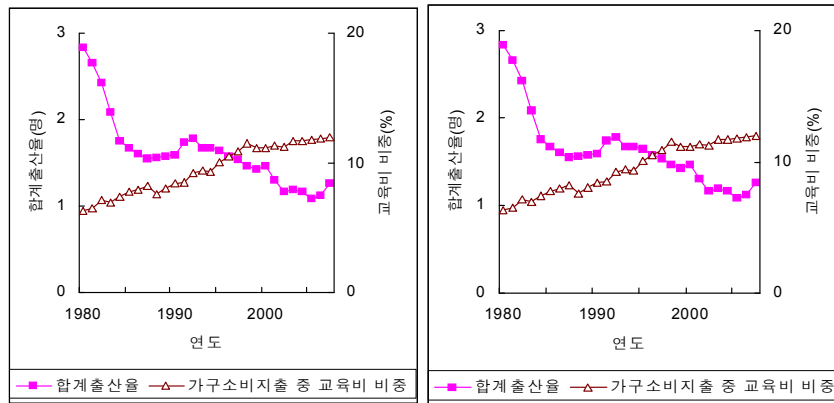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1960년대 이후의 출산율 감소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 및 인구억제정책 실시 등과 함께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교육 및 보

건 등 복지수준의 향상과 함께 출산율이 완만하지만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의 구분은 출산율을 포함한 인구변천의 단계적 구분과도 궤를 같이 한다 (김두섭 2002).\*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80년에 40.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에는 53.6%에 이르렀다. 자녀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교육비 지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상승하였다.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에 6.3%에서 상승하여 2007년에 12.0%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원칙적으로 출산율 감소의 원인 분석에는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와 자녀양육비용 상승이라는 요소를 같은 선상에서 고려해야 하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여성의 임금과 출산율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 2]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가구소비 중 교육비 비중의 추이 (1980-2007)



주: 경제활동참여율은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 김두섭(2002)은 우리나라 인구변천의 단계를 전통적 성장기(1910 이전), 초기 변천기(1910~1945), 혼란기(1945~1960), 후기 변천기(1960~1985), 재안정기(1985 이후) 등으로 구분한다.

출산은 본질적으로 규모(volume)와 시기(timing)라는 2차원 상의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의 측정치로 통용되는 합계출산율이란 일정 기간 (대개 1년 또는 5년) 동안 관찰된 연령별 가임여성의 출산율을 가중 평균한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은 가상의 여성이 일생동안 현재 관찰되는 연령별 출산율을 경험한다면 갖게 되는 총 자녀수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뿐 현재 가임기 여성이 일생동안 낳을 총 자녀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낳을 자녀수의 변동 그리고 출산 시기의 변화 모두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가져온다.

기계적으로 말하자면, 출산율의 감소는 결혼연령의 증가, 출산간격의 증가 그리고 총 자녀수의 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 측면에서의 출산율 감소현황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합계출산율이 2.83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한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30-34세 여성의 혼인비율은 97%에서 81%로 감소하였고, 동 연령대 기혼부인의 총 출생아수도 2.67명에서 1.52명으로 감소하였다. 비슷한 시기의 출산간격의 변화를 보기위해 2005년을 기준으로 40대, 30대, 20대 여성을 비교하면 기혼여성의 첫 번째 출산간격의 중위값이 22개월에서 25개월로 증가하였고, 두 번째 출산간격은 31개월에서 36개월로 증가하였다. 본고에서는 출산율의 한 측면인 출산간격을 렌즈로 사용하여 지난 26여 년 간 여성의 임금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출산율 감소 현황(1980~2005)

연 도	1980	1990	2000	2005
합계출산율(명)	2.83	1.59	1.47	1.08
30-34세 여성 중 기혼 비율(%)	97	95	89	81
30-34세 기혼부인 출생아수(명)	2.67	1.89	1.71	1.52
생년 코호트	1956-65	1966-75	1976-85	
첫 번째 출산간격(중위값, 개월)	22	22	25	
두 번째 출산간격(중위값, 개월)	31	33	36	

주: 첫 번째 출산간격은 결혼시점부터 첫 번째 출산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두 번째 출산간격은 첫 번째 출산시점부터 두 번째 출산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06년도 전국출산력조사

특히 <표 2>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유배우여성의 평균 이상 자녀수(ideal number of children)가 1980년대 이후 약 2명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출산율의 변동이 자녀수의 감소보다는 출산간격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클 수 있음을 암시한다. 물론 설문지의 이상 자녀수는 예산의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해석에 유의해야 하나,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1명만 갖고 출산을 종결해버리는 여성(birth stopper)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모든 여성이 언젠가는 두 번째 자녀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산간격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표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 자녀수 변동추이

연령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15~24세	2.1	1.8	1.8	1.8	2.0	2.1	2.1	2.2	2.2
25~29세	2.2	1.9	1.9	1.9	2.1	2.1	2.1	2.2	2.1
30~34세	2.5	2.0	2.0	2.1	2.2	2.2	2.2	2.3	2.2
35~39세	2.6	2.1	2.0	2.2	2.3	2.3	2.3	2.3	2.3
40~44세	2.9	2.2	2.1	2.3	2.3	2.3	2.3	2.3	2.3
전체	2.5	2.0	2.0	2.1	2.2	2.3	2.2	2.2	2.3

주: 1991년은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김승권(2006)에서 재인용.

이론적으로 출산에 관한 동태모형에서는 소득과 여성의 임금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Leung(1991)은 비결정적 동태모형(stochastic dynamic model)에서 소득의 증가는 출산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녀양육비용의 증가는 출산의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 Heckman and Willis(1975)와 Newman(1988)은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에 따른 효과와 함께 소득의 연령별 구조의 기울기가 높아질수록 출산의 시점이 늦어지게 됨을 추론하였다. Happel, Hill and Low (1984)는 출산으로 인한 공백이 야기하는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이 클수록 출산의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임금이 높은 여성은 자녀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고, 보다 가파른 연령별 임금 구조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출산 시 생기는 공백으로 인한 지식 및 기술의 감가상각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 시점을 늦추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로는 1976 Malaysian Family Life Survey를 이용하여 구조적 모수추정

(structural estimation)을 수행한 Wolpin(1984)이 소득의 상승이 빠른 출산으로 이어짐을 발견하였다. 축약형 모형 추정(reduced form estimation) 방식을 통해 Heckman and Walker(1990)는 1981 Swedish Fertility Survey를 이용하여 남성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 시점이 빨라지고, 여성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출산 시점을 미루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Tasiran (1995)은 1981 Swedish Fertility Survey 와 PSID를 이용하여 Heckman and Walker(1990)에서의 소득효과와 임금효과가 소득과 임금의 추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임금효과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간격이 길어짐이 발견되었다 (Newman and McCulloch 1984; Heckman, Hotz and Walker 1985; Tasiran 1995; Johnson-Hanks 2004). 국내 연구로는 김현숙 외 (2006)는 ‘2003년도 전국 출산력조사’를 이용하여 기간모형을 추정한 결과 여성의 임금 상승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출산시점을 미루는 효과를 발견하였으나 소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삼식 외 (2005)는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결혼, 각 출산으로의 이행을 결정하는 요소를 추정하여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이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고에서는, 다음 장에서 기술하듯이, 위의 두 연구의 분석이 가지는 자료상의 또는 통계학적인 결함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출산율 감소 중 여성의 임금이 설명하는 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 III. 기간모형분석

출산간격에 대한 계량경제학적인 모형을 발전시킨 Heckman and Walker(1990)를 따라 다음과 같이 출산의 과정(birth process)을 규정한다. 최초 기간( $\tau=0$ )에 한 여성이 출산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 시점은 결혼의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가임기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 최초 기간 이후에 상태의 전환(transition)이 이루어진다. 이산적인(discrete) 출산의 과정을 집합  $\{Y(\tau), \tau=0, 1, 2, \dots\}$ ,  $Y(\tau) \in \Gamma$ 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출생아 수로 구분되는 잠재적 상황이 유한하다고 가정한다 ( $\Gamma = \{0, 1, 2, \dots, C\}$ ,  $C < \infty$ ). 집합  $\Gamma$ 의 각각의 원소는 기간  $\tau$ 에 얻은 누적출

생아 수를 나타낸다. 기간  $\tau$ 에 활용 가능한 정보 집합(information set)을  $H(\tau)$ 로 표시한다.

각각의 출생아에 대한 잠재적인 출산간격을  $T_1, T_2, \dots, T_C$ 로 나타낸다. 한 여성이 기간  $\tau(j-1)$ 에  $j$ 번째 출산의 위험에 노출되면, 기간  $t_j$ 에 출산의 조건부 확률(conditional hazard)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h_{j,t_j} &= h_j(t_j | H(\tau(j-1) + t_j), \theta) \\ &= \Pr(T_j = t_j | T_j \geq t_j, H(\tau(j-1) + t_j), \theta) \end{aligned} \quad (1)$$

확률변수인  $\theta$ 는 통계학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보이지 않는 개인의 출산능력(fecundity)을 의미한다. 보이지 않는 특성인  $\theta$ 의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초기 정보인  $H(0)$ 와 무관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기간  $t_j$ 의 생존함수는 다음과 같다.

$$S_j(t_j | H(\tau(j-1) + t_j), \theta) = \prod_{t=0}^{t_j} (1 - h_{j,t}) \quad (2)$$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 출산간격을 독립적으로 추정하게 되면 일치성이 떨어지는(inconsistent) 계수를 얻게 된다. 이는  $T_j$ 의 확률밀도함수를 구성함에 있어서 개인의 이질성에 대해 필요한 분포가  $M(\theta)$ 가 아니라,  $M(\theta | H(\tau))$ 이기 때문이다. Heckman and Walker(1990)는 각각의 출산간격을 개별적으로 추정해도 일치성이 있는(consistent) 계수를 얻을 수 있는 충분조건을 제시한다. 모두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모든 여성이 언젠가는 해당 출산을 함이다(no defective distribution). 두 번째는 표본의 절단(censoring)이 존재하지 않음이다. 세 번째는 시간에 따라 정보 집합이 변하지 않음이다( $H(0) = H(\tau)$ , for all  $\tau$ ). 유배우부인의 평균 이상 자녀수 추이로 보아 모든 여성이 최소한 두 번째 자녀를 언젠가는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no defective distribution)에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으로의 이행과 첫 번째 출산이라는 이행으로 인해 표본이 선택(censoring)되고, 첫 번째 출산 이후 자녀의 성별이나 출산



간격과 같은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추정에서는 모수와 함께 개인의 이질성의 분포를 추정한다.

원칙적으로 매 출산으로의 이행 시 출산을 중단한 여성이 존재한다. Heckman and Walker(1990)는 이와 같은 출산중결자(birth stopper)의 비율을 하나의 계수로 포함하는 생존함수를 추정하였고, Heckman and Walker(1987)는 출산을 중단한 여성의 비율을 다른 설명변수의 함수로 하여 추정하였다. 보다 일반적인 틀에서 출산중결자와 매우 낮은 출산확률을 갖는 여성의 비율을 식별(identification)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출산에는 영향을 주나 출산의 종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를 구해야 한다 (Abbring 2002). 그러나 이러한 변수를 실제로 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추정에서는 모든 기혼여성이 두 번째 자녀까지는 언젠가 가진다는 가정 하에 조건부 확률을 추정한다.\*

첫 번째 출산간격과 두 번째 출산간격을 추정 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 &= \prod_{j=1}^2 \Pr(T_j = t_j)^{\delta_j} \Pr(T_j > t_j)^{(1-\delta_j)} \\
 &= \prod_{j=1}^2 \left[ h_{j,t_j} \prod_{t=1}^{t_j-1} (1 - h_{j,t_j}) \right]^{\delta_j} \left[ \prod_{t=1}^{t_j} (1 - h_{j,t_j}) \right]^{(1-\delta_j)} \quad (3)
 \end{aligned}$$

조건부 확률함수(conditional hazard)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1년을 한 기간으로 하는 로짓확률모형(logit hazard model)을 사용한다.

$$\begin{aligned}
 h_{j,t} &= h_j(t_j | H(\tau(j-1) + t_j), \theta) = \Lambda(\alpha_{j,t} + x_{j,t}' \beta_j + \theta) \\
 &= \frac{\exp(\alpha_{j,t} + x_{j,t}' \beta_j + \theta)}{1 + \exp(\alpha_{j,t} + x_{j,t}' \beta_j + \theta)}, j = 1, 2 \quad (4)
 \end{aligned}$$

\* 모든 여성이 출산을 한다는 가정을 하는 경우 출산능력으로 볼 수 있는 개인의 이질성이 매우 낮은 값을 갖는 여성을 출산중결자로 해석할 수 있음.

기간이 출산확률에 주는 효과  $\alpha_t$ 는 기간에 따른 기본위험도 (baseline hazard)를 나타내고, 계수  $x_t$ 는 다른 관찰 가능한 변수들이 출산확률에 주는 효과를 나타낸다.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성( $\theta$ )이 다른 관찰되는 변수들과 독립적(orthogonal)이라면 이질성은 오직 기간의 변화를 통해서 출산에 영향을 주게 된다 (Lancaster[1979]). 하나의 출산간격을 추정할 때 추가적으로 함수형태와 이질성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이 기간의 효과를 개인의 이질성의 효과로부터 분리해낼 수 없다. 본 분석에서는 개인의 이질성( $\theta$ )에 대해 두 가지 분포를 가정하여 추정한다. 첫 번째는 정규분포를 갖는 경우이고 ( $\theta \sim N(0, \sigma_\theta^2)$ ), 두 번째는 Heckman and Singer(1984)가 제안했듯이 분포를 단속화하여,  $\theta$ 가 가질 수 있는 값(support points),  $\{s\}$ 와 그 가중치(weight),  $\{w\}$ 를 추정한다( $\theta \in s_1, \dots, s_l, w_1 + \dots + w_l = 1$ ).

선행연구인 김현숙 외(2006)는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첫 번째 출산간격과 두 번째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을 함께 추정하여 개인의 이질성을 감안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료에 첫 번째 출산과 마지막 출산의 시점만이 존재하는 관계로 마지막 출산을 두 번째 출산으로 처리하는 강한 가정을 한 점이 본 분석과 다른 점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김현숙 외(2006)는 노동통계를 이용하여 각 연도의 연령 및 학력에 해당하는 임금과 소득을 찾아 이들이 주는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를 이용하여 임금을 추정하여 여성과 배우자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르는 임금의 예측치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삼식 외(2005)는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자료에 있는 여성의 모든 출산시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산간격을 각각 독립적으로 추정하였으나, 출산능력과 같은 개인의 이질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 IV. 실증분석 결과

### 1. 기본 자료

본 분석을 위해서 ‘2006년도 전국 출산력 조사’를 사용한다.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 피임 및 가족보건에 관한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는 1964년에 최초로

실시되었고, 1970년 이래 매 3년 마다 실시되어오고 있다. 설문대상은 가구(15~59세 기혼가구)와 개인(15~49세 기혼부인)으로 가구조사는 가구의 특성, 최근 출생아, 주거 및 경제적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개인조사는 혼인, 가족주기, 가족에 관한 가치관, 자녀양육비용 등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과 임신 출산 피임 취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 전후 관리 등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특히 이전 출산력조사와 달리 2006년도 조사는 임신력, 출산력, 피임력, 취업력을 1972년부터 월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개인 생애 주기에 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출산력 등 회고적 조사에 있어서 임금수준이나 거주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표 3〉 여성표본 (N=6,63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생년	1967	6.58	1956	1989
교육연수	12.69	2.39	0	16
결혼횟수	1.03	0.16	1	3
출산횟수	1.76	0.79	0	5
배우자 생년	1964	7.03	1937	1986
배우자 교육연수	13.35	2.48	0	16
결혼시 연령	24.45	3.41	13	48
가중치	1.02	0.12	0.63	1.70

주: 가중 평균한 값임.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16년으로 기록함.

본 분석에 이용되는 표본은 출산력 정보가 확보된 7,276 명의 기혼여성 중 설문조사 당시 배우자와 동거하고 필요한 변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 6,632명의 유배우 기혼여성이다. 표본을 구성하는 여성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설문조사 시점 기준으로 평균연령은 39세이고, 교육연수는 12.7이다. 배우자의 연령은 평균 42세로 여성보다 3세 더 많은 수준이고, 평균 교육연수는 0.7년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여성의 결혼 시 연령은 평균 24.5세이고, 출산횟수는 평균 1.76회를 기록하고 있다.

## 2. 임금추정 과정

본 연구에 이용된 주된 자료인 ‘2006년도 전국출산력조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거의 취업 이력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임금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개인별 임금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조업의 성별 연령별 평균임금을 이용한 Heckman and Walker (1990)에서 제시된 소득 및 임금효과가 견고한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역시 신뢰할 만한 임금자료 확보가 본 연구의 목적상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Walker 2002; Tasiran 2002).

본 분석에서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여 매 연도에 성별 연령별 학력별 임금을 추정하여 이를 병합하여 자료를 구축한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표본 선택(sample selection)의 문제가 존재하나 매해 근로조건을 거의 일정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임금자료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자영업자나 가족단위 경영체에서의 무보수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환경에 따른 표본 선택이 존재하지만 임금근로자의 임금으로 추정함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취업하지 않는 여성의 임금을 추정하는데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취업 선택에 따른 내생성이 존재하나, 본 분석에서는 자료부족으로 인해 구축된 임금구조가 외생적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추가적으로 본 분석에서는 Tasiran(2002)이 제기한 바와 같이 출산에 대한 임금의 내생성이 존재하나, 이 문제 역시 추후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연도별 개인의 임금을 추정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사용한다. 임금구조기본통계는 매해 추출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산업 및 직종별로 조사하는 자료이다. 연도별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1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임금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위 임금 1%, 13세 미만 또는 60세 초과 근로자, 월간 총 근로시간이 15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였다. 시간당 임금은 월간 정액급여, 초과급여 그리고 연간특별급여액의 1/12를 합한 금액을 월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연도별로 개별 근로자의 연령, 학력, 결혼여부, 사업체의 산업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임금식을 추정하였다. 여성과 남성 근로자가 연령과 학력에 대한 계수를 달리

\* 1983년 이전, 1999년 이후의 조사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의 사업체도 포함하고, 1999년 이후의 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수가 5~9인인 사업체도 포함한다.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연도별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임금수준에 대한 추정치를 1980년부터 2005년까지 합한 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실질임금을 산출하였다. 일부 연도의 추정결과와 일부 코호트(cohort)의 연도별 학력별 임금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2006년도 전국출산력조사’에 존재하는 임금근로자에 대해 위에서 추정한 2005년도 임금과 2006년도 실제 임금을 비교해 본 결과, 오차의 분포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으나, 좌우가 대칭이 되는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임금추정치가 특성별 임금차이의 변화를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reasonably) 설명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분석결과

기간모형의 시간 단위는 연(年)이고, 개별 여성이 첫 번째 출산의 위험에 노출된 연도를 하나의 관측치로 하는 표본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출산여부 변수는 한 여성이 해당 연도에 임신(conception)을 하였으면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지표함수(index function)를 말한다. 출산여부 변수의 평균이 0.08로 이는 첫 출산이 가능한 연도에 여성의 임신 비율이 8%임을 의미한다. 2006년도 출산력조사에서는 출산을 한 시점뿐만 아니라 임신한 시점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변수는 한 여성이 13세가 되는 연도부터 걸린 연수를 의미하고, 최대 36년까지 분포하고 있다. 평균 연령은 21.3세로 동일한 여성에 대해 특정연도의 교육연수가 연령에 따른 최대값(연령-7)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정하였다. 평균 교육연수와 연령은 각각 11.6년과 21.3세로 20대 초반에 첫 출산의 위험이 가장 큼을 나타낸다. 해당 연도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르는 시간당 임금은 평균 4,224원(2005년도 원)이다.

〈표 4〉 첫 번째 출산간격 여성-연도 표본(N= 71,58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출산여부 (t)	0.08	0.28	0	1
기간 (t)	8.28	4.81	1	36
연도 (t)	1990	6.42	1980	2005
연령 (t)	21.28	4.81	14	49
교육연수 (t)	11.63	2.53	0	16
임금율 (t)	4,224	2,671	1,051	22,086

주: 괄호 안의 t는 시간에 따른 변화는 변수임을 나타냄.

〈표 5〉 두 번째 출산간격 여성-연도 표본(N= 23,26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출산여부 (t)	0.20	0.40	0	1
기간 (t)	4.63	4.72	1	28
연도 (t)	1995	6.58	1980	2005
연령 (t)	29.96	5.49	17	49
교육연수 (t)	12.48	2.49	0	16
임금율 (t)	7,365	3,491	1,245	22,285
배우자 연령 (t)	33.14	5.96	15	60
배우자 교육연수 (t)	13.10	2.67	0	16
배우자 임금율 (t)	10,063	4,430	1,597	25,912
배우자 월소득 (t)	2,018,526	785,315	370,057	4,614,223
첫 출산시 연령	25.33	3.44	16	45
첫 자녀 여아 여부	0.45	0.50	0	1
첫 출산간격(년)	1.38	1.34	1	20
첫 출산시 임신기간(월)	8.97	0.28	6	10

주: 괄호 안의 t는 시간에 따른 변화는 변수임을 나타냄.

두 번째 출산의 위험을 안고 있는 연도로 구성된 표본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출산 확률(birth hazard)은 0.20이고, 관찰된 기간은 평균 4.6년이다. 평균연령이 30.0세로 첫 번째 출산간격 표본보다 약 9세 높고, 교육연수는 12.4년으로 여성 구성원 표본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두 번째 출산 간격 추정에는 새로운 정보가 활용가능하다. 먼저 배우자에 대한 정보로,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33세로 여성보다 약 3세 더 높고, 교육연수는 13.1년이다. 시간당 임금은 9,420원으로 여성

보다 43% 높은 수준을 보이고, 배우자의 월 소득은 평균 187만원 수준을 기록한다. 첫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시 연령은 평균 25.3세이고, 첫 자녀의 45%가 여아이다. 첫 출산간격은 평균 15개월(1.4년)이고, 첫 임신기간은 평균 9.0개월이다.

기간모형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 1에서는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첫 번째 출산시점과 두 번째 출산시점의 결정요인을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첫 번째 출산간격 추정에서의 기간 변수는 연령이 13세를 지난 후의 기간을 의미하여 연령 변화와 동일한 변화를 가져온다. 기간 변수들의 계수를 보면 14세 이후 출산 위험(hazard)이 점점 더 증가하다가 약 30세를 전후로 정점을 이루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여성 임금의 로그값은 음의 계수를 갖고,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유의수준 1%)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모형이 비선형식이므로 모든 설명변수의 평균값에서 측정한 한계효과는 여성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첫 출산 확률(birth hazard)이 2.5%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출산간격 추정에서는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질수록 두 번째 출산 위험(birth hazard)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출산 이후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여 출산 후 3~4년 기간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여성의 임금율은 출산율에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임금율은 출산율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추정치는 각각 유의수준 1% 레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자녀가 여아의 경우 두 번째 출산 시점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선호사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출산간격이 긴 여성일수록 두 번째 출산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eckman and Walker (1987)가 Hutterite 인구 출산력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여성의 각 출산간격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 바와 같이 이전의 출산간격이 개인의 출산능력(fecundity)의 일정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Hutterite 인구는 재세례파(再洗禮派)의 하나로 창설자 Jacob Hutter (1500-1536, 네델란드)의 믿음을 따르는 집단으로 여러 나라로 이주하면서 18~19세기에 거의 소멸되었고, 일부가 19세기 말 이후 미국의 중서부 북부지역과 캐나다에 정착하였다. 다른 인구와 접촉이 적고, 피임 노력을 하지 않아 서구에서 자연 출산율을 갖는 표본으로 알려져 있음.

〈표 6〉 여성 임금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산 시점에 주는 영향

	모형 1	모형 2	모형3
개인의 이질성 고려여부	Separate	Heterogeneity (Normal)	Heterogeneity (Finite Mixture)
종속변수: 첫 번째 출산여부			
상수항	-5.6128*** (0.2413)	-5.1858*** (0.2913)	-5.3959*** (0.3366)
기간	1.1282*** (0.0242)	1.2041*** (0.0308)	1.1095*** (0.0330)
기간 제곱	-0.0335*** (0.0009)	-0.0323*** (0.0009)	-0.0251*** (0.0013)
연도(1900년도 기점)	0.0158*** (0.0058)	0.025*** (0.0071)	0.0552*** (0.0080)
로그 임금율	-0.7082*** (0.0757)	-0.9743*** (0.0966)	-1.4871*** (0.1081)
상수항	-0.3482 (0.3135)	-1.9096*** (0.4647)	-3.6839*** (0.4901)
종속변수: 두 번째 출산여부			
첫 출산시 연령	-0.0296*** (0.0064)	0.0658*** (0.0180)	0.1187*** (0.0126)
기간	0.5874*** (0.0211)	0.7645*** (0.0315)	0.7567*** (0.0249)
기간 제곱	-0.0783*** (0.0019)	-0.0864*** (0.0022)	-0.0831*** (0.0020)
연도(1900년도 기점)	-0.0269*** (0.0060)	-0.0308*** (0.0072)	-0.0095 (0.0075)
로그 임금율	-0.1923** (0.0978)	-0.4142*** (0.1192)	-0.8769*** (0.1253)
로그 배우자 임금율	0.3906*** (0.1018)	0.5067*** (0.1230)	0.5599*** (0.1213)
첫 자녀 여아	0.2277*** (0.0336)	0.256*** (0.0404)	0.2482*** (0.0404)
첫 출산간격(연수)	-0.194*** (0.0195)	-0.2134*** (0.0209)	-0.1881*** (0.0217)
$\sigma_\theta$		0.7371*** (0.0733)	
log Likelihood	-26997.3	-26951.4	-26837.4

주: Asymptotic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Significance: '\*\*'=10%; '\*\*\*'=5%; '\*\*\*\*'=1%.

모형 3의 경우에는 개인의 이질성이 세 가지 값을 갖는 분포를 추정함.

자료: 2006년도 전국출산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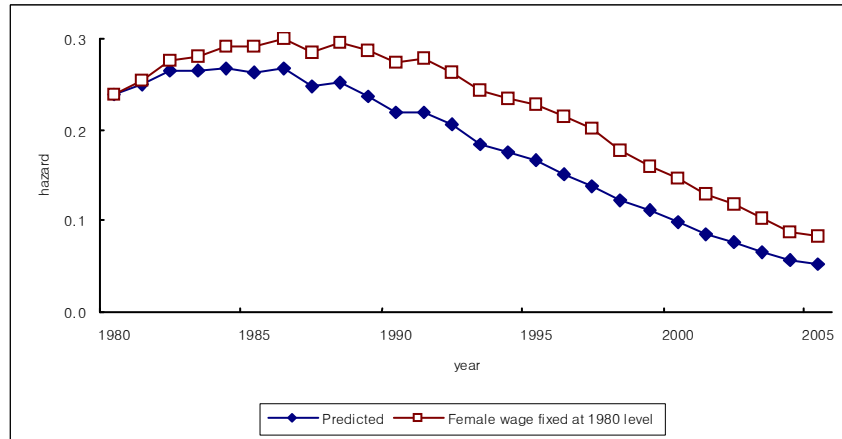


모형 2에서는 출산능력(fecundity)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첫 번째 출산간격과 두 번째 출산간격을 동시에 추정한다. 첫 번째 출산확률의 기간별 구조는 모형 1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약 32세에서 가장 높은 출산확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임금이 첫 출산확률에 주는 효과는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그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효과로 보아 여성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두 번째 출산확률이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출산확률 역시 기간별 구조는 모형 1과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여성의 임금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1에 비해 그 정도도 크고,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능력(fecundity)이 높은 여성일수록 임금이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출산능력이 높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인적자본에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임금을 역시 모형 1에 비해 출산확률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율의 한계효과로 보아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두 번째 출산확률이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임금율의 한계효과는 10% 임금상승이 두 번째 출산율을 3.2% 증가시키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첫 자녀의 성별과 첫 출산간격의 효과는 모형1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이 가지는 분포를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식으로 추정한 모형 3의 결과는 모형 2의 경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다. 여성의 임금율과 배우자의 임금율에 대한 계수의 절대값은 더 커지지만, 한계효과로 측정된 효과는 모형 2에 비해 적은 규모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율이 10% 증가할 경우 첫 번째 출산율은 0.7% 감소하고, 두 번째 출산율은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임금율이 10%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 출산율이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두 번째 출산확률의 예측치 시뮬레이션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율 감소 중 여성의 임금수준의 변화가 설명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출산간격 분석에서는 출산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두 번째 출산간격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다. 실제값에 보다 근접한 추정을 위하여 <표 2-6>의 모형 2에서 기간이 여러 구간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하여 추정하였다.\* 모든 변수의 각 연도별 평균값이 예측하는 두 번째 출산확률의 수치(predicted value)는 Figure 3의 첫 번째 곡선과 같다. 출산확률이 198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200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번에는 여성의 임금이 1980년도 평균치에서 변하지 않을 경우 출산확률 예측치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여성의 임금이 변하지 않은 경우 출산확률도 실제 임금을 이용한 경우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나 항상 높은 출산확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모형에 의해서 추정된 출산확률의 변화 중에서 여성의 임금이 1980년도 수준에서 고정됨으로써 2005년도에 나타나는 출산확률의 차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7.1%이다. 즉, 1980년부터 2005년도까지 두 번째 출산확률 감소의 17.1%를 여성의 임금 변화가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추정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 Table 4의 모형3보다 모형2의 출산율 예측치가 실제값에 더 근접하여 모형2를 기준으로 함.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본 분석의 한계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이용된 '2006년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가 이전에 활용 가능했던 자료에 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나, 과거의 임금, 거주지, 자녀 양육 여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임금효과의 해석이 제한적이다. 특히, 가구 내에서 보조적인 자녀 양육자의 존재, 보육기관의 비용 및 접근도 등 자녀 양육에 관한 비용은 여성의 임금과 함께 출산율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이해되는 만큼 추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V. 맺는말

본고는 여성의 임금과 배우자의 소득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출산간격 모형 추정 시 관찰되지 않는 출산능력이 높을수록 여성 임금수준이 낮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기간모형을 분석한 결과, 한계적으로 여성 임금의 10% 상승이 두 번째 출산율의 1.6~2.7% 감소를 가져오고, 배우자의 임금의 경우 출산율이 1.0~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예측치를 이용한 분석에서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약 17.1%를 여성의 임금상승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본 분석 결과의 해석에는 유의해야 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 수준이 출산에 주는 직·간접적인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출산율의 감소를 설명하는 모든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하였으나, 양의 소득효과와 음의 여성임금효과를 발견한 사실은 출산이 자녀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시각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경제발전 선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4년도 이후 공식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으나, 특정한 출산율 달성이 정부의 역할인

---

모형3은 연도별 예측치의 수준(level)이 개인의 이질성 분포 설정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모형3을 기준으로 분해해 본 결과, 여성 임금율의증가가 출산율 감소의 3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조병구 외 2007). 오히려 정부는 국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폭넓게 사회구성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고, 아동의 발달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함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두섭, 제2장 인구의 성장과 변천, 『한국의 인구』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편), 통계청, 2002.
- 김승권 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06.
- 김용성, 『임시·일용직 증가현상에 대한 고찰』, 한국개발연구원, 2007.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05.
- 김현숙·류덕현·민희철,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출산을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2006.
- 문형표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6.
- 민희철·우석진·김현숙·김혜원·류덕현·옥우석, 『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이삼식 외,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조병구·조윤영·김정호,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07-02, 한국개발연구원, 2007.
- 최경수, 「인구 및 고용정책」, 최경수 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I)』, 한국개발연구원, 2004.
- Abbring, Jaap H. 2002 “Stayers versus defecting movers: a note on the identification of defective duration models,” *Economics Letters*, Vol. 74, No. 3, February 2002, pp. 327-331.
- Arroyo, Cristino R., and Junsen Zhang. 1997. Dynamic Microeconomic Models of Fertility Choice: Surve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0: 23-65.
- Becker, Gary S. and H. Gregg Lewi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art 2, Mar.-Apr., pp. S279-S288, 1973.
- Easterlin, Richard A. and Eileen M. Crimmins, *The Fertility Revolution*, Chicago, the United Stat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 Happel, S. K., J. K. Hill, and S. A. Low. 1984. An Economic Analysis of the Timing of Childbirth.” *Population Studies* 38: 299-311.
- Heckman, James J. and James R. Walker,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s and Income and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Evidence from Swedish Longitudinal Data.” *Econometrica* 58, 1990, pp.1411~1441.
- , 1987. Using Goodness of Fit and Other Criteria to Choose Among Competing Duration Model: A Case Study of Hutterite Data.” In *Sociological Methodology* 18: 247-307, ed. C. Clogg. Oxford: Blackwell.
- Heckman, James. J., and Burton S. Singer. 1984. A Method for Minimizing the Impact of Distributional Assumptions in Econometric Models for Duration Data.” *Econometrica* 52: 271-320.
- Heckman, James J., and Robert Willis. 1975. Estimation of a Stochastic Model of Reproduction: An Econometric Approach.” In *Household Production and Consumption*, ed. N. Terleckyj.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ckman, James J., V. Joseph Hotz, and James R. Walker. 1985. New Evidence on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75: 179-84.
- Hotz, V. Joseph, Jacob Alex Klerman and Willis J. Robert, “The Economics of Fertility in Developed Countries.” in M. Rosenzweig and O. Stark(ed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1997, pp.275~347.
- Johnson-Hanks, Jennifer. 2004. Uncertainty and the Second Space: Modern Birth Timing and the Dilemma of Educatio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0 (4): 351-73.
- Kim, Hyun-Suk, Doek-Hyun Ryu, and Hee-Cheol Min, “Fiscal Policy for Long-term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Korea,”

-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06.
- Kwon, Tai-Hwan,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Population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7.
- Lancaster, Tony, "Econometric Methods for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Econometrica* 47, 1979, pp.939~956.
- Leung, Siu Fai, A Stochastic Dynamic Analysis of Parental Sex Preferences and Ferti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 4 (Nov., 1991), pp. 1063-1088.
- Moffitt, R., "Profiles of Fertility, Labour Supply and Wages of Married Women: A Complete Life-Cycle Model,"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1(2), 1984, pp.263~278.
- Newman, J. L., A Stochastic Dynamic Model of Fertility." *Research in Population Economics* 6: 41-68, ed. T. Schultz. 1988. Greenwich, CT: JAI Press.
- Newman, John L., and Charles E. McCulloch. 1984. A Hazard Rate Approach to the Timing of Births." *Econometrica* 52: 939-62.
- Rosenzweig, M. and K. Wolpin, "Life-Cycle Labor Supply and Fertility: Causal Inferences from Household Model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2), 1980, pp.328~348.
- Schultz, T. Paul, "Demand for Children in Low Income Countries." in M. Rosenzweig and O. Stark (ed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Amsterdam: North-Holland, 1997, pp.349~430
- Tasiran, Ali C. 1995. Fertility Dynamics: Wage and Income Effects on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i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Contribution to Economic Analysis* No. 229. Amsterdam: North-Holland.
- Tasiran, Ali C. A reply to Walker's note: A comment on Tasiran's 'Wage and income effects on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in Sweden and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15, No. 4 2002, pp 783-796.
- Walker, James R. A Comment on Ali Tasiran's 'Wage and income effects on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in Sweden and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15, No. 4, 2002, pp. 773-782.

Willis, Robert J.,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art 2, Mar.-Apr. 1973, pp.S14~S64.

Wolpin, Kenneth I., "An Estimable Dynamic Stochastic Model of Fertility and Child Mortality,"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2, No. 5, Oct. 1984, pp. 852~874.



## 부록

### 1. 임금추정과정

임금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준적인 임금식을 상정한다. 설명변수로 연령의 일차항과 이차항, 교육수준 그리고 성별을 기본식으로 하고, 교육변수는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그리고 대졸이상의 네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추가로 임금의 연령별 구조가 교육수준별로 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연령과 학력에 따른 임금구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 외에 결혼 여부, 산업별 효과, 근로자수로 측정된 사업체 규모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였다.

$$y_i = \beta_0 + M_i \left\{ \beta_{1m} Age_i + \beta_{2m} Age_i^2 + \sum_{j=1}^3 Sch_{ij} [\beta_{3mj} + \beta_{4mj} Age_i + \beta_{5mj} Age_i^2] \right\} \\ + F_i \left\{ \beta_{1f} Age_i + \beta_{2f} Age_i^2 + \sum_{j=1}^3 Sch_{ij} [\beta_{3fj} + \beta_{4fj} Age_i + \beta_{5fj} Age_i^2] \right\} + \beta_6 x_i + \varepsilon \quad (5)$$

$y$ 는 근로자  $i$ 의 시간당 임금,  $M$ 과  $F$ 는 각각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나타내는 지시함수(index function),  $Age$ 는 연령,  $Sch\_j(j=1,2,3)$ 는 세 가지 학력수준을 나타내는 지시함수 (중졸이하가 준거수준),  $x$ 는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더미, 그리고  $\epsilon$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임금식을 1980년, 1993년 그리고 2005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학력별로 연령에 따른 임금변화의 폭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연도에서 동일한 계수 추정치에 대해 남성과 여성근로자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 산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11개 산업으로 구분하였고, 사업체 규모는 근로자수가 10-29, 30-99, 100-299, 300-499, 500명 이상 등 5개 규모로 구분하였음.

났고, 연령별 임금구조도 학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추정하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임금의 예측치를 합하여 연도별 임금구조를 구축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이외의 변수들은 표본 평균에서 추정하였다. 네 종류의 출생 코호트에 대한 여성임금율의 구조는 〈표 7〉과 같다. 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나 50대 초반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의 임금이 항상 높은 구조를 보인다. 또한 높은 학력의 여성일수록 연령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근로자의 경우 임금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여성에 비해 높으나 이와 같은 임금구조의 특성을 공유한다.

〈표 7〉 임금식(wage equation) 회귀분석 결과 (일부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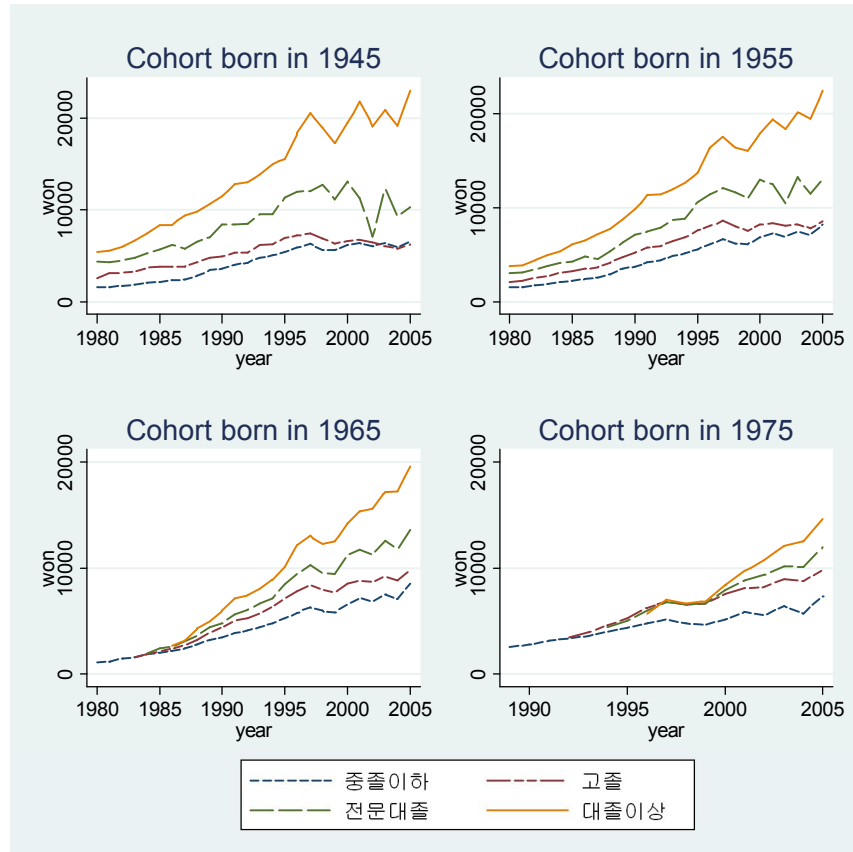
연도	1980	1993	2005
종속변수: 시간당 임금			
(남성) 연령	36.9204*** (0.6693)	206.6460*** (3.7668)	861.0737*** (25.5266)
(남성) 연령 제곱	-0.3826*** (0.0102)	-2.4320*** (0.0517)	-10.1506*** (0.3228)
(남성) 고졸	-503.5354*** (30.1202)	-4,425.0341*** (136.1271)	-5,609.5419*** (566.8313)
(남성) 고졸*연령	30.2182*** (2.0377)	224.2591*** (8.1846)	289.7076*** (31.2334)
(남성) 고졸*연령제곱	-0.2208*** (0.0325)	-2.1832*** (0.1183)	-2.8685*** (0.4058)
(남성) 전문대졸	-481.8085*** (132.4856)	-7,039.9879*** (628.8851)	-12,974.3443*** (1024.8016)
(남성) 전문대졸*연령	34.6093*** (7.9424)	333.2695*** (38.4679)	670.7878*** (59.7437)
(남성) 전문대졸*연령제곱	-0.1447 (0.1135)	-2.6208*** (0.5723)	-6.1895*** (0.8368)
(남성) 대졸이상	-2,438.8501*** (103.3444)	-14,366.2767*** (407.6584)	-24,184.9997*** (1001.3343)
(남성) 대졸이상*연령	156.6990*** (5.9246)	710.7908*** (23.0032)	1,203.4252*** (55.1625)
(남성) 대졸이상*연령제곱	-1.6137*** (0.0823)	-6.3199*** (0.3133)	-9.1703*** (0.7298)

〈표 7〉 임금식(wage equation) 회귀분석 결과 (일부 연도) (계속)

연도	1980	1993	2005
종속변수: 시간당 임금 (계속)			
(여성) 연령	32.2327*** (0.7120)	120.7948*** (3.9280)	630.8777*** (22.0775)
(여성) 연령 제곱	-0.5028*** (0.0116)	-1.4405*** (0.0529)	-7.2921*** (0.2591)
(여성) 고졸	-363.6950*** (122.4850)	-1,866.2165*** (192.4336)	8,617.0837*** (583.8792)
(여성) 고졸*연령	28.2956*** (9.2553)	150.6247*** (13.6089)	-254.7166*** (30.5831)
(여성) 고졸*연령제곱	-0.2856* (0.1668)	-1.9455*** (0.2226)	1.7662*** (0.3925)
(여성) 전문대졸	-817.6574* (458.8722)	-4,282.5115*** (593.7921)	-1467.0049 Z(918.4679)
(여성) 전문대졸*연령	62.4013** (29.1866)	273.9869*** (39.9432)	321.7677*** (56.6969)
(여성) 전문대졸*연령제곱	-0.4908 (0.4118)	-2.5552*** (0.6343)	-3.9192*** (0.8653)
(여성) 대졸이상	-1,525.4089*** (399.7386)	-8,829.9272*** (792.7377)	-8,912.5941*** (1465.7717)
(여성) 대졸이상*연령	116.1821*** (25.8746)	527.6787*** (49.0464)	660.1658*** (89.3565)
(여성) 대졸이상*연령제곱	-1.1923*** (0.3998)	-4.6511*** (0.7121)	-3.9592*** (1.3207)
결혼여부 (결혼=1)	74.7908*** (2.8240)	143.8035*** (14.5265)	862.0398*** (40.7604)
상수항	6.2113 (11.7480)	20.7919 (75.8730)	-9,085.0201*** (485.3784)
관측치수	394,951	425,405	441,442
R-squared	0.64	0.57	0.49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산업별 더미, 사업체 규모별 더미가 포함되어 있음.

[그림 4] 연도별 여성임금 추이 (일부 생년 코호트)



## 2. 출산간격 추정결과

출산 간격의 결정요인 추정 시 기간이 가져오는 효과를 보다 구간별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산시점의 결정요인 추정

	(1)	(2)	(3)
	Separate Estimation	Heterogeneity Normal	Heterogeneity Finite Mixed
종속변수: 첫 번째 출산여부			
상수항	0.4411 (0.3593)	1.0489** (0.4289)	1.946*** (0.4118)
기간 1~3	-6.194*** (0.7612)	-6.6325*** (0.7937)	-8.4081*** (0.7899)
기간 4~6	-2.2001*** (0.2719)	-2.6344*** (0.3315)	-4.3672*** (0.3496)
기간 7~9	-0.2383 (0.2578)	-0.6534** (0.3140)	-2.3285*** (0.3382)
기간 10~12	1.2099*** (0.2569)	0.8395*** (0.3016)	-0.7815** (0.3373)
기간 13~15	1.9855*** (0.2579)	1.6926*** (0.2870)	0.1607 (0.3396)
기간 16~20	1.9489*** (0.2595)	1.7615*** (0.2742)	0.5315 (0.3390)
기간 21~25	1.6177*** (0.2711)	1.5462*** (0.2746)	1.1564*** (0.3042)
연도(1900년도 기점)	0.0039 (0.0056)	0.0047 (0.0060)	0.0161** (0.0066)
로그 임금율	-0.4447*** (0.0732)	-0.4834*** (0.0788)	-0.7158*** (0.0885)
종속변수: 두 번째 출산여부			
상수항	-5.1928*** (1.0587)	-5.2197*** (1.0693)	-6.6709*** (1.0793)
첫 출산시 연령	-0.0243*** (0.0065)	-0.0036 (0.0116)	0.0226** (0.0095)
기간 1	5.1328*** (0.9912)	4.824*** (0.9933)	4.7498*** (0.9917)

〈표 8〉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산시점의 결정요인 추정 (계속)

	(1)	(2)	(3)
	Separate Estimation	Heterogeneity Normal	Heterogeneity Finite Mixed
기간 2~3	6.4251*** (0.9903)	6.1728*** (0.9911)	6.0942*** (0.9906)
기간 4~6	5.9252*** (0.9897)	5.7466*** (0.9898)	5.694*** (0.9898)
기간 7~10	4.4307*** (0.9915)	4.3059*** (0.9917)	4.29*** (0.9916)
기간 11~15	3.2278*** (1.0027)	3.1315*** (1.0032)	3.1378*** (1.0031)
연도(1900년도 기점)	-0.0251*** (0.0062)	-0.0263*** (0.0065)	-0.0168** (0.0066)
로그 임금율	-0.2113** (0.0992)	-0.2605** (0.1053)	-0.4545*** (0.1093)
로그 배우자 임금율	0.3428*** (0.1031)	0.3748*** (0.1090)	0.3733*** (0.1093)
첫 자녀 여아	0.2351*** (0.0340)	0.2433*** (0.0361)	0.2377*** (0.0363)
첫 출산간격(연수)	-0.1976*** (0.0197)	-0.202*** (0.0203)	-0.1989*** (0.0206)
$\sigma_\theta$		0.3333*** (0.0801)	
Likelihood	-26850.12	-26844.9	-26791.53

주: Asymptotic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Significance: \*\*'=10%; \*\*\*'=5%; \*\*\*\*'=1%. 모형 3의 경우에는 개인의 이질성이 두 가지 값을 갖는 분포를 추정함.  
자료: 2006년도 전국출산력조사.

## 저출산 정책 및 사업의 평가와 대안

김경신\*\*

### I.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분배, 활용이 개인의 부와 사회적 지위는 물론 지역과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사람은 지식을 창출하는 핵심체이므로,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확보가 일차적인 요건이며,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국가 사회의 명암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활성화는 각 국가의 초관심 분야가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기여한 핵심요인은, 빈약한 물질 자원을 메워 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국민 개개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인구’란 다른 여타의 국가에 비할 바 없는 매우 중요한 핵심동력이며 기초자원이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제 사회 현상들은 국가의 정책적 기조를 설정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서 출산율 하락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급기야 2005년에는 출산율이 1.08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및 인구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당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다수의 정책들이 예방과 초기 대응의 시점을 찾지 못하고 실기함으로써 큰 후유증을 불러일으킨

---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 제2차 저출산대책포럼(2008년 12월 12일)에서 발표.

것과 같이, 인구의 문제도 이미 80년대부터 경계와 관심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도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며, 동시에 시행착오 없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정부의 저출산정책 청사진을 보면, 2020년까지 IMF 이전 수준인 OECD 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1.6) 회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 면으로도 영유아 지원 10조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약 3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부정책을 비롯한 제반 대안들이 과연 출산율 상승과 사회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그 수치상의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줄 수 있을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 그동안 급격하게 변해 온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태도는 그 틀과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혁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치를 추정하고 여기에 정책적 비전을 맞추어나가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 역시 이러한 면에서의 깊은 우려를 함께 하면서, 저출산의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저출산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현실적이고 즉시적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단순히 학술적인 분석이 아닌 사유적이고 제언적인 형식의 글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 효과

### 1. 저출산 원인

저출산 원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는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불충분한 보육시설, 핵가족화 등을 주된 저출산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국가가 여성인구의 사회진출과 가족의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의 인구정책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저출산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를 해야 할 경우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등 소자녀화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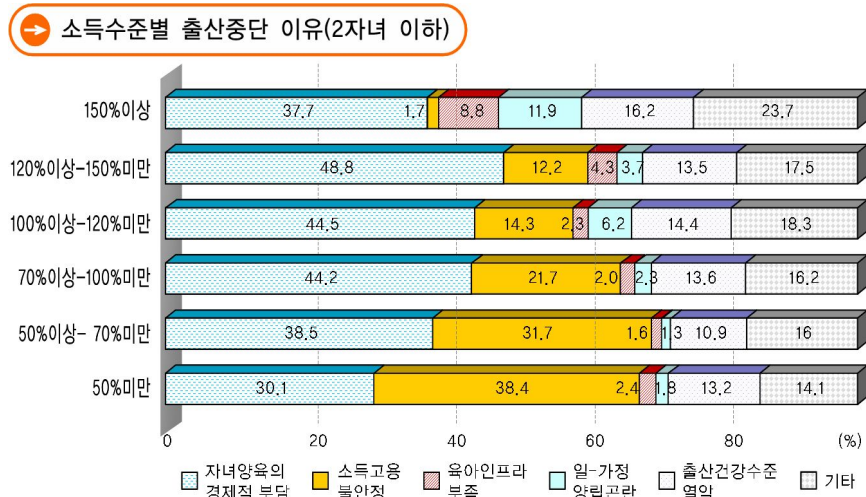
두 번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나 결혼에 대한 매력의 감소하면서 혼인율의 저하, 만혼경향, 초혼연령 상승, 결혼관의 변화 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김승권, 2002, 2003; 옥선화, 2003). 즉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되면서, 공동체적인 의무보다는 개인주의적인 행복 추구권에 가치를 두게 된 결과로서, 혼인이나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전통적 성별분업적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갈등이 저출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세 번째 저출산의 또 다른 중요 요인인 경제적인 요인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중단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05)가 실시한 가족실태 조사결과에서 출산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양육 및 교육비의 부담”이 44.4%로 나타난 결과가 이를 설명해 준다. 또한 최근 서울지역에서 한 자녀를 둔 327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한은주·박정운, 2006)를 보면, 36.4%가 ‘부부 모두 둘째출산을 원함’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비슷하게 33.3%가 ‘부부 모두 둘째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한쪽만 추가 출산을 원하는 경우’가 26.9%로, 이들은 향후 둘째 자녀를 출산할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 의사로만 본다면 이미 한 자녀를 가진 부부의 1/3 정도만이 둘째자녀를 나올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사교육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27.5%)을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취업유지에 따른 어려움’(12.82%), 3순위는 ‘자녀로 인한 개인적 시간, 활동제약(11.6%)’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즉 직접적인 경제 부담이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임과 동시에, ‘취업유지에 따른 어려움’의 경우도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보다는 일을 선택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숨어있다 하겠다. ‘자녀로 인한 개인적 시간, 활동

제약'의 경우 부모 됨의 즐거움 보다는 개인적인 즐거움과 자유를 추구하려는 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 향후 출산계획을 가진 부부들의 경우에도 그 이유로 '형제자매의 필요성'(46.2%) '주변(양가 친척 등)의 권유와 압력'(14.4%) '에 비하여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9.2%)를 선택한 비율이 낮은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조사(그림 1 참조)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이 소득 수준별 공히 출산 중단 이유로 경제적 부담, 소득불안정을 가장 많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소득수준별 출산중단 이유(2자녀 이하)



자료: 보사연,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6.(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출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 외 천혜정(2005)은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입장보다는 남녀 또는 부부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즉 우리 사회에서 특히 둘째 자녀는 부부 및 가족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부부의 연령, 결혼연령,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상황, 여성의 취업, 이상적 자녀수, 자녀관, 출산정책 인식의 차이 등이다.

## 2. 저출산 정책의 효과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출산 행위에 미치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살펴 본 유계숙(2008)의 연구에서는 저출산정책 중 불임부부 지원, 모자 건강관리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비·교육비 지원 정책은 2007년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단일정책보다는 여러 정책을 중복 수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서지원(2006) 역시 OECD 국가의 저출산 정책분석 연구를 언급하면서, 저출산은 개별적인 단일 시책의 시행보다는 다양한 가족정책, 즉 산전후 휴가·육아휴직제의 내실화, 자발적인 시간제 고용 모델 개발, 영아 보육시설의 접근성 확보, 가족수당 지급 등의 복합적 시행을 통해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2005)의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나 어린 시기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와 ‘아버지 육아휴직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2%, 7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 적정기간으로 출산휴가 7일, 육아휴직 4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만이 아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주·박정윤(2006)의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 중 자녀 출산을 한번 이상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52.3%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을 꼽았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우선분양 등 주거지원’(11.0%)이 지적되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0.1%, 보육시설 확충이 9.5%,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가 8.9%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이것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고 있고, 이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가정경제와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전적, 물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저출산 원인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저출산은 사회적 환경변화가 결혼양상을 변화시키고, 여성 사회진출의 증가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가정 양립 문제

와 연결된 경제적인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인 연구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집단의 의식은 실제 행동과 일치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의식에 대한 추적, 혹은 그 결과를 반영한 정책들이 실제 행동적인 효과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이다.

### Ⅲ. 저출산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관점과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 총체적으로 제시되었고 현재 각 단계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그것이 설정되는 근거와 사회적 맥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에 대한 관점을 재논의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재언해 보고자 한다.

#### 1. 저출산의 심각성이 제대로 인지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1983년에 출산율 2.1명으로 인구 대체수준에 들어선 이래로 1년만인 1984년에 1.76명으로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01년 1.30명, 2003년 1.19명, 2005년 1.08명으로 초저출산 상태로 진입하였다. 2007년 출산율은 1.26인데,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의하면 UN인구기금이 조사한 156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홍콩(0.9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출산율 평균(2.54명)은 물론 선진국 평균(1.6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출산율 추이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2020년 4,9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 4,235만 명, 2070년에 3,12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08%에서 2030년대 2.16%로 하락할 전망이다. 반세기 안에 국가 인구의 1/3 이상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

나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므로 우리의 향후 인구 감소 추세는 전쟁발발 수준이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러한 위기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가 증가하면서 정책적으로 지나친 위기감 조성에 대한 우려가 없진 않지만, 적어도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어야 할 필요는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발생 이유 중의 하나로 초기의 사회적 대응 지연을 지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대응체제가 국민의 피부에까지 스며들 정도로 전면적이지 않다.

이것의 단적인 예로 행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서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저출산 대응이 일어난 것은 극히 최근인 2002년도부터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감소('96년 1.58명, '97년 1.54명, '98년 1.47명)한 이후에도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만 인식되어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일본의 경우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에 이르자, 사회적 쇼크로 받아들여 199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시작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02년 국민연금 재정문제가 불거지고 2002년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발표되자 비로소 사회 이슈화 되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속 기구로 변경된 것은 정부의 통합적 저출산 정책 추진력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정부 기구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예산지원, 부처 간 협력과 통합적 정책 유도의 한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저출산 정책의 파급력을 실제로 높이기 위해서라면 최근 가시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구도, 예를 들어 성인지, 성주류화 정책 등과 같이 제도 정착의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랜 기간의 투쟁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여성운동과 같은 치열한 주인의식을 가질 것인가?

\* 한국전 당시에 북한은 인구의 28.4%인 272만여 명을 사망과 난민으로 잃었고, 남한은 160만여 명을 잃었다.

† 그 이전인 2004년 2월 9일부터 설치, 운영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자문기구임.

## 2. 저출산 대응 정책은 복지정책인가?

사회적 문제는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도 존재해 왔다. 특히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전통적으로 인간의 안전을 책임졌던 사적 제도들이 사라지면서 공적이고 형식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목적적 담론이 형성되고 이의 결과로서 행위가 일어났던 단순 사회와 비교하여,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이러한 목적적, 당위론적 개념을 상실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낱알이 행위를 들여다보고 거꾸로 원인을 유추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실기를 하기 쉽고 사회적 비용이 증폭된다.

사회복지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런 상태를 행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만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산업사회의 새로운 선택이며 과학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필요를 사회적 제도로써 해결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기본적 역할을 포기한 결과론이 되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최저생활의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의 개념보다는 사회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원, 보호해주는 ‘사회안전(social security)’의 개념 즉 사회적 인프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별적 접근, 혹은 개별 수요자적 접근으로는 문제의 근원 치료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개별 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제도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소위 집단적 사회 현상 중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저소득층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복지시스템으로 이에 대응함은 사회적 인식의 오도로 인한 정책 체감도 감소를 유발한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회문제의 대응 방식이 그러하듯이, 습관적으로 사회 문제를 소득 대비 체제적 개념이며 동시에 사회서비스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구태의연한 사회구성원들의 반응, 즉 타자적 반응을 유발할 뿐이다. 즉 정책은 항상 ‘한 번도 나에게 적용된 적이 없는’ 혹은 ‘나 이외의 타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방관자적 입장이 그것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니면 오히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를 이루는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민희철 외, 2007)는 인식의 대전환을 유도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의 의도적 행위에 대한 체감도, 혹은 국민의 주체자로서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3. 저출산 정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책은 물론 정부의 의지이긴 하나 사회 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성원의 공감대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는 간혹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의 입장과 일반 국민의 의식이 괴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사회는 일부의 리더들이 탁월한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문제발생을 예방해 나가면서 일반 국민을 이끌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이념적 행위가 개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출산 정책은 목표가 혼재되어 진행되어 왔다. 사실 출산은 여성이 주도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을 제시하기는 하나 실재적이며 궁극적인 여성의 책임이며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출산 양육 정책은 여성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의 예측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은 사실상 여성의 신체적 굴레 - 임신, 출산을 어떻게 벗어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완벽한 여성의 독립은 개인화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사회적 순기능 개념과 갈등을 빚게 된다.

혹자는 여성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완벽한 대안과 보상이 가능할 때만이 저출산 문제가 극복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기에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보육은 그러한 의미에서 순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보상이지 여성의 신체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육은 여성의 전통적 의무를 사회적 제도로 대행해주려는 것이지 여성의 신체적 기여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것은 또한 사회적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공동체적 위무이다. 다만 그 의무는 여성만의 것이 아니고 남성 혹은 모든 공동체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출산을 유도하는 보육의 질을 어디까지 확보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보육 개념은 철저한 교육열에 의해 유도된 교육 개념과 혼동되어 있어 무한한 질적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4. 저출산 정책은 사회 제 현상과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선진국 복지의 특성 중 하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일대 일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문제는 중복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 폭력 등 행동 통제가 불가능해지거나 일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기혼자의 경우 가족해체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문제별로 개별적 접근을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매우 커지게 된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야기하는 제 사회 현상을 유발하는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통합적 정책 개념이다. 저출산 현상은 개인복지 차원 혹은 개별 사회문제 차원에서 대응하면 해결되기 어려우며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된다. 범국가적 사회 인프라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실현은 최근의 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제 사회 영역과 모두 연결되는 사회 인프라이며 동시에 기초 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림 2] 출산율과 이혼율의 변화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 문제와의 관련도 예외적일 수 없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 바, 가족의 불안정성이 저출산과 맥을 같이 함을 자명한 사실이다. [그림 2]는 이혼율과 출산율이 1970년 이래로 반비례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 이후 설사 재혼을 한다 하여도 손상된 자아존중감 등은 사회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는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시기적으로 출산율 변화는 이혼율에 후행할 것 같지만, 이혼 전 같은 시기에 이미 출산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추이는 연도별로 꽤를 같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변 요인들의 탐색과 접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율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출산율은 산업적 특성, 국토의 균형발전과도 연관되어 있다. 즉 인구구조상 동질적 연령층 특히 결혼의 *matching*이 가능한 남녀 연령층이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국토의 균형적 산업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표 1〉 지역별·연령별 여성 독신가구비율 비교(2005, 2007)

	A/B(%)	A/C(%)	A/D(%)	B/D(%)	A/E(%)	조혼인율 (2007)	출산율 (2007)
서울	47.4	24.8	5.1	10.7	82.9	7.5	1.06
부산	25.7	15.0	2.8	11.0	82.8	6.0	1.02
인천	34.5	17.0	2.9	8.5	59.5	6.9	1.25
대구	24.9	17.6	3.2	10.4	77.5	5.9	1.13
대전	44.9	22.9	4.7	10.5	75.6	6.6	1.26
광주	36.9	19.8	3.8	10.2	70.4	6.3	1.27
울산	31.6	15.0	2.6	8.1	50.8	6.9	1.40

\* A: 20-39세 여성독신가구수, B: 총 여성독신가구수, C: 총 독신가구수  
D: 총 일반가구수, E : 20-39세 남성독신가구수

〈표 1〉은 전국 대도시의 여성독신가구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39세 독신여성 비율은 서울, 대전, 광주의 순으로 높고, 부산, 대구는 고연령층 여성 독신가구 비율이 비교적 높다. 울산과 인천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독신여성가구 비율이 낮고, 조혼인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지역이 산업체가 많아 결혼 적령기 남성이 많이 몰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울산은 출생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결혼의 matching에 있어서 수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이 결혼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혼인 적령기 인구 구조를 독신 가구 비율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제반 조건들이나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과 정책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 등도 이러한 인구 구조 형태와 연관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대응 노력의 기본은 좀 더 거시적이고 통합적이 될 필요가 있다. 보육은 보육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각기 뿔뿔이 주무부처의 대응 논리에 의하여 시행된다면 보육시스템의 발전, 교육대안의 확충, 여성취업문제 해결 등 각각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출산율은 크게 제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 고용, 건강, 주거, 환경 등 기초적인 제반 사회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은 즉각적인 연계나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도 사회적 인프라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안정감을 높여 주어야 한다. 주택정책, 실업대책 등은 실제적으로도 저출산과 긴밀히 연결되고 빠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은 좀 더 큰 그림부터 점검되어야 한다.

##### 5. 저출산 정책은 한국적 정서에 맞는 것인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는 일시적이며 일회적인 문제들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회적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적 패러다임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제 문제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사슬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슬의 구조를 차단하거나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문제는 점점 그 강도가 더해가며 다양화될 것이다. 근대화 초기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사회해체문제, 이탈문제가 발생한다. 소득분배, 노동문제, 농촌문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양산하며 이는 즉각 인구문제, 환경문제, 가족해체 등과 연결되며 범죄, 비행 등 일탈적 사회

병리와 연결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더욱더 개인주의화되며 긴장하게 된다.

우리 사회가 전통으로부터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조망해볼 때, 유교에 근거한 사회윤리는 근대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위상을 재정립하지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근대화가 전통에 토대를 둔 내생적 변화와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구적 근대 양식의 급속한 이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김만홍, 1999). 따라서 이러한 혼재된 변화 양상은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부적응을 양산하였다.

한국사회는 1970년대 소위 억압적 군사정권의 대가로 고질적인 가난의 병폐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물질적인 풍요가 자율성을 통제하는 이러한 형식의 합리화는 이후에 우리 사회의 삶의 저변에 흐르는 하나의 기류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때의 정부 주도적 경제정책은 행정 관료와 기술관료 계층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증대시켰다. 자녀양육관에 주된 영향을 미쳐온 학벌주의, 계급주의, 치열한 입시제도 등은 이러한 흐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이러한 대중문화의 양적, 질적 확대는 가속화되어 대중문화가 과소비를 낳는 상업화의 도구로 더욱 부각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 정치적 유희책으로 내놓은 통행금지해제, 교복자율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등 일련의 개방화 정책은 국민생활의 선택권을 증가시킨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음주문화의 확산, 강력범죄의 증가 등 부수적인 사회문제들을 야기시켰다. 신세대적 자유주의 사고의 등장으로 세대관계가 단절되고 가족윤리의 전수가 어려워진 계기도 바로 이러한 전략적 개방화 정책이 실시된 것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분야 위주의 산업구조 조정은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더욱 심화시켰고, 사회적 부의 불평등은 국민의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다. 근면 성실이라는 윤리규범보다는 한탕주의, 기회주의 등 비합리적인 사고와 의식을 조장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제도적인 완충 장치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70년대 후반 소위 마이카 시대 이후에 출생한 현재의 출산주력세대(30세 전후)는 정보화세대이며 동시에 탈냉전시대의 차세대들이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종식으로 비롯되는 세계화의 기류는 각종 금기에 간혀있던 다양한 욕구들을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무한경

쟁의 글로벌시대에 한국적인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현상의 서구화는 이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완충 장치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동시에 정신적인 변화 속도가 지체됨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과 물질문화의 괴리, 세대 간 격차 등이 개인과 가족과 사회 내의 상호소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인 국가 주도의 근대화 과정과 급속한 상업화는 결국 자발적 공공 영역의 형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본주의적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나 공동체 윤리는 보이지 못한 것이다. 가족주의마저도 시민사회의 공공성과는 결합하지 못한 채 배타적, 이기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의 젊은 세대는 너무 일찍 저출산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고유의 사회적 배경을 논의하지 않고 출산 정책, 개인의 책임, 여성과 환경의 변화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재 체제는 오히려 출산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최근 저출산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의 기초는 외국의 정책인 경우가 많으며 외국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공병호(2002)는 일본의 엔젤 플랜, 신엔젤 플랜과 같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한국 실정에 적절한 보육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출산 정책이 일본과 유사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저출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문화적 배경, 국가의 경제 규모, 정치형태, 사회 복지체계 등이 다른 서구 선진국의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체구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극약 처방의 성격으로 직접 지원을 실시한 저출산 정책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고액의 통합수당\*을 감안한다면 우리 처지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과연 얼마를 주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내기 위한 임계점인가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 출산 전 출산보너스(800유로), 소득 및 자산조사에 기초한 고정수당(3세까지 4,120유로), 보육지원 및 부모휴직지원(매월 340유로) 등

스웨덴 역시 경제적 지원에 민감하여, 불황기에는 여성의 실직 증가와 국가의 급여 감축 등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호황기에는 출산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스웨덴의 출산율 유지 요인은 양성평등에 기반하여 출산·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공보육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한 점도 중요하지만, 미혼모,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부모의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복지를 사회가 책임지는 완벽한 복지 제도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일시적인 저출산대책이 아니라 통합적인 복지정책이 완벽하게 실시됨으로써 가변적이고 단편적인 변인이 발생하여도 이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들은 겉으로는 서구화된 듯 하나 내적으로 전통적 양식에 머물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의식과 행위의 심각한 괴리는 종종 정책입안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의 성장 역사가 그러하듯이 서구적인 정책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한국의 고유한 내적 질서와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 임계점을 설정해주는 것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보육의 질이 아무리 공고화된다 하여도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조부모와 같은 대리모에게 더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의 설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IV. 맺는말

인구구조의 변화는 일단 시작하면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고 그 즉각적 영향을 실제 개개인이 빠른 시간 안에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과거의 역사적, 문화적 바탕을 검토하고,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며 미래에 대한 식견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하는 중다역할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출산 정책의 실천적 함의를 담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1. 막연한 기대 불식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 분석한 차경욱(2005)은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하고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67.5%가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 이상이라고 답하여 출산장려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 관련 기관과 정책입안자들이 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외부환경 및 조건을 개선해 주면 추가적인 출산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는 최근 시작한 일은 아니나,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듯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의식이 어느 정도의 고강도 정책으로 실제 행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이제는 마지노선까지의 의식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의 회귀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대안은 ‘사회적 공감대 기대’와 같은 막연한 추상적 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국가의 정책적 위기에서 국민의 정서에 호소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효의식’에 기댄 노인부양문제 해결책 모색이 그러하였듯이, 이제는 국민의 자생적 해결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국가의 정책적 대안을 전제로 국민적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양적 치유보다는 국민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려는 의지와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은 개인 귀책론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정책들은 출산기피를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귀책 시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개인 귀책 혹은 개인 비난은 사회적 염오를 가중시킬 뿐이다. 이러한 관점이 일시적으로는 사회의 책임을 회색시키는 역할을 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은 개인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윤리와 책임이라는 사회적 명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인이 저출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회적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맹목적인 타율적 기준에 의하여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

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사회적 보상에 의해 사회적 행위의 선택이 일어난다든지, 삶의 조건을 물질적 우위로 판단하고 이를 다른 모든 가치 판단의 잣대로 삼는 다든지, 개인의 행복에 대한 판단을 주관적으로 행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또한 미래세대의 삶의 조건을 전수해주어야 할 우리의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 2. 정책의 우선순위 확보

앞서 저출산 정책의 조직체계 상의 아쉬움을 언급했지만 부처 간 사업 및 예산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금의 백화점식 정책 대안들은 규모의 경제학으로 무장된 다른 정책과의 예산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가시성과 정치적 대중성이 높은 정책 부문에 비해 힘을 결집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 정책부서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 역시 어느 면에서는 추진 체계상 장애가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확신이 매우 어려운 부문이기는 하나, 이제는 정책 추진의 체계와 선호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점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저출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장애라 할 것이다.

사실 저출산 정책은 보육정책 등과 연계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육의 예산 투여로 인하여 나머지 사업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대상의 사업마저 지자체들에 의해 저출산정책 사업으로 포장되면서\* 오히려 순수한 저출산 정책의 순위나 비중이 모호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만 5세아 무상보육의 실시’, ‘취약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시설의 책임강조’ 등을 통하여 사회의 보육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기혼부부들로 하여금 자녀출산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드웨어가 아닌 체감도 높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 최근 인구정책경진대회 사업 테마들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들의 저출산 사업 중에서 미혼자국 제결혼지원,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다문화가정교육상담사업, 외국인가정 돌보미사업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수당, 직장탁아)의 경우에도 실제로 기혼여성이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만 있지 그 실행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정책의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재원조달의 가능성이나 실현성은 차치하고라도 정책의 실효성이 있다는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의 사후대응적 논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대로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복지제도의 형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사회적 인프라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지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저출산은 국민 누구나 당면한 과제이며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므로, 양극화 해소나 단순한 '투입과 산출'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여진다.

### 3. 전문조직, 전문가 양성

정책의 입안과 운용은 정부 부처의 책임과 소관이라 하나, 저출산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중대사라는 점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저출산 정책은 그 당위성이나 시급성 혹은 정책적 전문성이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분야로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전문인들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공고화된 협력 조직 혹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사회변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조망 등이 전제되어 장단기 계획들이 보다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예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복잡한 다중 변수들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으므로, 단순한 정책수행자의 판단보다는 전담기구들의 전문가들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와 추적 작업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가능하다면 이러한 전담기구는 기존의 부처 속에 묻혀있는 것보다는 통합적이면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도적인 수월성을 드러내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정책 개발 측면 이외에도 정책의 현장 적용의 수월성도 지적될 수 있겠다. 사회복지사에서 건강가정사, 각종 도우미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 영역에서 점조직화 형태로 전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활동 영역 확보와 전문 조직, 전문가 활용은 매우 수동적인 형편이다. 물론 기존 조직 영역에서의 중복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문제의 중요도에 비추어 본다면 90년대 이전의 가족계획사업처럼 보다 국민의 주변에 파고 들어가는 적극적인 활동 조직이 필요하다.

#### 4. 섬세한 소규모 사업들

최근 들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별 저출산 정책들을 보면 직접적 지원 형식도 있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 옹기종기 감동을 주는 경우를 보게 된다. 큰 범위의 정책들이 앞서 길을 터가면서 섬세한 소규모 사업들이 뒤따라갈 때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여성정책, 가족정책, 교육정책 등이 각각 연결되어 진행되어 가는 중에 특히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에 일종의 tip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 출산한 취업여성 고용율에 따라 기업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연금 혹은 조세, 기타 기업부담금 감면 등의 탄력적 지원을 행한다.
- 부부가 아동양육에 공동 참여할 경우(남성양육휴가 등을 신청 시) 아동 성장기에 보육기관 및 공공 교육시설의 우선 선택권을 부여한다.
- 출산한 여성의 재고용센터 운영이나 창업지원을 위한 별도의 펀드를 운영하되, 이러한 펀드는 소수자녀가정의 투자나 사교육 수요자의 직간접세 등을 활용한다.
- 대학입시에서 일정 정원을 다자녀가정에 대한 특별전형 인원으로 배정하도록 한다.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농어촌, 실업계학생 선발처럼 정원의 선발제도 운용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각종 학교에서도 장학금, 학생포상, 선발제도 운용에 있어 다자녀가정 우대 제도를 실시하도록 지원, 평가한다.

\* 최근 인구정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강진군의 경우 총 20개 저출산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다자녀가정 양육, 교육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우선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방과 후 학교 확대’라는 단순한 복지구도로는 저출산정책으로서의 체감도를 높이지 못한다. 질적인 수준을 담보로 한 다자녀가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나 별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출산 정책 관련 사업들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특히 중앙정부의 사업지원 의지가 아무리 강하여도 matching fund나 조직 확대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시책은 심사숙고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겠다. 특히 수혜자는 공통적으로 우리 국민이며 동시에 지역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 5. 사회문화운동으로 승화

저출산의 정책적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한정된 예산으로 혹은 물적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출산은 아직 정서적으로는 개인의 희망과 책임의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의식 전환 운동이 필요하다. 정책부서의 홍보나 유도 사업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문화운동이 그것이다. 여성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 사회 각층에서 사회적 제약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개인이 스스로 참여하는 행위가 일어나듯이, 출산문화운동도 우리 스스로의 몫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났을 때 비로소 실천적 empowerment가 형성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운동이란 바람직한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새로운 긍정적 준거(positive reference)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의식을 저해하는 도구주의적 문화, 이기주의·경쟁주의, 성장주의·물질주의 등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다. 가치혼란이나 가치부재를 극복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윤리의 창출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인정하는 평등과 참여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의 정착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발적 행위, 사회문화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

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운동단체가 결성되고 자발적 참여 확대와 의식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 6. 사회구조의 전환에 대응

저출산사회를 고출산사회로 전환하기에는 이미 사회 구조의 고착화나 의식 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어 쉽사리 이루기 어려우므로, 한국 사회의 노동 구조나 경제 정책을 저출산 사회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데 무게 중심을 더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국가 비용으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없는 한국사회의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사회구조의 대전환에 대한 새로운 시도요 제언으로 귀기울여볼 필요도 있겠다.

다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출산력 향상의 기초를 포기한다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정책별 효율성 평가를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국민 행동에 대한 예측력과 탄력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포괄적 분석과 접근을 통해 저출산정책의 피드백과 민감도를 강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공병호(2002). 일본의 저출산율에 대한 정책고찰. 한국여성교양학회지, 9, pp. 35-54.
- 김만흠(1999). 전화기의 한국정치와 지역사회. 「참여시대 지방의 발견」.금문서적.
- 김승권(2003).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집, pp. 49-73.
- 김승권 외(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정책보고 2002-4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희철 외(2007). 저출산 극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서지원(2006).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방향. 한국가족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여성가족부(2005). 2005 전국가족실태조사보고서.
- 옥선화(2003). 20·30대 기혼남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지각수준과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집, pp. 27-46.
- 유계숙(2008).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7년 출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포스터 발표 논문.
- 이삼식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차경옥(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8.
- 천혜정(2005).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5-34.
- 한은주·박정윤(2006).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 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권 11호, 1-12.

## The 2008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Singapore's Response to Ultra-Low Fertility

Paulin Straughan<sup>\*\*</sup>

---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폴 국립대학교 교수)

\*\* 제2차 저출산대책포럼(2008년 12월 12일)에서 발표.

# The 2008 Marriage & Parenthood Package

## *Singapore's Response to Ultra-Low Fertility*

A/P Paulin Straughan  
Department of Sociolog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

## Overview

- A Brief History of Singapore's Pro-Family Policies
- Healthy environment yields healthy birth rate?
- Government family policies – Do they Work?
- Social & cultural barriers to fertility

2

## Singapore Family Policies: Independence - 1999

YEAR	TFR	State's Response
1965	4.7	Population Control
1980	1.82	Continuation of population control
1987	1.62	First major introduction of pro-natalist policies

3

## Singapore Family Policies: 2000 - 2008

YEAR	TFR	STATE'S RESPONSE
2000	1.60	Introduction of "Baby Bonus" and
2004	1.25	Enhanced Pro-Family Policies
2005	1.25	
2006	1.26	
2007	1.29	
2008	NA	New Marriage & Parenthood Package

4

## 2008 Marriage & Parenthood Package

- Multi-dimensional
  - Encourage marriage
  - Promote large families
  - Work life balance

[www.family.gov.sg/MnP](http://www.family.gov.sg/MnP)

5

## Courtship & Marriage

- Role of state as match-maker
  - Merger of Social Development Unit (SDU) & Social Development Service (SdS)
  - SDU Accreditation Council
  - Growing private dating industry
- Facilitate home ownership
  - Housing grant for HDB flats

6



## Promote Procreation

- Medisave Maternity Package
  - pre-delivery + delivery medical expense
  - Assisted conception procedures
- Co-funding of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 Third Child Priority Scheme

7

## Raising Children

- Tax benefits
  - Working Mother's Child Relief
  - Grandparent Caregiver Relief
  - Parenthood Tax Rebate
- Baby Bonus Scheme
  - Cash gift + co-savings component
- Centre-based Childcare
  - Enhance quality, affordability & accessibility
- Concession on Foreign Maid Levy

8

## Work-Life Balance

- 16-week paid maternity leave
- Paid child care leave (6 days per child under 7 years)
- Unpaid infant care leave
- 4-week paid adoption leave
- Work-life Works! (WoW!) Fund

9

## Messages within Family Policies

- Procreation within legal marital unions
- Promote large families – three or more children privileged
- Encourage women to remain in the labour force
- Incentives
  - Tax benefits
  - Housing grants & priority allocation schemes
  - Child care options & leave benefits

10

## Government Policies – *Will they work?*

- Do pro-family policies address root cause of ultra-low fertility?

11

## Macro Factors & TFR

- Multiple regression model predicting TFR using percentage growth in economy,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 TFR correlated positively with economic growth + negatively with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 Adjusted R-square = 56.3%

12

## Awareness of 2004 Pro-Family Government Policies

- 39% Yes, I have read up on them
- 37.1% Yes, I heard about them but do not know the details
- 23.9% No, I have not seen the announcements

(n=1510)

13

## 2004 Pro-Family Policies

- 23.9% not aware of policies – concentrated among those with no children or 1 child
- Those with 3 or more children more likely to believe that pro-family policies will help increase the TFR
- Evidence suggests that pro-family policies may encourage those with 1 child to have more children, but not those with no children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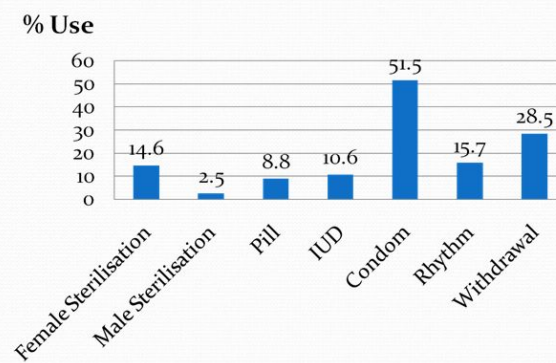
## Surveying Individuals – Feedback from Married Women

- Why survey women?

15

## Who Makes Fertility Decisions?

- 53.8% actively avoiding pregnancy



16



## Surveying Individuals – Feedback from Married Women

- 26% indicated positive effect of new pro-family policies on personal fertility decision
- Logistic model to predict likelihood to have child in future
- Nagelkerke R-square = 0.631
- Prediction performance of model = 90% accuracy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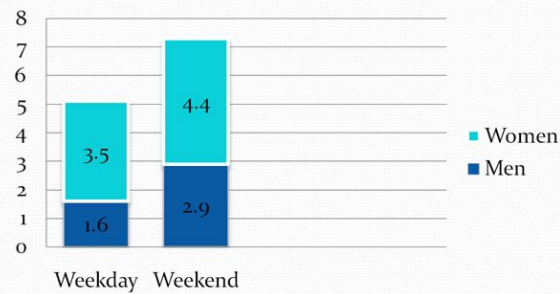
## Who is Likely to Have Child?

- ✓ Do not embrace intensive mothering
- ✓ Childrearing as extrinsic returns
- ✓ Higher marital satisfaction
- ✓ Worked full-time
- ✓ Had fewer children
- ✓ Younger
- ✓ Not Chines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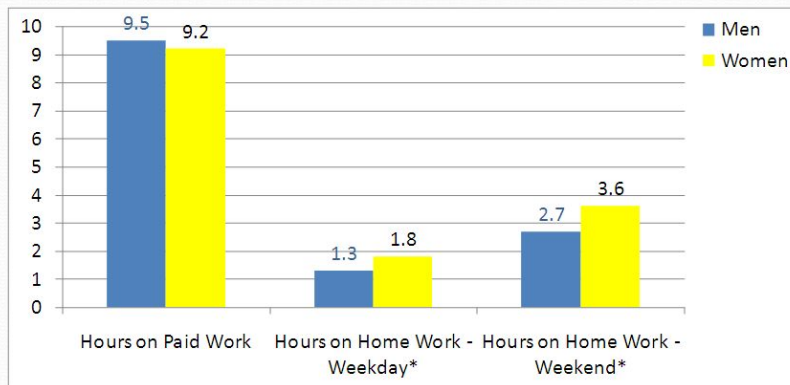
## The Practice of Family

Average Hours Spent on Domestic Work



19

## Doing Family – Doing Work



20

## The Practice of Family

		MALE	FEMALE
HOME CARE	Self*	2.2	3.4
	Spouse*	2.9	1.9
	Shared*	2.6	2.2
CHILD CARE	Self*	0.7	3.3
	Spouse*	2.6	0.5
	Shared*	3.3	2.9

11 Home Care Items  
10 Child Care Items

21

## In the Dual-Income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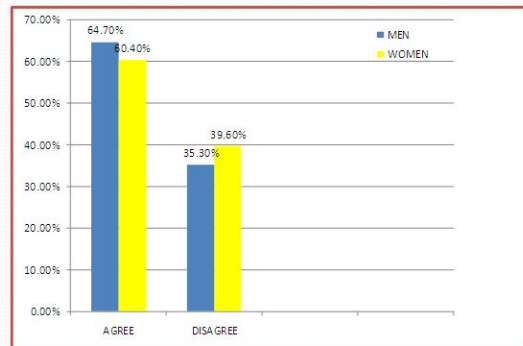
	Gender	Mean (Domestic Items)
• home care by self*	Male	2.2752
	Female	2.9049
• homecare by spouse*	Male	2.2936
	Female	1.8804
• home care shared*	Male	2.8104
	Female	2.4076
• childcare by self*	Male	.7584
	Female	2.8016
• childcare by spouse*	Male	1.8624
	Female	.4674
• childcare shared	Male	3.1713
	Female	2.9076

22



## Ideologies of the Family

- It is better for the husband to be the breadwinner and the wife to be the homemaker



23

## Men's Roles – Cultural Shift in Expectations of Fatherhood

	% Agree
A good mother must be on-call 24 hours a day	53.5
The mother is the best caregiver	87.3
Fathers and mothers are equally important as caregivers	98
If a child behaves badly, it is usually the mother's fault	7.6
A good mother puts her child's needs above her own	84.2*
As long as a man is able to provide financially for his children, he is a good father	30.5*

24

## Moving Ahead

- Identify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 Insights from the study:
  - Gender roles differentiation – costs to women higher than to men
    - How to avoid a gender-bias?
  - Work-Family Interface
    - How to achieve a better work-life balance?